

2016 남북통합지수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CONTENTS |

IPUS 1 남북통합지수 총괄 및 전망

1. 2016년 남북통합지수 총괄 | 09
2. 영역별 요약 | 12
 - 가. 경제 | 12
 - 나. 정치 | 15
 - 다. 사회문화 | 19
3. 남북통합지수로 본 2016년 한반도: 평가와 전망 | 21
 - 가. 북한문제 해결의 복합적 길을 찾자 | 23
 - 나. 근본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다 | 24
 - 다. 평화와 공존의 질서 구축이 중요하다 | 25
 - 라. 교류협력 제로(0) 시대, 다시 시작하자 | 26

IPUS 2 2016년 남북통합지수

1장 구조통합지수 | 31

1. 경제 | 31
 - 가. 지수구성 | 31
 - 나. 제도통합지수 | 32
 - 다. 관계통합지수 | 37
 - 라. 종합 | 53

- 2. 정치 | 61
 - 가. 지수구성 | 61
 - 나. 제도통합지수 | 62
 - 다. 관계통합지수 | 69
 - 라. 종합 | 93
- 3. 사회문화 | 96
 - 가. 지수구성 | 96
 - 나. 제도통합지수 | 97
 - 다. 관계통합지수 | 105
 - 라. 종합 | 123

--- 2장 의식통합지수 | 127

- 1. 지수구성 | 127
- 2. 영역별 지수 130
 - 가. 경제 | 130
 - 나. 정치 | 140
 - 다. 사회문화 | 151
- 3. 종합 | 163

--- 3장 남북통합지수: 2008~2015 | 167

| CONTENTS <표> |

<표 2-1> 경제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31
<표 2-2> 경제분야 법제도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34
<표 2-3> 제도통합지수 종합	36
<표 2-4> 교역부문 상대점수	40
<표 2-5> 투자부문 상대점수(UN 명목소득 기준)	42
<표 2-6> 노동부문 상대점수	45
<표 2-7> 무역자유화 부문 상대점수	47
<표 2-8> 제도장치 확립부문 상대점수	49
<표 2-9> 소득수준 수렴부문 상대점수(UN 명목소득 기준)	51
<표 2-10> 2014년/2015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53
<표 2-11>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UN 명목소득 기준)	54
<표 2-12> 투자부문 상대점수(구매력 평가소득 기준)	57
<표 2-13> 소득수준 수렴부문 상대점수(구매력 평가소득 기준)	58
<표 2-14>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구매력 평가소득 기준)	59
<표 2-15> 정치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61
<표 2-16> 정치영역 제도적 통합의 지표와 배점	63
<표 2-17> 북한 정치관련 법제화 정도	65
<표 2-18> 북한 정치관련 법제의 실효성 정도	66
<표 2-19>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	67
<표 2-20> 정치영역 제도통합지수 종합	68
<표 2-21> 실무정치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70
<표 2-22> 고위급 정치회담 연도별 횟수 및 점수	71
<표 2-23> 군사분야 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73
<표 2-24> 의회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74
<표 2-25>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관련 점수	75
<표 2-26> 정치분야 공동행사	75
<표 2-27>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동 부문 점수	77
<표 2-28> 대화·회담의 정례화 수준 평가 방법(2010년 수정)	78
<표 2-29> 대화·회담의 정례화 부문 점수	78
<표 2-30> 국제사회에서 외교군사적 협력 횟수 및 점수	79
<표 2-31> 남북한의 연도별 병력 수 및 병력감축 수준 부문 점수	81
<표 2-32>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 배점(2010년 신설)	83
<표 2-33>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점수	84
<표 2-34> 2015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내용	86
<표 2-35> 상호체제인정 정도(법 개정)	89

〈표 2-36〉 남북한의 상호체제인정 부문 점수 90
〈표 2-37〉 2014년/2015년 정치영역 관계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92
〈표 2-38〉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 93
〈표 2-39〉 사회문화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96
〈표 2-40〉 사회문화영역 제도적 통합의 지표와 배점 98
〈표 2-41〉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법제화 정도 101
〈표 2-42〉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법제화 전문가 설문조사 연도별 추이 101
〈표 2-43〉 북한의 사회문화 자유화 법제의 실효성 102
〈표 2-44〉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 103
〈표 2-45〉 사회문화영역 제도통합지수 종합 104
〈표 2-46〉 사회문화영역 관계적 통합 지표와 배점 106
〈표 2-47〉 인적왕래 변인 상대점수 107
〈표 2-48〉 공동행사 변인 상대점수 110
〈표 2-49〉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변인 상대점수 112
〈표 2-50〉 이산가족 상봉 변인 상대점수 113
〈표 2-51〉 인적 이동 자유화 변인 상대점수 115
〈표 2-52〉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 지표와 배점 117
〈표 2-53〉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 점수 117
〈표 2-54〉 주요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변인 상대점수 119
〈표 2-55〉 사회문화 교류협력 당국자 회담 상대점수 121
〈표 2-56〉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변인 종합점수 122
〈표 2-57〉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 124
〈표 2-58〉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25
〈표 2-59〉 2015년 사회문화 구조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126
〈표 3-1〉 의식통합지수 변인과 배점 128
〈표 3-2〉 경제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130
〈표 3-3〉 통일이 남한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31
〈표 3-4〉 남한 주민의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평가 132
〈표 3-5〉 대북 지원의 선호 정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33
〈표 3-6〉 북한체제 평가와 시장경제 우호도 응답률과 상대점수 134
〈표 3-7〉 대북 지원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36
〈표 3-8〉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응답률과 상대점수 137
〈표 3-9〉 경제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139
〈표 3-10〉 정치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140
〈표 3-1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41
〈표 3-12〉 남북 정치제도의 동질성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42
〈표 3-13〉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43
〈표 3-14〉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응답률과 상대점수 144

〈표 3-15〉 상대방 인지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46
〈표 3-16〉 정치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149
〈표 3-17〉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151
〈표 3-18〉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응답률과 상대점수	152
〈표 3-19〉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응답률과 상대점수	154
〈표 3-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응답률과 상대점수	156
〈표 3-21〉 남북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응답률과 상대점수	157
〈표 3-22〉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 응답률과 상대점수	159
〈표 3-23〉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 종합	161
〈표 3-24〉 남북의식통합지수 연도별 변화	165
〈표 4-1〉 2015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68
〈표 4-2〉 2014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68
〈표 4-3〉 2013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69
〈표 4-4〉 2012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69
〈표 4-5〉 2011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69
〈표 4-6〉 2010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70
〈표 4-7〉 2009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70
〈표 4-8〉 2008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70
〈표 4-9〉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시계열적 추이와 단계 변화	174

| CONTENTS <그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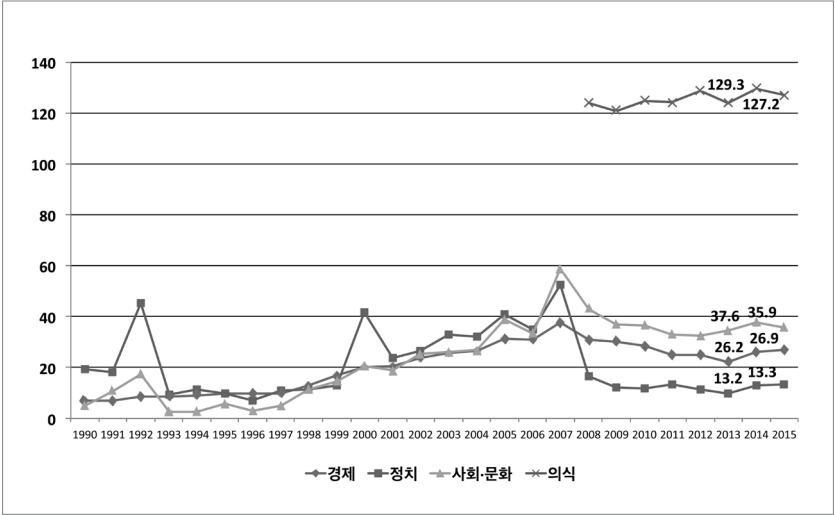
〈그림 1-1〉 영역별 남북통합지수 추이	09
〈그림 1-2〉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2
〈그림 1-3〉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6
〈그림 1-4〉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9
〈그림 2-1〉 북한 무역 총액과 무역 개방도 추이	39
〈그림 2-2〉 개성공단 고용 북한노동자와 생산액 추이	44
〈그림 2-3〉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56
〈그림 2-4〉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95
〈그림 2-5〉 사회문화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26
〈그림 3-1〉 의식통합지수 2008~2015년 변화 추이	166
〈그림 4-1〉 2009~2015년 구조통합지수(제도통합지수+관계통합지수) 비교	172
〈그림 4-2〉 2009~2015년 종합지수(구조통합지수+의식통합지수) 비교	173
〈그림 4-3〉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75

남북통합지수 총괄 및 전망

1. 2016년 남북통합지수 총괄
2. 영역별 요약
3. 남북통합지수로 본 2016년 한반도: 평가와 전망

1. 2016년 남북통합지수 총괄

〈그림 1-1〉 영역별 남북통합지수 추이



■ 2016년 남북통합지수는 다음과 같이 요약가능하다.

첫째, 2015년 구조통합지수는 76.1점으로 전년대비 1.0점 하락하였다. 이는 지난 6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4년 10.2점 상승하여 반등에 성공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2008년 이후 8년간 구조통합지수는 2008년 90.6점 → 2009년 79.4점 → 2010년 76.6점 → 2011년 71.4점 → 2012년 68.8점 → 2013년 66.9점 → 2014년 77.1점 → 2015년 76.1점을 나타냈다. 제도적 통합수준은 전년에 비해 경제와 정치, 사회문화 세 영역 모두에서 소폭 하락하면서 전체적

으로 2.2점 하락하였다. 연도별 제도통합지수는 2008년 27.2점 → 2009년 29.8점 → 2010년 28.4점 → 2011년 28.5점 → 2012년 27.1점 → 2013년 28.4점 → 2014년 30.5점 → 2015년 28.3점을 나타냈다. 관계적 통합수준은 전년에 비해 사회문화 영역에서 감소하였으나 경제와 정치영역에서 증가하면서 1.2점 상승하였다. 연도별 관계통합지수는 2008년 63.3점 → 2009년 49.6점 → 2010년 48.2점 → 2011년 42.9점 → 2012년 41.7점 → 2013년 38.5점 → 2014년 46.6점 → 2015년 47.8점을 나타냈다.

둘째, 영역별 통합단계를 보면, 2013년 0단계까지 떨어졌던 정치영역의 통합단계가 2014년 1단계로 회복된 뒤 그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경제 영역과 사회문화 영역의 통합 단계는 2009년에 3단계에서 2단계로 하락한 이후 7년 연속 2단계에 머물러 있다.

셋째, 의식통합지수는 127.2점으로 전년대비 2.1점 감소했다. 8년간의 의식통합지수는 2008년 123.7점 → 2009년 120.5점 → 2010년 124.8점 → 2011년 123.7점 → 2012년 128.8점 → 2013년 124점 → 2014년 129.3점 → 2015년 127.2점으로 매년 등락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120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수 값은 남북한 주민의 의식통합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동시에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반응하여 등락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2015년에는 DMZ 지뢰 폭발과 대북방송 재개 등으로 인해 고조된 정치군사적 긴장이 남북회담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형성된 유화 분위기를 상쇄함으로써 의식통합지수가 전년대비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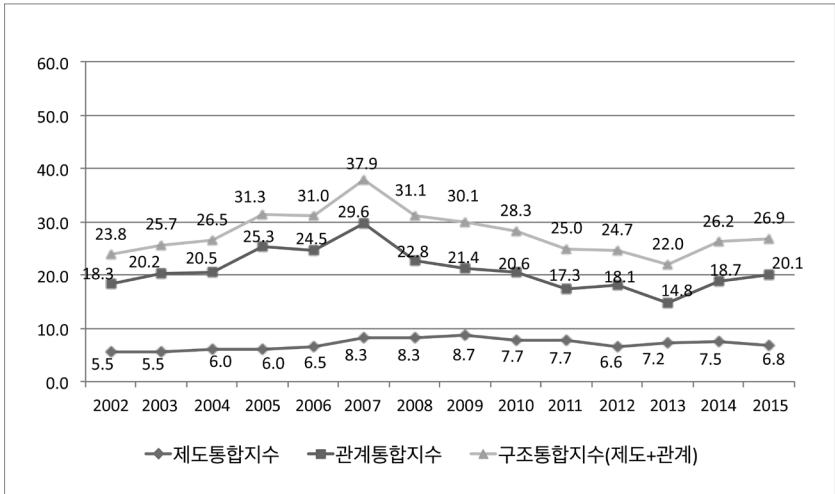
넷째, 구조통합과 의식통합을 합친 종합지수는 203.3점으로 2014년보다 3.1점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0년 5.24조치 시행 이듬해인 2011년 190점대로 하락했다가 2014년 200점대를 회복한 이후 200점대를 유지하였다. 8년간의 종합지수는 2008년 214.2점 → 2009년 199.9점 → 2010년 201.4점 → 2011년 195.6점 → 2012년 197.6점 → 2013년 190.8점 → 2014년 206.4점 → 2015년 203.3점으로 나타났다. 종합지수의 하락은 구조통합(-1.0)보다 의식통합(-2.1)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다섯째, 종합지수를 기초로 한 2015년 남북한의 통합률은 20.3% 수준이다. 이는 2014년 20.6%보다 0.03% 하락한 것이지만, 2014년 이후 20.0%대는 유지되고 있다. 연도별 통합률은 2008년 21.4% → 2009년 20.0% → 2010년 20.1% → 2011년 19.5% → 2012년 19.8% → 2013년 19.1% → 2014년 20.6% → 2015년 20.3%였다. 영역별로 남북한 통합률을 살펴보면 경제영역에서는 전년과 동일한 21.1%였고 정치영역에서는 전년보다 0.4% 하락한 14.9%였고 사회문화영역에서는 전년보다 0.6% 하락한 24.8%였다. 2008년 이후 남북통합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경제영역의 경우 2008년 22.1% → 2009년 21.6% → 2010년 20.9% → 2011년 20.2% → 2012년 20.4% → 2013년 19.1% → 2014년 21.1% → 2015년 21.1%였다. 정치영역의 경우 2008년 17.4% → 2009년 15.8% → 2010년 14.5% → 2011년 14.7% → 2012년 14.9% → 2013년 14.1% → 2014년 15.3% → 2015년 14.9%로 2014년 15%대로 상승했으나 다시 14%대로 내려갔다. 사회문화영역의 경우 2008년 24.7% → 2009년 22.5% → 2010년 24.9% → 2011년 23.5% → 2012년 23.8% → 2013년 23.9% → 2014년 25.4% → 2015년 24.8%였다.

2. 영역별 요약

가. 경제

〈그림 1-2〉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2015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전년대비 0.6점 상승한 26.9점을 기록하였고, 이는 통합단계로는 2단계에 해당하는해당하는 수치이다.¹

○ 2015년에는 △정부부문 대북투자관련 지출 감소, △남북한 경제분야 공동법제화 수준이 지수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개성공단 생산량

1 2015년의 구조 통합지수 상승분은 약 0.63점이나 각 해의 지수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 결과, 2014년에는 26.2점, 2015년에는 26.9점을 기록하였다.

증가에 따른 남북교역 비중 증가 및 △개성공단 노동자 수 증가가 지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따라서 통합단계는 전년과 동일한 2단계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며, 그 비중이 높은 단계’를 의미하며, 3단계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태이다.

- 2015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2008년 이후 6년 연속 하락 추세를 띠고 비교적 큰 폭(4.2점)으로 반등한 2014년의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구체적으로 2015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에 영향을 미친 변화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승요인〉

-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의 지속적인 증가와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 감소에 따라 남북교역의 비중이 증가하여 교역부문 점수가 1.5점 상승하였고, 남한기업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 수가 실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동부문 점수가 0.1점 상승하여 이들이 전반적인 경제부문 구조점수의 상승 요인이 되었다.

〈하락요인〉

- 정부부문 대북 투자관련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투자부문 점수가 0.3점 하락하였다. 또한, 북한의 일부 개방화 및 시장화를 향한 법, 제도가 외화 획득이나 대외 선전 목적의 사업으로 이어지는 데 머무르는 등 경제분야의 법제도화 면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음에 따라 남북 경제분야 공동 법제화 부문 점수가 0.7점 하락하여 이 두 가지 요인이 경제부문 구조점수의 하락 요인이 되었다.

■ 2016년의 경제영역의 구조통합지수는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5년 경제 분야의 구조 통합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은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량이 증가하고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축소되면서 남북교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어진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해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남북 교역의 명맥이 끊어졌으며, 미 의회의 북한제재 이행법 통과, UN의 결의안 채택 등 국제 사회의 제재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남북한의 경제 교류가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핵 포기,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극적인 남북 관계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2016년의 구조통합 지수는 2015년에 비해 대폭 하락하여 1단계 이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남북 간 경제영역의 통합정도가 1990년대 후반 이전의 상태로 후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제영역의 의식통합지수는 2010년 40.6점 → 2011년 41.5점 → 2012년 42.5점 → 2013년 40.8점 → 2014년 43.4점 → 2015년 43.4점으로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등락의 폭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15년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제분야 남한주민의 의식조사 상대점수는 2014년 17.0점 → 2015년 17.6점으로 0.6점이 상승하였다. 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인도적 지원 및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한 긴장 해소를 기대하는 여론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북한주민(탈북자)의 의식조사 상대점수는 2014년 26.4점 → 2015년 25.0점으로 전년대비 1.4점 하락하였다. 특히,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 항목과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항목에서 긍정 응답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이는 급격한 동북아 정세 변화로 인해 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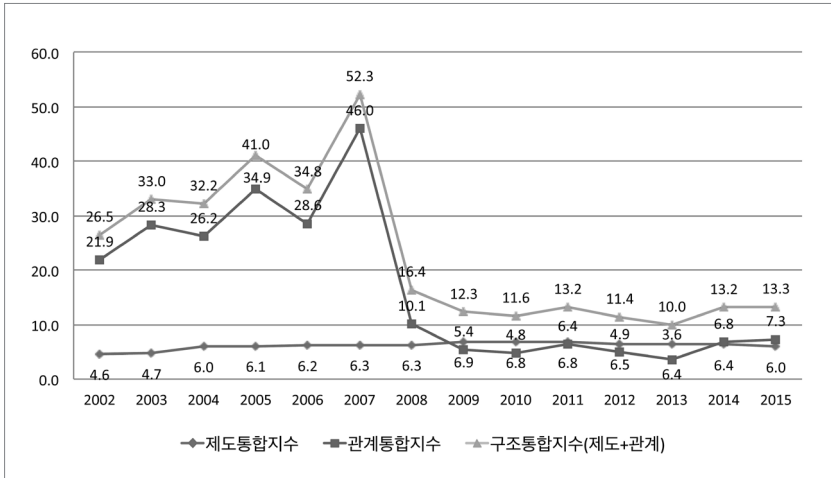
주민들이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졌으며, 남북한의 경제 협력마저 좀처럼 확대되지 못하여 그 인지도가 하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 경제영역의 통합지수는 정치영역과 달리 급격하게 변동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남북 관계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경제영역의 지수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남북의 정치적 관계가 경색되면 경제영역에서의 남북통합도 저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또한 정치영역에 대한 경제영역의 독자성이 아직은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경제영역의 발전이 정치영역의 발전을 유도한다는 기능주의적 가설이 적용되기에는 현 단계에서의 남북경제통합 정도는 충분한 독자성과 추동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치

- 2015년 정치영역의 남북통합지수는 49.3점으로 2014년의 50.5점에 비해 1.2점 하락하였다. 2013년에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4년에 약간 상승하였으나 다시 하락한 것이다. 구조통합과 의식통합을 나누어 보면 구조통합은 작년보다 0.1점이 상승한 13.3점을 기록하였고, 의식통합은 1.3점이 하락한 36.0점을 기록하였다.

〈그림 1-3〉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 구조통합은 2011년 이후 2년 연속 하락한 이후 2013년 약 9.9점으로 0 단계로 떨어졌다가 2014년에 3.2점이 상승하여 1단계를 가까스로 회복하였고 2015년에는 0.1점 상승한 13.3점이나 통합단계는 전년도와 동일한 1단계이다. 남북 간에 대화·회담 등의 빈도와 교류의 비중이 거의 없던 상태에서 어떠한 동력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2008년에 3단계에서 1단계로 떨어진 이후 줄곧 1단계를 유지하다 2013년에는 0단계로 떨어져 바닥을 친후 2014년 북한실세 ‘3인방’의 전격적인 방남으로 다시 1단계로 올라섰다.² 그러나 2015년에는 이러한 모멘텀을 살리지 못하고 전쟁위기, ‘8.25합의’, 이산가족상봉 등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결국 전년도와 비슷한 1단계를 겨우 유지하였다.

2 2013년의 구조통합지수는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남북 관계가 매우 긴장되었던 199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전반적으로 1차 핵위기로 남북 관계가 급랭하였던 1993~1997년과 유사한 상황이었다.

○ 구조통합의 한 축인 제도통합 부분은 정치 분야나 군사 분야의 남북공동집행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기구구성의 논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정도도 작년과 동일하다. 공동법제화 수준(전문가평가)은 2014년 대비 0.4점 하락하였다. 관계통합은 0.5점이 상승하였다. 2015년 8월에 발생한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전쟁 일촉즉발 상황에 이르는 긴장으로 관계통합지수를 끌어 내렸으나, 전격적인 ‘8.25합의’와 이산가족상봉(10~11월) 등이 이어짐으로써 관계통합지수상승을 소폭 견인하였다. 그러나 제도통합의 하락과 관계통합의 상승이 서로 상쇄효과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구조통합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 의식통합은 80점 중에서 36.0점으로 통합수준은 45.0%였으며, 전년인 2014년과 비교하면 1.3점 하락, 2013년(45.7%)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전년 대비 정치제도 동질성(0.2점),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0.3점)가 높아진 반면, 통일의 필요성(0.9점), 상대방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신뢰도(0.4점),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0.5점)은 낮아졌다. 남한주민의 통합의식은 작년보다 0.1점, 북한주민의 통합의식은 1.2점 하락했다. 2015년 하반기에 화해분위기가 반짝 조성되기는 하였으나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거센 반발과 8월의 전쟁분위기 조성 등으로 특히 북한주민의 정치의식통합지수 하락을 촉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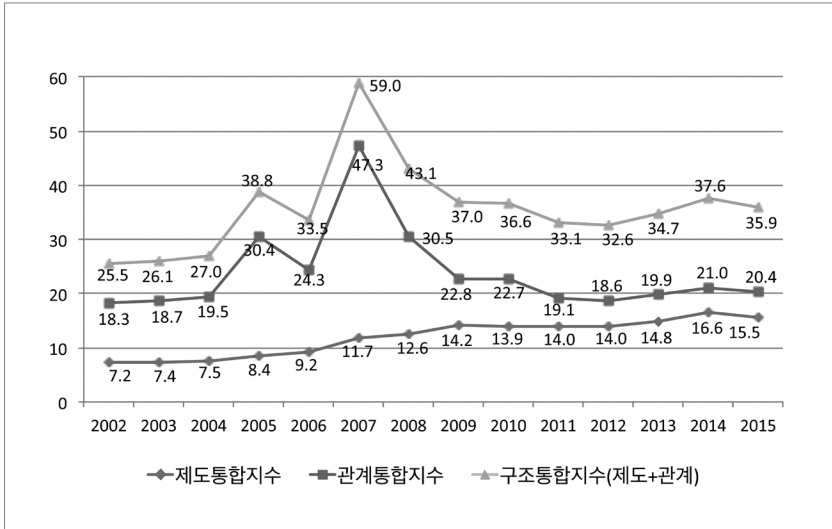
○ 2015년 정치영역의 구조통합지수는 1단계이다. 북한 내부에서는 당창건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0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초고층 아파트 단지인 미래과학자거리를 조성하는 등 대대적인 주민동원을 전개하였으며, 당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류원산을 초청하여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남한과도 이산가족상봉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지뢰도발과 대북확성기방송 포격 등 대남관계에서 조성된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정세를 압도하여 전반적인 구조통합지수의 상승은 전년에 비해 0.1점 높아진 13.3점으로 1단계에 머물렀다.

- 2016년 상반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유엔안보리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그리고 유엔안보리의 북한 SLBM발사 규탄 성명(8월 27일) 등을 감안하면, 2016년 남북통합지수는 1단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5월 초 개최된 제7차 당대회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70일전투’, 당대회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에 맞 대응하는 ‘200일전투’를 전개하는 등 대주민 동원을 강화하고 있다. 사드(THAAD) 도입 결정(7월 8일)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대남 적대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의 SLBM 발사(8월 24일) 이후에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특히 사드(THAAD) 배치와 북한의 SLBM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 고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정세를 좌우할 것이며 남북통합지수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2016년 남북통합지수를 높이려면 현 정부가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별도의 트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기조 위에 남북 경제협력과 군사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전략적 연계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사회문화

〈그림 1-4〉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 2015년 사회문화영역 통합지수는 84.5점(구조통합지수 35.9점+의식 통합지수 48.6점)으로 전년 대비 1.7점이 하락하였다. 이 중에서 구조 통합지수는 제도적 통합지수 15.5점과 관계적 통합지수 20.4점을 합하여 35.9점이다. 이 수치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단계별 배점 기준에 따라 2단계(21~40점)에 해당된다. 2단계는 교류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 지지만 상대적으로 1단계에 비해 접촉빈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 2015년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자 회담 개최 등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수준의 하락, 공동법제화 수준의 하락, 남북한 공동행사 부재, 경제분야의 인적 이동 및 탈북자 입국수의 감소 등으로 2014년 37.6점에서 1.7점이 하락한 35.9점이다.

- 2008~2015년 기간 동안 구조통합지수의 증감률 변화를 비교해 보면 2008년 -15.9, 2009년 -6.1, 2010년 -0.4, 2011년 -3.5, 2012년 -0.5, 2013년 +2.1, 2014년 +2.9, 2015년 -1.7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출전하고 폐회식 날에 북한의 권력 실세 3인방이 전격 방문하는 등 남북관계에서 유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반짝 상승하였으나, 2015년에는 DMZ 지뢰폭발 사고와 대북방송 재개 등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상승세를 잊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였다.
- 2015년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는 90점 만점 중 48.6점으로 2014년 48.6점과 동일하다. 2008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8년간의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의 변동 추이는 2008년 40.9점 → 2009년 39.4점 → 2010년 47.9점 → 2011년 46.8점 → 2012년 48.5점 → 2013년 46.4점 → 2014년 48.6점 → 2015년 48.6점으로 2010년 이후로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부동성(不動性)으로 남북한 주민 모두 전년대비 거의 모든 항목들에서 큰 변화가 없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한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을 제외하면 사회문화영역의 의식통합에 영향을 미칠만한 유의미한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의 항목별 남북한 주민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남한주민의 통합의식 수준이 북한주민의 통합의식 수준에 비해 매우 낮다. 이 점은 정책적으로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의 해소와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해 남한 주민의 주도성을 높이고 통합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2017년에 발표하게 될 사회문화영역 남북통합지수의 전망을 예측해보면 2016년에 비해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개성공단의 폐쇄로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되었으며 사회문화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교류가 중단된 상태이다. 게다가 해외식당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및 해외공관의 고위급 간부의 탈북과 남한 입국 등으로 상당기간 남북관계의 개선은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 요인들의 영향으로 2017년에도 사회문화영역 통합지수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 남북통합지수로 본 2016년 한반도: 평가와 전망

2015년 남북통합지수는 2014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지난해 통합지수는 2010년 이후 4년간 하락하다가 처음으로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15년 다시 하락함으로써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였다. 경제영역에서는 개성공단 생산량과 북한 노동자들의 고용이 증가하고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남북교역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구조통합에서는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의식통합에서는 약간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종합지수에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이에 비해 정치영역에서는 남북 간에 장차관급 회담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식통합지수가 전년에 비해 하락하고 사회문화영역에서는 적십자 실무접촉과 이산가족 상봉에도 불구하고 구조통합지수가 전년보다 하락하여 두 영역의 종합지수가 동반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2014년 통합지수의 전반적인 상승은 일시적인 반등으로 끝나게 되었다.

2016년 9월 현재 다음 해의 남북통합지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016년 김일성 주석 생전인 1980년 6차 당 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은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수소폭탄을 보유한 핵강국이 되었다고 선언한 다음 2월에는 장거리로켓을 발사하여 소위 우주강국임을 과시하였다.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들을 포함해 국제규범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도발적 행동을 한데 대해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먼저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선박운항, 금융, 지하자원수출 등을 폭넓게 제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미국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 주민인권 침해 그리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북한 제재법을 통과시키고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를 자금세탁우려대상으로 지정한데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인권침해 책임을 물어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양자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 틀을 만들어 북한의 선택지를 좁히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선도하고 촉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중단하지 않았던 개성공단사업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당국뿐 아니라 민간차원의 대화나 교류도 일체 허용하지 않는 등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전면적으로 차단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다층적 방어망 구축을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망(THAAD)을 도입하겠다는 결정까지 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실시한지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또 다시 전격적으로 실시하고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운용하는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새로운 핵탄두폭발실험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선언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극단적인 대결과 갈등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립 축으로 하는 군사적 갈등구조의 한 가운데로 한반도가 빨리

들어가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정치영역이든 경제나 사회영역이든 남북 간 대화나 교류협력의 재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매우 한가하고 사치스러운 일이 될 정도로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인가? 정세는 끊임없이 변한다. 국가행위자 내부의 상황이 달라지듯이 대외적 환경 또한 변화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국가행위자 내부의 세력관계와 이해관계들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진로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때로 급격히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행위자의 선택이 매우 급박하게 변화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대체로 경로의존적 특성으로 인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변화에 대한 인식과 전망만큼이나 시간에 대한 인식과 인내가 필요하다. 물론 정책의 방향을 기본적인 원칙에 기반하되 현실성이 있는 방향으로 정확히 또는 바람직하게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핵문제와 같은 안보문제가 다른 모든 영역의 대화나 교류협력, 그에 기반한 남북통합과정 자체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차단하여 교류협력이 '0'인 시대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통일을 향한 남북통합을 진전시킬 수 있는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지 그 단초들을 다시 돌아본다.

가. 북한문제 해결의 복합적 길을 찾자

북한의 핵무기와 그를 운반할 미사일 개발 문제가 북한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압도하고 있다. 북한이 한 해들어 핵실험을 두 차례, 통상 다섯 차례나 실시하고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무수단-화성10-미사일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

이 북한을 둘러싼 모든 이슈와 관심을 압도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의 핵무기가 이제 정치적 또는 외교적 무기가 아니라 실전 배치할 앞둔 군사적 무기임이 보다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정책커뮤니티뿐 아니라 대부분의 북한 관찰자들에게 핵심적인 현안이자 관심사로 대두되는 것이 어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아무리 엄중하다 하더라도 북한 핵문제 또한 발생 배경과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적대적 대외환경을 명분으로 삼아 핵무기개발을 소위 군사적 억제의 수단뿐 아니라 국내정치적으로 억압적 통치를 정당화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면서 체제결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도 부족한 자원을 얻기 위한 협상수단뿐 아니라 국가의 위상 제고와 자주성 견지를 위한 핵심 정치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북한 핵무기는 단순히 군사력의 핵심부분이 아니라 북한체제와 특히 정치의 핵심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 핵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북한 정치의 문제이겠지만, 북한문제 자체가 핵문제의 이면에 놓인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기보다 북한문제를 차분하게 돌아보고 그 북한문제를 해결하면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복합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 그 길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는 험로일 수 있다. 냉철한 판단과 정치적 의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도 필요하다.

나. 근본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이 지향하는 핵심 목표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통일은 이를 위한 핵심 계기이자 수단일 수 있다. 통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결국은 평화와

행복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면해서는 통일과, 궁극적으로는 평화와 행복의 공동체를 한반도에 만들기 위해 무엇부터 할 것인가? 북한의 변화가 그 시작일 수 있다.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21세기에 적대적인 대외환경을 때로는 의식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대내통치에 활용하면서 스스로에게 열린 기회의 창을 닫아버리는 북한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사회가 보다 개방되고 다원화되면 정치적으로도 변화의 힘이 만들어지고 축적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평화적이면서도 민주적인 방식의 통일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핵심은 북한 주민들이다. 북한이 북부지역인 두만강 유역의 수해복구를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선 김정은 정권의 최대 치적 사업 중 하나인 여명거리 건설을 중단하고 인력과 장비를 모두 수해복구로 돌린 것은 북한 당국도 그 ‘인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북한 변화의 핵심은 주민들이고 그 주민들의 마음이 북한과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 평화와 공존의 질서 구축이 중요하다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통일을 기초로 한반도에서 행복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 주민들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고 차이를 공존의 기초로 수용하면서 공동체적 정체성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의식의 통합이 진전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의 통합이 진전되기 위해서라도 구조의 통합이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관계적 통합이 진전되고 이러한 변화가 제도적 통합의 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의식통합의 진전이든 구조통합의 진전이든 기본은 남과 북의 접촉이고 교류와 협력이다. 만남이 없이 마음을 열 수 없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서로가 서로를 함께 살아가면서 미래를 만들어야 할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서로가 동반자가 아니라 적대적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도 만남은 이루어질 수 있고 때로 타협이나 양보를 통한 ‘협력’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만남이나 협상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들을 만들면서 의식과 관계, 제도의 통합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은 2015년 남북통합지수의 하락이 보여주고 있다.

현 단계에서 평화와 공존의 질서 구축이 가장 시급한 분야는 군사를 포함한 정치영역이다.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하면서 대남군사위협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존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이 그럴수록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하고 북핵문제를 넘어 통일과 그 이후까지 내다보면서 북한의 문을 열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정책수단을 사용하든 그 시작은 공존의 틀에서 접근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북한 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적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회적 유동성과 개방성이 증가하고 소득이나 연령, 교육수준 등에 따라 의식의 분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가 그만큼 복잡해지고 역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북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됨을 의미하며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이 현실적인 변화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 교류협력 제로(0) 시대, 다시 시작하자

교류협력이 전무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의 중단은 정치나 사회문화영역의 구조통합지수가 정세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는 가운데

도 그나마 안정성과 지속성을 지녔던 남북통합의 기반이 상실됨을 의미한다. 북한의 4차와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폭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유엔기구가 북한에서 활동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 정도로 북한 당국이든 주민이든 북한에 대한 접근 자체를 매우 힘들게 만들고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 남북통합의 최후보루가 상실되고 새로운 교류나 협력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5년 조사에서 의식통합지수가 하락한 점도 우려를 갖게 한다. 2013년 하락하였던 의식통합지수가 2014년 상승하였으나 2015년 다시 하락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2014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경제영역에서 0.8점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정치영역에서 1.3점이나 낮아졌다. 2015년 8월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을 계기로 고위급 회담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영역에서의 의식통합지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2016년은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 등으로 남북 간에 경제나 사회문화 영역의 교류협력이 모두 중단되고 정치적으로 거센 비난이 오가면서 대화 자체가 실종된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의식통합지수도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만큼 남과 북 주민들의 마음이 멀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통일과도 멀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외 없는 법칙이 없듯이 제재가 아무리 촘촘해지더라도 대화와 교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대북제재에서 민생과 관련된 교역이나 협력을 예외로 규정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무관한 주민들과의 일상적인 접촉, 특히 사회문화분야의 접촉과 교류의 길은 열려 있다. 여기에도 남과 북이 모두 안고 있는 인도적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산가족문제가 그것이고 북한의 열악한 보건 상황이 그것이고

2016년 여름 북한의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도 인도적 재난의 일종이다. 북한 핵문제가 아무리 엄중하더라도 남과 북이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공간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새로운 대북접근이 필요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때로는 새롭지 않은 것들도 주목하고 그 의미들을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2016년 남북통합지수

1장 구조통합지수

1. 경제
2. 정치
3. 사회문화

2장 의식통합지수

1. 지수구성
2. 영역별 지수
3. 종합

3장 남북통합지수: 2008~2015

구조통합지수

1. 경제

가. 지수구성

〈표 2-1〉 경제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영역	지표	배점
제도적 통합	• 공동의 경제제도나 정책의 존재	30
	• 동일화폐 사용	30
	• 남북한 경제분야 공동법제화	30
관계적 통합	• 남북교역액/북한 총 무역액: 교역부문	20
	• 한국의 대북투자액/북한 국민소득: 투자부문	20
	• 남한기업이 고용한 북한 노동자의 수/ 남한기업이 고용가능한 최대 북한 노동자 고용수: 노동부문	20
	• 관세정도와 비관세장벽의 존재: 무역자유화 부문	20
	• 경제교류를 뒷받침 하는 제도적 장치 확립 정도	20
	• 소득수준의 수렴	20
	• 이자율의 수렴	10
	• 인플레이션율의 수렴	10
	• 경기변동의 동조화	10
	• 금융시장의 통합정도	10

- 이상의 변인들에 부여된 점수를 가산하여 경제통합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11단계로 구분한다.

- 0단계 (물적 자원의 교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임): 10점 이하
- 1단계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낮음): 11~20점
- 2단계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이 높음): 21~30점
- 3단계 (물적 자원 교류의 비중이 높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 (주로 매개적 제도)이 마련됨): 31~50점
- 4단계 (3단계+관세나 수입할당 등이 없으며 자유로운 수출입이 가능): 51~70점
- 5단계 (4단계+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본이동을 자유화함, 상당한 정도의 노동 이동도 가능): 71~100점
- 6단계 (5단계+회원국의 정책을 구속하는 제도(위임적 제도)의 수립): 101~130점
- 7단계 (6단계+동일 화폐 사용): 131~160점
- 8단계 (7단계+경제정책의 대부분이 국가 공동의 기구와 제도에 위임): 161~190점
- 9단계 (8단계+모든 경제정책이 국가 공동의 기구와 제도에 위임): 191~220점
- 10단계 (9단계+실질적인 경제적 통일을 이룬 단계): 221~250점

나. 제도통합지수

1) 공동의 경제제도와 정책의 존재

- 공동의 경제제도와 정책 부문은 현재까지 공동의 경제정책(통합재정, 공동 중앙은행)을 위임하기 위한 위임기관(delegated institutions)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년과 같이 0점을 부여한다.
- 이 부문의 배점은 30점으로 남북한 통합재정의 존재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15점을 배점하고, 남북한 중앙은행의 존재유무와 그 권한 정도에

따라 15점 배점한다.

- 현재는 남북한 정부의 경제정책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받은 공동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동 제도·정책 부문의 배점은 0점이다.

2) 공동화폐의 사용-화폐 동맹

- 남북한 공동화폐 사용 부문도 현재까지는 진전이 없으므로 예년과 같이 0점을 부여한다.
- 이 부문의 배점은 30점으로 남북한 공동화폐 사용이 EU의 경우와 같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1단계: 북한화폐 태환화 10점
2단계: 북한화폐의 남한 화폐에 대한 페그(peg) 10점
3단계: 남북한 공동화폐의 사용 10점

3) 남북한 경제분야 공동법제화

- 남북한 법제의 공동법제화는 전문가 평가에 기초한 ‘법제화 수준’ 배점과 △사유재산권, △경제적 자유화, △금융제도의 확립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한 ‘법제의 실효화’ 배점의 합으로 측정된다.
- 경제분야 법제화 수준은 △북한의 법제화 수준, △남북한 법제의 수렴 정도, △남북공동법제의 구속력 수준으로 나누어 전문가 조사를 통해 측정한다. 전문가 조사는 10명의 북한법 전문가들이 세 개의 지표에 대해 각각 10점 척도로 점수를 부과, 그 부문별 점수를 합계한 후, 15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따른다. 2016년 7월에 실시된 전문가 조사 결과, 2015년 경제분야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은 1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8점이었으며, 이 수치는 2014년에 비해 0.7점 하락한 점수이다.

- ‘북한 경제분야 법제화 수준’, ‘경제분야 남북한 법제의 수렴정도’, ‘공동 법제의 구속력’은 모든 분야에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이는 북한의 경제 특구 추진 등 개방화를 향한 움직임이 단순한 외화 획득 목적에 머물러 제도면에서의 실질적인 변화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 경제협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남북한 상호간의 법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북한은 2013년 5월 29일 외국 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경제개발구 설치를 위한 경제개발구 법을 제정한 후, 기타 경제 관련 법령의 입법이 미진하였다. 또한 남북한 간 경제 협력도 이렇다 할 제도적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 경제분야의 공동법제화 점수는 전체적으로 답보 상태에 있다.

〈표 2-2〉 경제분야 법제도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북한의 경제분야 법제화 수준	2.4	2.4	2.7	2.6	3.0	2.9	2.8
경제분야 남북한 법제의 수렴 정도	2.1	2.1	2.0	1.6	1.8	1.7	1.6
경제분야 공동법제 구속력	2.7	2.2	2.0	1.4	1.8	1.9	1.4
합계	7.2	6.7	6.7	5.6	6.6	6.5	5.8

- 법제 실효화 수준은 △사유재산권, △경제적 자유화, △금융제도의 확립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 2009년 화폐 개혁의 단행으로 ‘사유재산권’부문의 점수가 하락하고, 2010년 3월 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남한 투자 자산에 대한 몰수를 통보하여 경제적 자유화 부문 중 ‘투자의 자유’가 침해된 이후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어 전년과 동일한 1점을 유지하였다.
 - － 법제의 실효화 점수는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개인 및 생산 수단의

소유가 일부 인정되어 ‘사유재산권’ 부분에서 1점의 점수를 부여한 바 있고, 헌법 개정 이후 후속 작업으로 외국인 투자 관련법과 경제특구법이 제정되어 이를 ‘투자의 자유’와 관련된 경제적 자유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로 1점을 부여하였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2008년까지 실효화 점수는 2점대를 유지하였다.

- 하지만 2009년 말 전격적으로 단행된 화폐 개혁이 개인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유재산권’ 부분에서 0.5점을 감점하였고, 2009년 실효화 점수는 1.5점을 부여하였다.
- 또한 2010년 3월 북한이 ‘금강산 지구내 남한 투자 자산에 대한 몰수를 통보한 점’을 경제적 자유화 부문 중 ‘투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하여, 2010년 실효화 점수는 0.5점 하락한 1점을 부여하였다.

■ 이상의 남북한 공동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를 종합해 보면, 전문가 평가에 의한 ‘법제화 수준’ 점수 5.8점(2013년에 비해 0.7점 하락)과 ‘법제의 실효화 수준’ 점수 1점(2014년과 동일)을 합하여 6.8점이 된다.

4) 제도통합지수 종합

- 경제영역의 제도통합지수는 △공동의 경제제도나 정책의 존재, △공동의 화폐의 사용,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의 합계로 산정하여 6.8점을 부여한다.
- 현재 남북 사이의 공동의 경제제도와 정책, 공동의 화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두 항목의 점수는 0점이다.
-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은 위에서 기술한 대로 법제화 수준과 법제의 실효화 수준을 합산하여 6.8점이 된다. 따라서 제도통합지수는 공동법제화 수준 점수와 동일하며 이는 아래 <표 2-3>에 나타나 있다.

〈표 2-3〉 제도통합지수 종합

연도	공동제도와 정책(30)	동일화폐 사용(30)	남북한 공동법제화(30)		법제, 제도적 통합
			법제화(15)	실효화(15)	
1989	0.0	0.0	1.0	0.0	1.0
1990	0.0	0.0	1.0	0.0	1.0
1991	0.0	0.0	1.0	0.0	1.0
1992	0.0	0.0	2.0	0.0	2.0
1993	0.0	0.0	2.0	0.0	2.0
1994	0.0	0.0	2.0	0.0	2.0
1995	0.0	0.0	2.0	0.0	2.0
1996	0.0	0.0	2.0	0.0	2.0
1997	0.0	0.0	2.0	0.0	2.0
1998	0.0	0.0	3.0	2.0	5.0
1999	0.0	0.0	3.0	2.0	5.0
2000	0.0	0.0	3.0	2.0	5.0
2001	0.0	0.0	3.0	2.0	5.0
2002	0.0	0.0	3.5	2.0	5.5
2003	0.0	0.0	3.5	2.0	5.5
2004	0.0	0.0	4.0	2.0	6.0
2005	0.0	0.0	4.0	2.0	6.0
2006	0.0	0.0	4.5	2.0	6.5
2007	0.0	0.0	6.3	2.0	8.3
2008	0.0	0.0	6.3	2.0	8.3
2009	0.0	0.0	7.2	1.5	8.7
2010	0.0	0.0	6.7	1.0	7.7
2011	0.0	0.0	6.7	1.0	7.7
2012	0.0	0.0	5.6	1.0	6.6
2013	0.0	0.0	6.6	0.6*	7.2
2014	0.0	0.0	6.5	1.0	7.5
2015	0.0	0.0	5.8	1.0	6.8

* 개성공단이 5개월 가량 폐쇄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1-5/12의 점수를 부여함

다. 관계통합지수

1) 교역부문

- 2015년 북한의 무역액(남북교역 제외)은 62.5억 달러로 전년대비 17.9% 감소한 수치이다. 수출은 15% 감소한 26.9억 달러, 수입은 20.0% 감소한 35.6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8.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 중국 경기의 둔화 및 석탄 가격 하락으로 광물 수출이 급감하였으며, 섬유류 및 광물성 생산품을 중심으로 수입액 역시 크게 줄어들어 무역 총액은 전년보다 13.6억 달러 감소하였다.
- 2015년 남북교역액은 27.1억 달러로 전년대비 15.7% 증가하였고, 북·중 교역액은 17.0% 감소한 57.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남북교역의 증가는 개성 공단의 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물품의 반출입이 활발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교역과 위탁 가공 교역은 2010년 5.24 조치 이후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 2015년, 전체 무역에서 남한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30.2%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5.24 조치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 이에 따라 북중무역의 남북교역 추월속도는 다소 주춤하여 남북교역이 북중무역의 약 40.0% 수준까지 회복하였다.³
- 2015년에도 중국과의 교역은 북한의 전체 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70.0%에 가까웠던 대중 무역 의존도는 63.7%로 다소 줄어들었다. 이는 전반적인 무역량 감소 및 남북 교역 규모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남북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순 무역량 중 대중 무역의 비중은

3 남북교역은 한 때(2013년) 북중 무역의 18.0%까지 하락했었다.

3년 연속 9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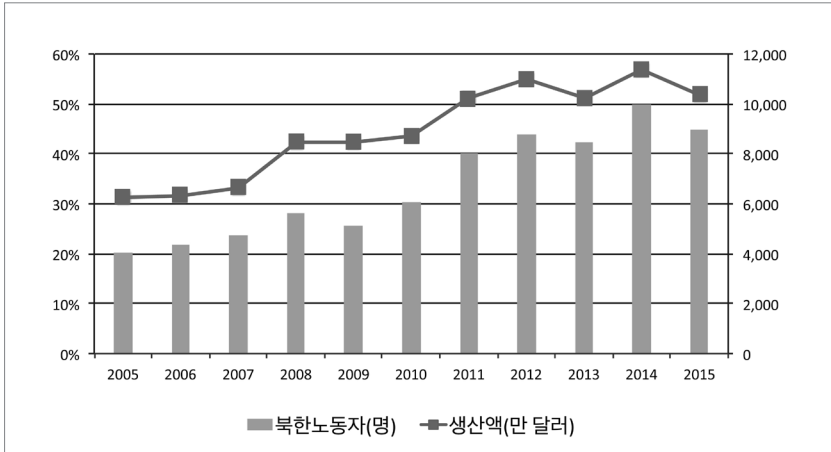
-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광산물이었으나, 전년대비 7.8% 감소하여 10.6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전체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6%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광산물 다음으로는 섬유제품의 수출이 전년대비 7.8% 증가한 8억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에서 32.2%를 차지하였다.
- 가장 많이 수입된 수입품은 광물성 연료, 광물유로 전체 수입의 13.2%인 4.27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38.2% 감소한 수치이다. 이외에도 음향, 영상설비, 원자로, 기계류, 플라스틱 제품 등 대 중국 상위 5개 수입품목의 수입량이 일제히 감소하였다.

■ 2015년 북한 무역현황에서 드러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국 경기의 둔화, 북한 주요 생산 품목의 가격 하락 등의 악재로 인해 2009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던 북한의 대외 교역량(남북교역 제외)이 8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 2014년 약 100억 달러에 근접하였던 북한의 무역 총액(대외무역+남북교역)은 2015년 약 90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해 60.0%에 근접하였던 무역 개방도 역시 52.0%로 하락하였다.

〈그림 2-1〉 북한 무역 총액과 무역 개방도 추이

(단위: 왼쪽 축은 %, 오른쪽 축은 백만 달러)



- 이상을 종합하면, 교역부문 상대점수는 북한 전체 교역액 대비 남북교역의 상대적 비중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1.5점 상승한 6.8점을 기록하였다.⁴

4 교역부문의 상대점수는 EU나 COMECON과 같이 경제통합도가 높은 경제공동체의 '역내교역비중'과 남북교역 비중을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2006년 유럽연합 27개의 회원국가의 국가별 전체 교역액 중 역내교역(intra-EU)의 비중 자료와 1985년 CMEA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회원국 6개국(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연방)의 역내 수출비중 자료를 사용한다. 각각 68.9% 과 56.0%로 이 두 수치의 평균인 62.4%를 상대점수 산출을 위한 기준으로 삼았다.

〈표 2-4〉 교역부문 상대점수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북한무역액 ^a (A)	남북교역액 ^b (B)	북한 총 무역액 (C=A+B)	남북교역 비중 (D=B/C)	상대점수 (E=(D*14)/62.4)
1989	4,516	19	4,534	0.4%	0.1
1990	4,170	14	4,184	0.3%	0.1
1991	2,584	111	2,695	4.1%	0.9
1992	2,555	173	2,728	6.4%	1.4
1993	2,646	187	2,833	6.6%	1.5
1994	2,100	195	2,295	8.5%	1.9
1995	2,052	287	2,339	12.3%	2.8
1996	1,977	252	2,229	11.3%	2.5
1997	2,177	308	2,485	12.4%	2.8
1998	1,442	222	1,664	13.3%	3.0
1999	1,480	333	1,813	18.4%	4.1
2000	1,969	425	2,394	17.8%	4.0
2001	2,270	403	2,673	15.1%	3.4
2002	2,260	642	2,902	22.1%	5.0
2003	2,391	724	3,115	23.2%	5.2
2004	2,857	697	3,554	19.6%	4.4
2005	3,002	1,056	4,058	26.0%	5.8
2006	2,996	1,350	4,346	31.1%	7.0
2007	2,940	1,798	4,738	37.9%	8.5
2008	3,816	1,820	5,636	32.3%	7.2
2009	3,414	1,679	5,093	33.0%	7.4
2010	4,174	1,912	6,086	31.4%	7.1
2011	6,316	1,714	8,030	21.3%	4.8
2012	6,811	1,971	8,782	22.4%	5.0
2013	7,340	1,136	8,476	13.4%	3.0
2014	7,610	2,343	9,953	23.5%	5.3
2015	6,252	2,711	8,963	30.2%	6.8

a. Kotra, 『북한대외무역동향』, 각년호 (남북교역액은 제외).

b. 통일부, “남북교역액 현황,”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2) 투자부문

- 대북투자액은 크게 ‘정부 대북투자’와 ‘민간 대북투자’로 구분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정부주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대북투자규모를 중심으로 대북투자액을 산정하였다.
- 정부 대북투자액은 남북협력기금 중 투자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항목 △경협기반조성 무상지원액(이하 지원액), △남북교류협력지원 용자액(이하 용자액)의 합산을 통해 산출하였다.
- 2015년 남북협력기금 중 투자 성격으로 규정한 지원액과 용자액의 합은 약 2천4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43.0% 감소하였다.
- 2015년 ‘경협기반 조성 무상지원액’은 전년대비 3.0%가 증가한 2,060만 달러가 지출되었다. 위 금액은 대북 경협기반조성 사업 중 대북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DMZ 평화 생태적 가치 제고를 위한 코리아 DMZ협의회’, ‘다자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항목을 제외한 금액이다.
- ‘남북협력지원 용자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용자액 및 경협기반조성 유사지원액이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84.0% 감소한 360만 달러가 지출되었다.
- 2015년 투자부문 상대점수는 남북협력기금 중 정부투자관련 지출이 감소한 결과, 전년대비 0.3점 하락한 0.3점을 기록하였다.⁵

5 투자부문의 경제통합지수는 경제통합이 높은 지역에 포함된 국가들의 국민소득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비중을 기준으로 삼고, 남한의 대북투자액을 이와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2004년 EU에 가입한 동유럽 8개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의 GDP의 FDI 비중을 사용하였고, 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고려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EU 통합 이후 3개년에 걸친 국민소득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의 평균값은 5.9%이다.

- 2015년은 지원액 지출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융자액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투자부문의 지수 역시 하락하였다.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2010년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정부의 대규모 대북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상대 점수 역시 1점 이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5〉 투자부문 상대점수(UN 명목소득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정부투자(남북협력기금)a		민간 투자액 b	남한 전체 투자액 (A)	북한의 국민소득 c (B)	남한투자 비중 $C=(A/B)*100$	상대점수 $D=(C*14)/5.87$
	경제협력 분야 기반조성 (경상지출)	남북교류 협력지원 (융자)					
1989					17,720	0.00	0.0
1990					16,706	0.00	0.0
1991					15,554	0.00	0.0
1992					13,842	0.00	0.0
1993					11,678	0.00	0.0
1994					9,334	0.00	0.0
1995					5,215	0.00	0.0
1996	4.9		5.0	9.9	10,528	0.09	0.2
1997			1.0	1.0	10,309	0.01	0.0
1998			1.0	1.0	10,260	0.01	0.0
1999			125.0	125.0	10,265	1.22	2.9
2000	14.6		22.0	36.6	10,593	0.35	0.8
2001	89.9	46.0	28.0	163.9	11,007	1.49	3.6
2002	36.8	35.7	12.0	84.5	10,887	0.78	1.9
2003	76.3	54.7	8.0	139.0	11,028	1.26	3.0

연도	정부투자(남북협력기금)a		민간 투자액 b	남한 전체 투자액 (A)	북한의 국민소득 c (B)	남한투자 비중 $C=(A/B)*100$	상대점수 $D=(C*14)/5.87$
	경제협력 분야 기반조성 (경상지출)	남북교류 협력지원 (용자)					
2004	76.0	81.4	12.0	169.4	11,145	1.52	3.6
2005	204.5	56.8	45.0	306.3	13,001	2.36	5.6
2006	152.1	71.0		223.1	13,741	1.62	3.9
2007	172.5	140.0		312.5	14,349	2.18	5.2
2008	110.0	36.6		146.6	13,327	1.10	2.6
2009	41.5	24.0		65.5	12,044	0.54	1.3
2010	17.7	45.2		62.9	13,960	0.45	1.1
2011	12.4	13.0		25.4	15,719	0.16	0.4
2012	23.8	22.1		45.9	15,962	0.29	0.7
2013	11.5	74.6		86.1	16,602	0.52	1.2
2014	20.0	22.3		42.3	17,462	0.24	0.6
2015	20.6	3.6		24.2	17,270 ^d	0.14	0.3

a.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통계』, 각년호 (1,000원=1달러 적용).

b. 김영호, "남북경협 현황과 평가," 『금융경제연구』 제281호(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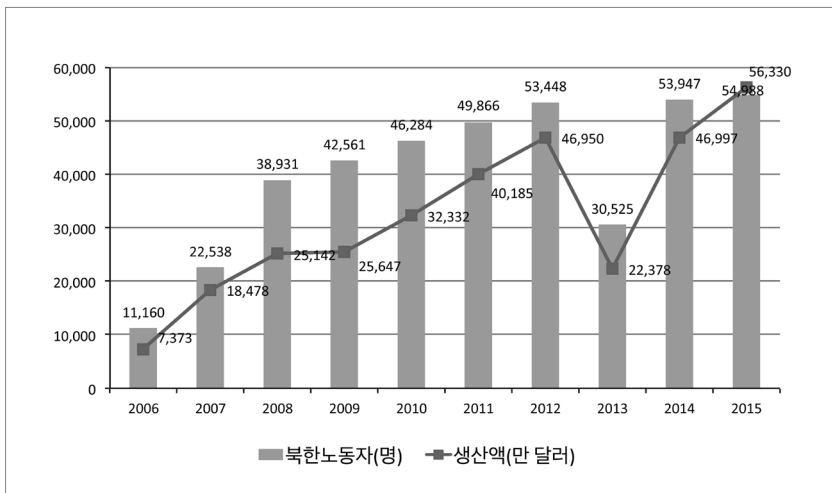
c. UN, "GNI in US Dollars," <<http://unstats.un.org/unsd/snaama/dnlist.asp>>.

d. 2014년도 국민소득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북한경제성장률 -1.1%를 적용하여 산출함.

3) 노동부문

- 개성공단 고용 북한 노동자의 수는 2015년 말 기준 약 5만 5천 명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다.
- 노동부문의 상대점수는 통일이후 예상되는 북한 노동인구의 남한 유입 규모⁶에 현재 고용된 북한노동력 규모를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 2015년 노동부문의 상대점수는 개성공단 노동자 수의 변화가 크지 않아 2014년과 동일한 3.4점을 기록하였다.
 - 2015년 개성공단 생산액은 전년 대비 19.8%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인 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림 2-2〉 개성공단 고용 북한노동자와 생산액 추이



6 정창무(2007) 인구이동 예측결과는 2020년을 통일 시점으로 가정하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연평균 32만 명 정도의 북한주민이 남한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정창무, “통일 이후 노동인구이동 분석,” 서울대학교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 심포지움 발표논문(2007).

〈표 2-6〉 노동부문 상대점수

(단위: 명)

연도	남한기업 고용 북한노동자 ^a (A)	상대점수 (A/320,000)*20
1989	0	0.0
1990	0	0.0
1991	0	0.0
1992	0	0.0
1993	0	0.0
1994	0	0.0
1995	0	0.0
1996	0	0.0
1997	0	0.0
1998	0	0.0
1999	0	0.0
2000	0	0.0
2001	0	0.0
2002	0	0.0
2003	0	0.0
2004	0	0.0
2005	7,621	0.5
2006	11,189	0.7
2007	22,538	1.4
2008	38,931	2.4
2009	42,561	2.7
2010	46,284	2.9
2011	49,866	3.1
2012	53,448	3.3
2013	30,525 ^b	1.9
2014	53,947	3.4
2015	54,988	3.4

a. 통일부, “개성공단 주요통계,”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12월 말 기준).

b. 연말 노동인구 52,379명에 개성공단 폐쇄일 수를 고려한 (1-5/12)를 곱하여 산출함.

4) 무역자유화 부문

- 2015년에는 2010년 이후 ‘5.24 대북제재 조치’로 상품무역과 인력 이동에서도 심대한 제약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2010~2014년과 동일한 6.0점을 부여한다.
- 무역자유화 부문은 크게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자유화정도의 합산을 통해 상대점수를 산출한다.
- 상품무역은 다시 ‘관세 유무’와 ‘교역금지품목 범위’ 등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평가한다.
 - － 2010년 6월 14일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가 개정된 후 모든 물품의 반출입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그러나 2010년 ‘5.24 대북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극소수의 예외만 제외하고는 반출입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 － 따라서, 2009년까지는 남북간 무관세로 인해 상품 무역자유화 점수를 5점 부여하여 왔으나, 상기 교역금지 조치로 실질적 의미에서 상품 무역자유화 정도에 심대한 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0년부터 0.5점이 낮은 4.5점을 부여하였다.
- 서비스무역에 대한 자유화 점수는 ‘북한 서비스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남한인력의 국경 간 이동’ 등 두 가지 범주에서 평가한다.
 - － 2009년 서비스와 인력 이동부문에 문제가 되었던, ‘유씨 억류문제’, ‘12.1조치’⁷⁾ 등은 2010년도에 해소되었다.
 - －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던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남한 사업자들이 방북승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7) 모든 남북 간 교류협력과 경제거래 목적의 인원의 (육로)통행 제한, 남북 육로통행 시간대와 인원수 축소, 개성공단 상주인원 감축, 남북간 철도운행과 개성관광 중단, 경협사무소 폐쇄 등을 골자로 한다.

- 따라서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이 2010년과 비교하여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문에 점수는 전년과 동일한 1.5점을 부여한다.

〈표 2-7〉 무역자유화 부문 상대점수

연도	상품무역(10) (A)	서비스무역(10) (B)	상대점수 (C=A+B)	비고
1989	5.0	0.0	5.0	
1990	5.0	0.0	5.0	
1991	5.0	0.0	5.0	
1992	5.0	0.0	5.0	
1993	5.0	0.0	5.0	
1994	5.0	0.0	5.0	
1995	5.0	0.0	5.0	
1996	5.0	0.0	5.0	
1997	5.0	0.0	5.0	
1998	5.0	0.0	5.0	
1999	5.0	0.0	5.0	
2000	5.0	0.0	5.0	
2001	5.0	0.0	5.0	
2002	5.0	0.0	5.0	
2003	5.0	0.0	5.0	
2004	5.0	1.0	6.0	개성공단 · 금강산 통행합의서 채택(1)
2005	5.0	2.0	7.0	KT 개성공단 통신서비스 개시(1)
2006	5.0	2.0	7.0	
2007	5.0	2.0	7.0	
2008	5.0	2.0	7.0	
2009	5.0	1.5	6.5	'121 조치': 인적이동 제한 '유씨 억류사건': 거주인력 안정보장 문제 발생
2010	4.5	1.5	6.0	'5.24 조치': 상품무역 및 인력이동에 대한 제약요인 발생

연도	상품무역(10) (A)	서비스무역(10) (B)	상대점수 (C=A+B)	비고
2011	4.5	1.5	6.0	'5.24 조치'에 따른 상품과 인력이동의 제한 지속
2012	4.5	1.5	6.0	'5.24 조치'에 따른 상품과 인력이동의 제한 지속
2013	2.6	1.5	4.1	'5.24 조치'에 따른 상품과 인력이동의 제한 지속 개성공단 폐쇄(5개월)에 따른 점수 차감
2014	4.5	1.5	6.0	'5.24 조치'에 따른 상품과 인력이동의 제한 지속
2015	4.5	1.5	6.0	'5.24 조치'에 따른 상품과 인력이동의 제한 지속

5) 경제 교류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확립 정도

- 2015년에는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설치되었던 매개제도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후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바 없으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한 차례 개최되어 전년과 동일한 3.5점의 상대점수를 채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매개제도(intermediating institutions)를 2007년 2차 정상회담 이후 설치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규정하고, 매개제도의 존재와 실질적인 작동여부를 차등하여 점수 부여한다.
- 제도 확립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매개제도인 공동위원회가 2014년에도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3점을 부여하나 실질적인 작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수는 0점에 그친다.
- 제도 확립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2015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경제 회담이 한 차례 개최된 것을 반영하여 점수를 산정하였다.

〈표 2-8〉 제도장치 확립부문 상대점수

(단위: 회)

연도	질적변수			양적변수 ⁸					상대점수
	위임 제도의 존재	매개 제도의 존재	매개 제도의 작동 ^a	회담 개최수	합의서 채택수	합의서 가중치	연도별 점수	연도별 점수에 따른 상대점수	
1989							0.0	0.0	0.0
1990							0.0	0.0	0.0
1991							0.0	0.0	0.0
1992							0.0	0.0	0.0
1993							0.0	0.0	0.0
1994							0.0	0.0	0.0
1995							0.0	0.0	0.0
1996							0.0	0.0	0.0
1997							0.0	0.0	0.0
1998							0.0	0.0	0.0
1999							0.0	0.0	0.0
2000	0.0	3.0	2.0	3.0	0.0	0.0	3.0	0.5	5.5
2001 ^a	0.0	3.0	0.0	3.0	2.0	3.0	6.0	0.5	3.5
2002	0.0	3.0	2.0	14.0	11.0	16.5	30.5	1.5	6.5
2003	0.0	3.0	2.0	17.0	14.0	21.0	38.0	2.0	7.0
2004	0.0	3.0	2.0	13.0	8.0	12.0	25.0	1.5	6.5

8 제도 확립관련 양적변수는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 합의서 가중치: 합의서 채택은 회담 개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파급효과도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담 개최에 비해 0.5의 가중을 더 주었다.

* 연도별 점수는 다음 수식으로 산출: 연도가중치 = 경제회담 개최 수 + 경제관련 합의서 채택 수 × 1.5

* 상대점수는 연도 연도별 점수에 따라 0~5점까지 범위에서 상대점수를 부여한다. 하지만, 연도별 점수가 80이상을 넘을 만큼 활발히 회담이 개최되고, 합의서가 채택된다고 할지라도 상대점수는 5점 이상 부여할 수 없다. 이는 매개제도의 존재와 활발한 활동만으로는 10점 이상의 점수는 부여될 수 없고, 위임제도가 존재하였을 때만이 그 이상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	질적변수			양적변수 ⁸					상대 점수
	위임 제도의 존재	매개 제도의 존재	매개 제도의 작동 ^a	회담 개최수	합의서 채택수	합의서 가중치	연도별 점수	연도별 점수에 따른 상대점수	
2005	0.0	3.0	2.0	11.0	6.0	9.0	23.0	1.5	6.5
2006	0.0	3.0	2.0	8.0	3.0	4.5	12.5	1.0	6.0
2007	0.0	3.0	2.0	22.0	16.0	24.0	46.0	2.5	7.5
2008	0.0	3.0	0.0	3.0	1.0	1.5	4.5	0.5	3.5
2009	0.0	3.0	0.0	4.0	0.0	0.0	4.0	0.5	3.5
2010	0.0	3.0	0.0	3.0	0.0	0.0	3.0	0.5	3.5
2011	0.0	3.0	0.0	0.0	0.0	0.0	0.0	0.0	3.0
2012	0.0	3.0	0.0	0.0	0.0	0.0	0.0	0.0	3.0
2013	0.0	3.0	0.0	22.0	5.0	7.5	29.5	1.5	4.5
2014	0.0	3.0	0.0	3.0	0.0	0.0	3.0	0.5	3.5
2015	0.0	3.0	0.0	1.0	0.0	0.0	1.0	0.5	3.5

※ 자료: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http://dialogue.unikorea.go.kr>>.

a. 2001년, 2008, 2009년에는 경제회담은 개최된 바 있으나, 경추위, 공동위원회 등의 매개기관은 작동하지 않았음.

6) 소득수준 수렴

■ 2015년에 남한은 2.6%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반면, 북한은 1.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남북한 간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 북한의 소득수준은 여전히 남한의 10.0%이하 수준이어서 소득수렴 부분의 상대점수는 예년과 같은 0점을 기록하였다.

○ 2014년을 기준으로 남한의 1인당 소득 대비 북한 1인당 소득수준은 2.0% 정도이다.

〈표 2-9〉 소득수준 수렴부문 상대점수(UN 명목소득 기준)

(단위: 달러,%)

연도	북한	남한	비율	상대점수
1989	911	5,704	16.0%	1.7
1990	835	6,491	13.0%	1.0
1991	753	7,500	10.0%	0.4
1992	659	7,992	8.0%	0.0
1993	547	8,754	6.0%	0.0
1994	432	10,239	4.0%	0.0
1995	239	12,399	2.0%	0.0
1996	476	13,245	4.0%	0.0
1997	461	12,235	4.0%	0.0
1998	455	8,094	6.0%	0.0
1999	451	10,447	4.0%	0.0
2000	461	12,067	4.0%	0.0
2001	475	11,387	4.0%	0.0
2002	467	12,969	4.0%	0.0
2003	470	14,410	3.0%	0.0
2004	472	16,131	3.0%	0.0
2005	547	18,719	3.0%	0.0
2006	574	21,044	3.0%	0.0
2007	596	23,219	3.0%	0.0
2008	550	20,659	3.0%	0.0
2009	495	18,436	3.0%	0.0
2010	570	22,318	3.0%	0.0
2011	639	24,506	3.0%	0.0
2012	645	24,902	3.0%	0.0
2013	668	26,379	3.0%	0.0
2014	699	28,384	2.0%	0.0
2015 ^a	691	29,008	2.0%	0.0

※ 자료: UN, "Per Capita GNI in US Dollars," (<http://unstats.un.org/unsd/snaama/dnlist.asp>).

a. 2015년 소득은 2014년 자료에 한국은행에서 산출한 남북한 경제성장률을 곱하여 산출함. 전반적인 통계수치는 UN 공식통계반영 점수로 재조정됨.

7) 이자율의 수렴

- 이자율의 수렴은 남북한의 월별 대출이자율과 화폐시장이자율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 이자율의 수렴정도는 북한에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후에 통합지수의 일부로 이용될 것이며 따라서 이 부문에서의 현재 점수는 0점을 부여한다.

8) 인플레이션율의 수렴

- 인플레이션율의 수렴은 남북한의 월별 CPI로 측정된 인플레이션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 현재 북한에서는 전반적인 가격자유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의 점수도 0점을 부여한다.

9) 경기변동의 동조화

- 경기변동의 동조화는 월별 산업생산량(industrial production) 자료를 활용하되 추이(trend)를 제거한 데이터를 사용한다.
- 현재 북한과 남한의 경기변동을 동조화시키는 요인들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영역에서의 현재 점수도 0점으로 평가한다.

10) 자본시장의 통합 정도

- 북한에 주식과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 개설이후 ‘북한의 포트폴리오 투자액과 남한저축액과의 상관계수’ 및 ‘남북한 주식시장 수익률 상관계수’ 등을 이용하여 자본시장의 통합정도를 측정한다.
- 현재 이 부문의 상대점수는 0점으로 평가한다.

라. 종합

1) 교역부문

- 2015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전년대비 0.6점 상승한 26.9점을 기록하였고, 이는 통합단계로는 2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2015년에는 △정부부문 대북투자관련 지출 감소, △경제 교류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확립 부문의 양적변수 감소가 지수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개성공단 생산액 증가 및 북·중 무역량 감소에 따른 남북교역 비중 증가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수 증가가 지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따라서 통합단계는 전년과 동일한 2단계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며, 그 비중이 높은 단계’를 의미하며, 3단계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태이다.

〈표 2-10〉 2014년/2015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부문	2014년	2015년	증감	요인
변화 부문	경제분야 공동법제화	7.5	6.8	-0.7	- 법제 실효화 부문 전문가 평가점수 하락
	교역	5.3	6.8	1.5	- 개성공단 생산액 증가 및 북·중 무역액 감소
	투자	0.6	0.3	-0.3	- 남북경협기금 투자관련 지출액의 감소
	노동 ⁹	3.4	3.4	0.1	- 개성공단 실효 노동자수 증가

9 2015년의 노동점수는 2014년에 비해 약 0.07점 증가하였으나 반올림에 의해 2014년과 동일한 3.4점을 기록하였다.

	부문	2014년	2015년	증감	요인
불변 부문	무역자유화	6.0	6.0	0.0	- 개성공단 재개로 인한 상품무역 자유화 부문의 예년 수준 회복
	경제적 위임	3.5	3.5	0.0	- 경제관련 회담 개최 감소 및 합의서 채택 감소
	공동제도와 정책	0.0	0.0	-	- 공동의 경제정책(통합재정, 공동 중앙은행)을 위임할 위임기관 부재
	공동화폐의 사용	0.0	0.0	-	- 남북공동 화폐 사용 관련 진전 없음.
	소득 수렴	0.0	0.0	-	- 남북간 소득격차 확대
	이자율 수렴	0.0	0.0	-	- 북한의 시장 이자율 미확립
	인플레이션 수렴	0.0	0.0	-	- 북한의 가격 자유화 미도입
	경기변동 동조화	0.0	0.0	-	- 남북한 경기변동 동조 요인이 없음 어려움.
	자본시장 통합도	0.0	0.0	-	- 북한 자본시장 미도입
계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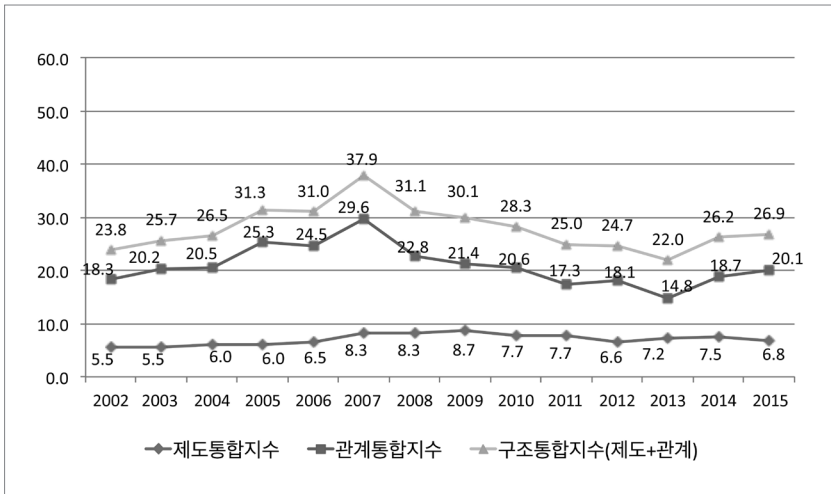
〈표 2-11〉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UN 명목소득 기준)

연도	제도통합 (90)			관계통합 (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제도와 정책 (30)	동일 화폐 사용 (30)	법제의 시장 경제화 (30)	교역 (20)	투자 (20)	노동 (20)	무역 자유화 (20)	제도 장치 (20)	소득 수렴 (20)	이자율 수렴 (10)	인플 레이션 수렴 (10)	경기 변동 동조화 (10)	자본 시장 통합 정도 (10)		
1989	0.0	0.0	1.0	0.1	0.0	0.0	5.0	0.0	1.5	0.0	0.0	0.0	0.0	7.8	0단계
1990	0.0	0.0	1.0	0.1	0.0	0.0	5.0	0.0	0.9	0.0	0.0	0.0	0.0	7.2	0단계
1991	0.0	0.0	1.0	0.9	0.0	0.0	5.0	0.0	0.0	0.0	0.0	0.0	0.0	7.3	0단계
1992	0.0	0.0	2.0	1.4	0.0	0.0	5.0	0.0	0.0	0.0	0.0	0.0	0.0	8.4	0단계

연도	제도통합 (90)			관계통합 (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제도와 정책 (30)	동일 화폐 사용 (30)	법제의 시장 경제화 (30)	교역 (20)	투자 (20)	노동 (20)	무역 자유화 (20)	제도 장치 (20)	소득 수렴 (20)	이자율 수렴 (10)	인플 레이션 수렴 (10)	경기 변동 동조화 (10)	자본 시장 통합 정도 (10)		
1993	0.0	0.0	2.0	1.5	0.0	0.0	5.0	0.0	0.0	0.0	0.0	0.0	0.0	8.5	0단계
1994	0.0	0.0	2.0	1.9	0.0	0.0	5.0	0.0	0.0	0.0	0.0	0.0	0.0	8.9	0단계
1995	0.0	0.0	2.0	2.8	0.0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6	0.0	0.0	2.0	2.5	0.2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7	0.0	0.0	2.0	2.8	0.0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8	0.0	0.0	5.0	3.0	0.0	0.0	5.0	0.0	0.0	0.0	0.0	0.0	0.0	13.0	1단계
1999	0.0	0.0	5.0	4.1	2.9	0.0	5.0	0.0	0.0	0.0	0.0	0.0	0.0	17.0	1단계
2000	0.0	0.0	5.0	4.0	0.8	0.0	5.0	5.5	0.0	0.0	0.0	0.0	0.0	20.3	1단계
2001	0.0	0.0	5.0	3.4	3.6	0.0	5.0	3.5	0.0	0.0	0.0	0.0	0.0	20.4	1단계
2002	0.0	0.0	5.5	5.0	1.9	0.0	5.0	6.5	0.0	0.0	0.0	0.0	0.0	23.8	2단계
2003	0.0	0.0	5.5	5.2	3.0	0.0	5.0	7.0	0.0	0.0	0.0	0.0	0.0	25.7	2단계
2004	0.0	0.0	6.0	4.4	3.6	0.0	6.0	6.5	0.0	0.0	0.0	0.0	0.0	26.5	2단계
2005	0.0	0.0	6.0	5.8	5.6	0.4	7.0	6.5	0.0	0.0	0.0	0.0	0.0	31.3	3단계
2006	0.0	0.0	6.5	7.0	3.9	0.7	7.0	6.0	0.0	0.0	0.0	0.0	0.0	31.0	3단계
2007	0.0	0.0	8.3	8.5	5.1	1.4	7.0	7.5	0.0	0.0	0.0	0.0	0.0	37.9	3단계
2008	0.0	0.0	8.3	7.2	2.6	2.4	7.0	3.5	0.0	0.0	0.0	0.0	0.0	31.1	3단계
2009	0.0	0.0	8.7	7.4	1.3	2.7	6.5	3.5	0.0	0.0	0.0	0.0	0.0	30.1	2단계
2010	0.0	0.0	7.7	7.1	1.2	2.9	6.0	3.5	0.0	0.0	0.0	0.0	0.0	28.3	2단계
2011	0.0	0.0	7.7	4.8	0.5	3.1	6.0	3.0	0.0	0.0	0.0	0.0	0.0	25.0	2단계
2012	0.0	0.0	6.6	5.0	0.9	3.3	6.0	3.0	0.0	0.0	0.0	0.0	0.0	24.7	2단계
2013	0.0	0.0	7.2	3.0	1.3	1.9	4.1	4.5	0.0	0.0	0.0	0.0	0.0	22.0	2단계
2014	0.0	0.0	7.5	5.3	0.6	3.4	6.0	3.5	0.0	0.0	0.0	0.0	0.0	26.2	2단계
2015 ^a	0.0	0.0	6.8	6.8	0.3	3.4	6.0	3.5	0.0	0.0	0.0	0.0	0.0	26.9	2단계

a 각 부문별 지수 및 합계 지수는 모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으로, 합산 시 '반올림 후 합산'을 적용하면 2015년의 관계통합지수는 20.0점, 구조통합지수는 26.8점이 되지만, 본고에서는 '합산 후 반올림'을 적용하여 관계통합지수는 20.1점, 구조통합지수는 26.9점으로 계산함.

〈그림 2-3〉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 북한의 국민소득 자료를 김병연 · 김석진 · 이근(2007)과 김병연(2008)¹⁰이 추정한 구매력 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국민소득(GDP) 통계를 사용할 경우 경제통합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구매력 평가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지수를 산정할 경우 ‘투자부문’과 ‘소득수렴 부문’에서 UN명목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지수와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 우선 2015년 투자부문에서는 전년대비 0.2점이 하락한 0.2점을 부여한다.

10 Byung-Yeon Kim, Suk Jin Kim and Keun Lee, "Assessing the economic performance of North Korea, 1954~1989: Estimates and growth accounting analysi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5 (2007), pp. 564~582 ; 김병연, "북한의 국민소득: 추정치와 평가," 『수은해외경제』, 가을호(2008), pp. 19~42.

〈표 2-12〉 투자부문 상대점수(구매력 평가소득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정부투자(남북협력기금)a		민간 투자액b	남한 전체 투자액 (A)	북한의 국민소득c (B)	남한투자 비중 $C=(A/B)*100$	상대점수 $D=(C*14)/5.87$
	경제협력분야 기반조성 (경상지출)	남북교류 협력지원 (용자)					
1989					45,160	0.0	0.0
1990					41,979	0.0	0.0
1991					40,437	0.0	0.0
1992					36,293	0.0	0.0
1993					34,198	0.0	0.0
1994					34,272	0.0	0.0
1995					31,065	0.0	0.0
1996	4.9		5.0	9.9	30,206	0.03	0.1
1997			1.0	1.0	26,826	0.0	0.0
1998			1.0	1.0	27,801	0.0	0.0
1999			125.0	125.0	30,407	0.4	1.4
2000	14.6		22.0	36.6	28,539	0.1	0.4
2001	89.9	46.0	28.0	163.9	30,442	0.5	1.8
2002	36.8	35.7	12.0	84.5	30,757	0.3	0.9
2003	76.3	54.7	8.0	139.0	31,643	0.4	1.5
2004	76.0	81.4	12.0	169.4	32,020	0.5	1.8
2005	204.5	56.8	45.0	306.3	33,567	0.9	3.1
2006	152.1	71.0		223.1	33,718	0.7	2.3
2007	172.5	140.0		312.5	32,294	1.0	3.3
2008	110.0	36.6		146.6	33,295 ^d	0.4	1.5
2009	41.5	24.0		65.5	32,995	0.2	0.7
2010	17.7	45.2		62.9	32,830	0.2	0.7
2011	12.4	13.0		25.4	33,093	0.1	0.3
2012	23.8	22.1		45.9	33,523	0.1	0.5
2013	11.5	74.6		86.1	33,892	0.3	0.9
2014	20	22.3		42.3	34,231	0.1	0.4
2015	20.6	3.6		24.2	33,854	0.07	0.2

a.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통계』, 각년호 (1,000원 = 1달러 적용).

b. 김영훈, "남북경협 현황과 평가," 『금융경제연구』, 제281호(2006).

c. Byung-Yeon Kim, Suk Jin Kim and Keun Lee (2007).

d. 2008년 이후의 북한국민소득은 전년도 통계에 매년 한국은행에서 산출한 북한 경제 성장률을 곱하여 구함.

- 소득수준 수렴부문에서는 구매력 평가 자료에서도 북한소득이 남한소득의 대비 10.0% 미만으로 상대점수는 0점을 부여한다.

〈표 2-13〉 소득수준 수렴부문 상대점수(구매력 평가소득 기준)

(단위: 달러, %)

연도	북한 ^a	남한 ^b	비율(%)	상대점수
1990	2,076	8,420	25.0	3.5
1991	1,973	9,520	21.0	2.6
1992	1,745	10,200	17.0	2.0
1993	1,619	11,010	15.0	1.3
1994	1,605	12,060	13.0	1.0
1995	1,442	13,320	11.0	0.4
1996	1,393	14,510	10.0	0.0
1997	1,230	15,400	8.0	0.0
1998	1,267	14,500	9.0	0.0
1999	1,377	16,250	8.0	0.0
2000	1,287	17,950	7.0	0.0
2001	1,368	19,060	7.0	0.0
2002	1,375	20,700	7.0	0.0
2003	1,405	21,310	7.0	0.0
2004	1,410	22,920	6.0	0.0
2005	1,464	24,030	6.0	0.0
2006	1,461	25,770	6.0	0.0
2007	1,392	27,790	5.0	0.0
2008	1,430	28,720	5.0	0.0
2009	1,410 ^c	28,330	5.0	0.0
2010	1,395	30,500	5.0	0.0
2011	1,399	31,500	4.0	0.0
2012	1,411	32,540	4.0	0.0
2013	1,420	32,890	4.0	0.0
2014	1,427	33,520	4.0	0.0
2015	1,411	34,700	4.0	0.0

a. Byung-Yeon Kim, Suk Jin Kim and Keun Lee (2007) ; Byung-Yeon Kim (2008).

b. World bank, "GNI per capita, PPP (current international \$)" "WDI Online Data Availability Query".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

c. 2008년 이후 북한의 소득은 전년도 소득에 매년 한국은행에서 산출한 북한 경제 성장률을 곱하여 구함.

- 구매력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한 2015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0.7점 상승한 26.8점을 기록하였고, 이는 통합단계로 2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표 2-14〉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구매력 평가소득 기준)

연도	제도통합 (90)			관계통합 (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제도와 정책 (30)	동일 화폐 사용 (30)	법제의 시장 경제화 (30)	교역 (20)	투자 (20)	노동 (20)	무역 자유화 (20)	제도 장치 (20)	소득 수렴 (20)	이자율 수렴 (10)	인플레이션 수렴 (10)	경기 변동 동조화 (10)	자본 시장 통합 정도 (10)		
1989	0.0	0.0	1.0	0.1	0.0	0.0	5.0	0.0	1.7	0.0	0.0	0.0	0.0	7.8	0단계
1990	0.0	0.0	1.0	0.1	0.0	0.0	5.0	0.0	1.1	0.0	0.0	0.0	0.0	7.2	0단계
1991	0.0	0.0	1.0	0.9	0.0	0.0	5.0	0.0	0.4	0.0	0.0	0.0	0.0	7.3	0단계
1992	0.0	0.0	2.0	1.4	0.0	0.0	5.0	0.0	0.0	0.0	0.0	0.0	0.0	8.4	0단계
1993	0.0	0.0	2.0	1.5	0.0	0.0	5.0	0.0	0.0	0.0	0.0	0.0	0.0	8.5	0단계
1994	0.0	0.0	2.0	1.9	0.0	0.0	5.0	0.0	0.0	0.0	0.0	0.0	0.0	8.9	0단계
1995	0.0	0.0	2.0	2.8	0.0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6	0.0	0.0	2.0	2.5	0.2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7	0.0	0.0	2.0	2.8	0.0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8	0.0	0.0	5.0	3.0	0.0	0.0	5.0	0.0	0.0	0.0	0.0	0.0	0.0	13.0	1단계
1999	0.0	0.0	5.0	4.1	1.4	0.0	5.0	0.0	0.0	0.0	0.0	0.0	0.0	15.5	1단계
2000	0.0	0.0	5.0	4.0	0.4	0.0	5.0	5.5	0.0	0.0	0.0	0.0	0.0	19.9	1단계
2001	0.0	0.0	5.0	3.4	1.8	0.0	5.0	3.5	0.0	0.0	0.0	0.0	0.0	18.7	1단계
2002	0.0	0.0	5.5	5.0	0.9	0.0	5.0	6.5	0.0	0.0	0.0	0.0	0.0	22.9	2단계
2003	0.0	0.0	5.5	5.2	1.5	0.0	5.0	7.0	0.0	0.0	0.0	0.0	0.0	24.2	2단계

연도	제도통합 (90)			관계통합 (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제도와 정책 (30)	동일 화폐 사용 (30)	법제의 시장 경제화 (30)	교역 (20)	투자 (20)	노동 (20)	무역 자유화 (20)	제도 장치 (20)	소득 수렴 (20)	이자율 수렴 (10)	인플 레이션 수렴 (10)	경기 변동 동조화 (10)	자본 시장 통합 정도 (10)		
2004	0.0	0.0	6.0	4.4	1.8	0.0	6.0	6.5	0.0	0.0	0.0	0.0	0.0	24.7	2단계
2005	0.0	0.0	6.0	5.8	3.1	0.5	7.0	6.5	0.0	0.0	0.0	0.0	0.0	28.9	2단계
2006	0.0	0.0	6.5	7.0	2.3	0.7	7.0	6.0	0.0	0.0	0.0	0.0	0.0	29.4	2단계
2007	0.0	0.0	8.3	8.5	3.3	1.4	7.0	7.5	0.0	0.0	0.0	0.0	0.0	36.0	3단계
2008	0.0	0.0	8.3	7.2	1.5	2.4	7.0	3.5	0.0	0.0	0.0	0.0	0.0	30.0	2단계
2009	0.0	0.0	8.7	7.4	0.6	2.7	6.5	3.5	0.0	0.0	0.0	0.0	0.0	29.4	2단계
2010	0.0	0.0	7.7	7.1	0.6	2.9	6.0	3.5	0.0	0.0	0.0	0.0	0.0	27.8	2단계
2011	0.0	0.0	7.7	4.8	0.3	3.1	6.0	3.0	0.0	0.0	0.0	0.0	0.0	24.9	2단계
2012	0.0	0.0	6.6	5.0	0.5	3.3	6.0	3.0	0.0	0.0	0.0	0.0	0.0	24.5	2단계
2013	0.0	0.0	7.2	3.0	0.9	1.9	4.1	4.5	0.0	0.0	0.0	0.0	0.0	21.6	2단계
2014	0.0	0.0	7.5	5.3	0.4	3.4	6.0	3.5	0.0	0.0	0.0	0.0	0.0	26.1	2단계
2015	0.0	0.0	6.8	6.8	0.2	3.4	6.0	3.5	0.0	0.0	0.0	0.0	0.0	26.8	2단계

a 각 부문별 지수 및 합계 지수는 모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으로, 합산 시 '반올림 후 합산'을 적용하면 2015년의 관계통합지수는 19.9점, 구조통합지수는 26.7점이 되지만, 본고에서는 '합산 후 반올림'을 적용하여 관계통합지수는 20.0점, 구조통합지수는 26.8점으로 계산함.

2. 정치

가. 지수구성

〈표 2-15〉 정치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영역		지표	배점
정치 구조 통합	제도적 통합	• 정치·군사의 공동집행기구	30
		• 정치제도의 단일화	30
		• 정치분야 남북 법제화	30
		소계	90
	관계적 통합	• 실무정치회담	20
		• 고위급 정치회담	20
		• 군사회담	20
		• 의회회담	20
		• 대화·회담의 정례화	10
		•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	20
		• 정치분야 공동행사	10
		• 국제사회에서 외교군사적 협력	10
		• 군비축소	10
		•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10
		• 상대체제인정 행위	10
소계	160		
합계		250	

■ 이상의 변인들에 부여된 점수를 가산하여 정치통합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11단계로 구분한다.

- 0단계 (정치적 대화·회담 등 교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 10점 이하
- 1단계 (대화·회담 등 교류가 있으나 빈도 및 비중이 낮음): 11~20점
- 2단계 (대화·회담 등 교류의 빈도·비중이 높음): 21~40점

- 3단계 (대화 · 회담 등 교류의 비중이 높으며, 교류의 의제가 포괄적): 41~60점
- 4단계 (3단계+매개제도의 구성과 활동): 61~80점
- 5단계 (4단계+매개제도의 정례화 · 제도화 진행): 81~100점
- 6단계 (5단계+매개제도의 역할 최대화): 101~130점
- 7단계 (6단계+남북공동집행기구 구성과 활동): 131~160점
- 8단계 (7단계+대부분의 정치활동을 공동집행기구 및 제도에 위임): 161~190점
- 9단계 (8단계+모든 정치활동을 공동집행기구 및 제도에 위임): 191~220점
- 10단계 (9단계+실질적인 정치통합): 221~250점

■ 남북통합 수준을 단계로 구분하면, 남북 접촉 · 교류기(0~2단계), 남북 협력도약기(3~5단계), 남북연합기(6~8단계), 통일 완성기(9~10단계)로 구분된다. 남북통합은 3단계, 6단계, 9단계에서 질적으로 도약(take-off)한다. 마지막의 실질적인 통일 시기는 남북 간 정치분야에서 민주화 · 제도화 · 단일화 등이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실현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나. 제도통합지수

- 정치통합은 구조통합과 의식통합으로 구분하며, 구조통합은 다시 제도통합과 관계통합의 두 차원으로 구성한다.
- 먼저 제도적 측면의 정치통합, 즉 제도통합은 남북의 정치행위를 규제 · 규정하는 공동의 집행기구가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공동기구가

실질적인 통치기능을 발휘하는가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또 남북한의 정치제도가 상호 동질화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도 제도통합의 중요한 변인으로 설정한다. 정치제도의 동질화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정치제도가 다원주의 정치체제로 변화하는 방향으로 남북의 정치제도가 동질화 될 것으로 예상하여 구체적으로는 북한 정치제도의 민주화 정도를 측정 변인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제도적 통합은 남북한간 공동집행기구(정치·군사)의 구성과 활성화, 남북 정치제도의 단일화, 정치 분야의 남북 공동법제화 등의 변인을 포함한다.

〈표 2-16〉 정치영역 제도적 통합의 지표와 배점

통합영역	지표	세부지표	배점
제도적 통합 (총 90점)	남북공동집행기구	남북정치공동기구	15
		남북군사공동기구	15
	남북정치제도의 단일화	북한 유일지도체계의 변화	10
		북한의 복수후보 선거	10
		북한 정당결성의 자유	10
	남북한 공동법제화	북한 정치법제의 실효성	15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	15

1) 남북공동정치기구의 구성과 활성화

- 정치와 군사 영역에서 각 15점씩 배정하고, 점수부여 방식은 기구구성 논의 5점, 기구구성 추진 5점, 기구의 활성화 5점으로 배정하며 각각의 요소에 대해 진전 정도와 수준에 따라 1~5점을 차별적으로 부여한다.
- 2015년 정치영역이나 군사영역에서 남북한 간에 공동집행기구의 구성이나 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14년과 마찬가지로 0점이다.

2)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변인은 수령과 당의 유일지도체계가 변화하는가(10점), 복수후보에 의한 선거가 이루어지는가(10점), 자유로운 정당결성의 자유가 존재하는가(10점) 등을 기준으로 30점을 배정하고, 각각의 논의가 진행되는 정도, 즉 당이나 정치권에서 논의 및 토론 시작(2.5점), 부분적인 변화 발생(2.5점), 광범위한 변화 발생(2.5점), 법제화(2.5점)의 진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2015년의 북한의 정치제도는 2014년과 비교할 때 별다른 변화는 없다. 2013년 6월 개정된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더 엄격히 집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2015년에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수령에 대한 불경죄로 처형(4월 30일)되었다. 10월에는 당창건 70주년을 맞아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거행하였는데 이 자리에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류원산을 초청하여 중국과의 대외협력을 과시하였다. 그럼에도 ‘유일영도체계’를 엄격하게 집행하는 북한의 정치관행은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2015년 정치제도의 변화는 작년과 동일한 0.5점이다.

3) 남북한 공동법제화

■ 남북한 정치 관련 공동법제화는 크게 법제화의 수준(15점)과 법제의 실효성(15점)으로 구분된다. 정치분야 공동 법제화 수준은 다시 북한의 법제화 수준(5점), 남북한 간 법제의 수렴도(5점), 남북한 공동법제의 구속력 수준(5점) 등 세 항목으로 구성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2016년 5~8월 10명의 북한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

를 실시한 결과, 2015년 정치분야 남북한 법제화 수준은 15점 만점 중 4.5점이다.

〈표 2-17〉 북한 정치관련 법제화 정도

세부지표	평균점수 (항목별 10점 만점)	상대점수 (항목별 5점 만점)	법제화 수준 (합계/15점 만점)
정치분야 북한의 법제화 수준	4.8	2.4	4.5/15
정치분야 남북간 법제의 수렴도	2.2	1.1	
정치분야 남북 공동법제의 구속력	1.9	0.95	

- 법제의 실효성은 북한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민주화 관련 기본법 조항들이 실제로 현실사회에서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의 여부로 판단한다. 측정 지표와 배점은 아래와 같다. 문헌조사와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15점 만점 중 피선거권이나 정치적 자유에서는 여전히 억압적인 반면, 구속과 체포의 법적 보장 측면에서는 형법과 관련법이 개정되어 2004년부터 조금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4년과 비교할 때 특별히 나아진 것이 없으므로 2015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는 1.0점을 부여한다.

〈표 2-18〉 북한 정치관련 법제의 실효성 정도

구분	헌법조항(98년)	실효성 점수
피선거권	17살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제66조)	0/5
정치적 자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제67조)	0/5
구속·체포의 법적 보장	국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국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79조)	1/5
합계		1/15

※ 실효성 점수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0점, '거의 없다'=1점, '약간 있다'=2점, '보통 이상이다'=3점, '상당히 크다'=4점, '전면적 효력이 있다'=5점으로 구분

■ 이상으로 남북한의 공동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를 종합해 보면 다음의 〈표 2-19〉와 같다. 북한의 법제화 수준, 남북한 법제의 수렴도 및 공동 법제의 구속력에 대해 법학자들이 평가한 점수에 북한법제의 실효성을 합한 점수를 산출한다. 2015년의 경우,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은 남북의 법제화 점수 4.5점과 북한법제의 실효성 1점을 합하여 최종 점수는 5.5점이 된다. (1989~2007년 기간의 점수 산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북통합지수 1989~2007년」 참고, 2008년 이후는 연도별 남북통합지수 보고서 참고)

〈표 2-19〉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

연도	법제화 수준 (15)	북한법제 실효성 (15)	가중치 총점
1989	1.0	0.0	1.0
1990	1.0	0.0	1.0
1991	1.0	0.0	1.0
1992	2.0	0.0	2.0
1993	2.5	0.0	2.5
1994	2.6	0.0	2.6
1995	3.1	0.0	3.1
1996	3.2	0.0	3.2
1997	3.3	0.0	3.3
1998	3.8	0.0	3.8
1999	4.3	0.0	4.3
2000	4.4	0.0	4.4
2001	4.5	0.0	4.5
2002	4.6	0.0	4.6
2003	4.7	0.0	4.7
2004	5.0	1.0	6.0
2005	5.1	1.0	6.1
2006	5.2	1.0	6.2
2007	5.3	1.0	6.3
2008	5.3	1.0	6.3
2009	5.4	1.0	6.4
2010	4.8	1.0	5.8
2011	4.8	1.0	5.8
2012	4.5	1.0	5.5
2013	4.9	1.0	5.9
2014	4.9	1.0	5.9
2015	4.5	1.0	5.5

4) 제도통합지수 종합

- 정치영역의 제도통합지수는 남북공동집행기구 및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의 합계로 산정된다. 2015년에는 정치 분야나 군사분야의 남북공동집행기구가 존재하지 않았고 기구구성의 논의도 전혀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항목의 점수는 0점이다.
- 2015년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정도는 작년과 동일한 0.5점을 부여한다.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은 법제화 측면과 실효성 측면을 합한 5.5점을 부여한다. 위의 점수를 나타낸 제도통합지수는 아래 <표 2-20>과 같다.

<표 2-20> 정치영역 제도통합지수 종합

연도	공동집행기구 (30)	단일제도화 (30)	공동법제화 (30)	합계 (90)
1989	0.0	0.0	1.0	1.0
1990	0.0	0.0	1.0	1.0
1991	0.0	0.0	1.0	1.0
1992	0.0	0.0	2.0	2.0
1993	0.0	0.0	2.5	2.5
1994	0.0	0.0	2.6	2.6
1995	0.0	0.0	3.1	3.1
1996	0.0	0.0	3.2	3.2
1997	0.0	0.0	3.3	3.3
1998	0.0	0.0	3.8	3.8
1999	0.0	0.0	4.3	4.3
2000	0.0	0.0	4.4	4.4
2001	0.0	0.0	4.5	4.5
2002	0.0	0.0	4.6	4.6
2003	0.0	0.0	4.7	4.7
2004	0.0	0.0	6.0	6.0

연도	공동집행기구 (30)	단일제도화 (30)	공동법제화 (30)	합계 (90)
2005	0.0	0.0	6.1	6.1
2006	0.0	0.0	6.2	6.2
2007	0.0	0.0	6.3	6.3
2008	0.0	0.0	6.3	6.3
2009	0.0	0.5	6.4	6.9
2010	0.0	1.0	5.8	6.8
2011	0.0	1.0	5.8	6.8
2012	0.0	1.0	5.5	6.5
2013	0.0	0.5	5.9	6.4
2014	0.0	0.5	5.9	6.4
2015	0.0	0.5	5.5	6.0

다. 관계통합지수

■ 정치영역의 관계통합은 남북 간의 실무정치회담, 고위급정치회담, 군사 회담, 의회회담, 정치분야 공동행사, 위원회 존재 및 합의문·공동선언 발표 등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 대화·회담의 정례화, 국제사회에서의 외교군사적 협력, 군비축소,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군사통합 정도, 상대체제 인정행위 등의 변인을 포함한다.

■ 각종 정치회담이 관계통합의 변인으로 많이 포함된 것은 다양한 수준에서의 정치대화와 협상, 합의 등의 활동이 남북 간 정치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함으로써 공동정치기구의 구성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유력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정치, 외교, 군사 분야에서 이러한 대화와 회담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가 하는 측면과 그러한 대화와 회담이 위원회 구성 및 정례화 등으로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변인을 포함한다.

1) 실무정치회담

■ 2015년도에는 실무정치회담이 개최되지 않았다.

〈표 2-21〉 실무정치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연도	실무정치회담(횟수)	가중치(×0.2점)
1989	5.0	1.0
1990	11.0	2.2
1991	10.0	2.0
1992	77.0	15.4
1993	4.0	0.8
1994	10.0	2.0
1995	0.0	0.0
1996	0.0	0.0
1997	0.0	0.0
1998	2.0	0.4
1999	3.0	0.6
2000	13.0	2.6
2001	0.0	0.0
2002	2.0	0.4
2003	1.0	0.2
2004	0.0	0.0
2005	6.0	1.2
2006	3.0	0.6
2007	9.0	1.8
2008	0.2	0.0
2009	4.0	0.8
2010	0.0	0.0
2011	0.0	0.0
2012	0.0	0.0
2013	1.0	0.2
2014	1.0	0.2
2015	0.0	0.0

※ 자료 출처: 남북회담 홈페이지 <<http://dialogue.unikorea.go.kr>>.

2) 고위급 정치회담

■ 2015년도에는 고위급 정치회담이 2회 개최되었다. 2015년 8월 22~24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있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참석하였고, 북측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이 참석하였다. 2015년 12월 11~23일까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제 1차 남북당국회담이 있었다. 이 회담에 남측에서는 황부기 통일부 차관, 김의도 통일부 국장, 손재락 총리실 국장이 참석하였고 북측에서는 정송주 단장, 황철 조평통 서기국 부장,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가 참석하였다. 2015년 고위급 정치회담 점수는 장관급회담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 하면 1.5점과 차관급회담 가중치를 적용하여 0.8점으로 총 2.3점이다.

〈표 2-22〉 고위급 정치회담 연도별 횟수 및 점수

연도	정상회담	총리회담	장관급회담	차관급회담	횟수 총계	가중치 총점
가중치	×점	×점	×0.5점	×0.8점		
1989					0.0	0.0
1990		3.0			3.0	6.0
1991		2.0			2.0	4.0
1992		3.0			3.0	6.0
1993					0.0	0.0
1994					0.0	0.0
1995					0.0	0.0
1996					0.0	0.0
1997					0.0	0.0
1998					0.0	0.0

연도	정상회담	총리회담	장관급회담	차관급회담	횟수 총계	가중치 총점
1999				2.0	2.0	1.6
2000	1.0		4.0		5.0	11.0
2001			2.0		2.0	3.0
2002			2.0		2.0	3.0
2003			4.0		4.0	6.0
2004			2.0		2.0	3.0
2005			3.0	1.0	4.0	5.3
2006			2.0		2.0	3.0
2007	1.0	1.0	2.0		4.0	10.0
2008	0.0	0.0	0.0	0.0	0.0	0.0
2009	0.0	0.0	0.0	0.0	0.0	0.0
2010	0.0	0.0	0.0	0.0	0.0	0.0
2011	0.0	0.0	0.0	0.0	0.0	0.0
2012	0.0	0.0	0.0	0.0	0.0	0.0
2013	0.0	0.0	0.0	0.0	0.0	0.0
2014	0.0	0.0	1.0	0.0	1.0	1.5
2015	0.0	0.0	1.0	1.0	2.0	2.3

3) 군사회담

■ 2015년도에는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이 0회 추진되었다.

〈표 2-23〉 군사분야 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연도	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횟수 총계	가중치 총점
가중치	×2점	×1점	×0.4점		
1989				0.0	0.0
1990				0.0	0.0
1991				0.0	0.0
1992				0.0	0.0
1993				0.0	0.0
1994				0.0	0.0
1995				0.0	0.0
1996				0.0	0.0
1997				0.0	0.0
1998				0.0	0.0
1999				0.0	0.0
2000	1.0		3.0	4.0	3.2
2001			2.0	2.0	0.8
2002			9.0	9.0	3.6
2003			6.0	6.0	2.4
2004		2.0	3.0	5.0	3.2
2005			3.0	3.0	1.2
2006		2.0	2.0	4.0	2.8
2007	1.0	3.0	7.0	11.0	7.8
2008	0.0	0.0	2.0	2.0	0.8
2009	0.0	0.0	0.0	0.0	0.0
2010	0.0	0.0	2.0	2.0	0.8
2011	0.0	0.0	1.0	1.0	0.4
2012	0.0	0.0	0.0	0.0	0.0
2013	0.0	0.0	0.0	0.0	0.0
2014	0.0	0.0	1.0	1.0	0.4
2015	0.0	0.0	0.0	0.0	0.0

※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unikorea.go.kr

4) 의회회담

- 2015년 의회회담은 개최되지 않았으므로 점수는 0점이다. 의회회담 외에 정당 교류, 정치인 교류도 없었으므로 점수는 0점이다.

〈표 2-24〉 의회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연도	국회회담	의회교류	정당간 회담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실무회담 실무접촉	정치인 교류	가중치 총점
가중치	×4점	×3점	×2점	×1점	×0.4점	×0.2점	
1989					2.0		0.8
1990					1.0		0.4
1991						1.0	0.2
1992							0.0
1993							0.0
1994							0.0
1995							0.0
1996							0.0
1997							0.0
1998							0.0
1999						1.0	0.2
2000						3.0	0.6
2001						2.0	0.4
2002						3.0	0.6
2003						2.0	0.4
2004					1.0	4.0	1.2
2005				1.0		2.0	1.4
2006			1.0			3.0	2.6
2007						9.0	1.8
2008	0.0	0.0	0.0	0.0	0.0	0.0	0.0
2009	0.0	0.0	0.0	0.0	0.0	1.0	0.2
2010	0.0	0.0	0.0	1.0	0.0	0.0	0.2
2011	0.0	0.0	0.0	0.0	0.0	0.0	0.0
2012	0.0	0.0	0.0	0.0	0.0	0.0	0.0
2013	0.0	0.0	0.0	0.0	0.0	0.0	0.0
2014	0.0	0.0	0.0	0.0	0.0	0.0	0.0
2015	0.0	0.0	0.0	0.0	0.0	0.0	0.0

〈표 2-25〉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관련 점수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가중치
1. 집권여당 간 교류	×1.0점
2. 재야당 간 교류	×0.4점
3. 군소정당 간 교류	×0.2점

5) 정치분야 공동행사

■ 2015년 정치분야 공동행사가 개최된 바 없으므로 0점이다.

〈표 2-26〉 정치분야 공동행사

연도	3·1절 공동행사	6·15공동행사	8·15공동행사	10·3개천절 공동행사	가중치 총점
2001	—	(민간)	(민간)-평양		0.0
2002	—	(민간)	(민간)-서울		0.0
2003	(민간)-서울	미개최	(민간)-평양		0.0
2004	—	(민간)-인천	조문파동 무산		0.0
2005	—	남측 당국대표단 (40명)-평양	북측 당국대표단 (17명)-서울		5.0
2006	—	북측 당국대표단 (19명), 남측 당국대표단 (13명)-광주	수해로 미개최		2.5
2007	—	남측 국회의원 10명-평양	을지훈련 등 이유 북한불참-미개최		2.5
2008	—	—	—	—	0.0
2009	—	—	—	—	0.0
2010	—	남측 공동행사 불허 각기 공동행사	—	—	0.0
2011	—	—	—	—	0.0
2012	—	—	—	—	0.0
2013	—	—	—	—	0.0
2014	—	—	—	—	0.0
2015	—	—	—	—	0.0

※ 자료: 김치관,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공동행사에 관한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통일부, 『통일백서』 2006, 2007, 2008; 2009~2014년 공동행사 참여여부는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보도자료와 신문기사 참조.

6)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

-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는 위원회, 회담체 등 매개제도의 존재(10점), 매개제도의 활동 결과로 나타난 합의서 및 공동보도문의 횟수(10점)로 평가한다. 우선, 남북 정치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는 매개제도는 정치, 군사, 외교(핵통제)의 세 영역에 대한 위원회나 회담체의 존재를 의미한다. 정치공동위원회, 군사공동위원회, 외교공동위원회의 형태로 매개기구가 존재할 수 있고, 혹은 장관급회담, 장성급회담 등의 회담체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 따라서 매개제도의 영역을 정치회담, 군사회담, 외교회담의 3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회담기구(위원회 또는 회담체)의 존재 유무로 점수를 부여한다. 매개기구의 배점은 정치, 군사, 외교의 영역에서 각각 3점씩 부여하여 총 9점을 주고, 나머지 1점을 매개기구의 존재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1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
- 2015년도는 매개제도 영역의 평가는 정치, 군사, 외교 모두에서 구성 및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0점이다. 2015년 8월 22일부터 24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으며, 2015년 11월 26일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공동보도문도 발표되었다. 공동보도문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0.6점이다.

〈표 2-27〉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동 부문 점수

연도	공동위원회	합의서	공동보도문	가중치 총점
가중치	×3점	×0.5점	×0.3점	
1989	0.0	0.0	0.0	0.0
1990	0.0	1.0	0.0	0.5
1991	0.0	1.0	2.0	1.1
1992	3.0	10.0	1.0	14.3
1993	0.0	0.0	0.0	0.0
1994	0.0	2.0	0.0	1.0
1995	0.0	1.0	0.0	0.5
1996	0.0	0.0	0.0	0.0
1997	0.0	0.0	0.0	0.0
1998	0.0	0.0	0.0	0.0
1999	0.0	1.0	0.0	0.5
2000	2.0	7.0	0.5	11.0
2001	2.0	0.0	1.0	6.3
2002	2.0	0.0	4.0	7.2
2003	2.0	0.0	4.0	7.2
2004	2.0	1.0	2.0	7.1
2005	2.0	2.0	4.0	8.2
2006	2.0	1.0	1.0	6.8
2007	2.0	5.0	3.0	9.4
2008	1.0	0.0	0.0	3.0
2009	0.0	0.0	1.0	0.3
2010	0.0	0.0	0.0	0.0
2011	0.0	0.0	0.0	0.0
2012	0.0	0.0	0.0	0.0
2013	0.0	0.0	0.0	0.0
2014	0.0	0.0	1.0	0.3
2015	0.0	0.0	2.0	0.6

7) 대화 · 회담의 정례화

- 2015년 정치분야 회담이 2회 개최되었으나 다음 회담 일정 역시 잡혀 있지 않으므로, 정례화 부문에 대한 평가점수는 0점이다.

〈표 2-28〉 대화 · 회담의 정례화 수준 평가 방법(2010년 수정)

점수	정례화 수준	설명
0점	전혀 되어있지 않음	회담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으며 다음 회담 일정도 잡혀 있지 않음. 빠른 시일 내에 혹은 몇 개월 안에 접촉을 재개하기로 하는 방식
2.5점	약간 정례화	정기적 회담 개최가 문서로 약속되어 있으나 실행되지는 않으며 다음 회담 일정을 문서화하는 방식으로 진행
5점	중간정도(보통) 정례화	회담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편이며 다음 회담 일정이 문서화되어 있음
7.5점	상당한 수준으로 정례화	정기적 개최 방식으로 회담이 진행되는 비중이 높음
10점	완벽한 수준으로 정례화	정례화된 회담 개최 방식이 안정적으로 진행됨

※ 2010년부터 이 변인에 대한 배점을 20점에서 10점으로 줄였음.

〈표 2-29〉 대화 · 회담의 정례화 부문 점수

연도	정례화 수준 (10)	연도	정례화 수준 (10)
1989	0.0	2003	5.0
1990	2.5	2004	2.5
1991	2.5	2005	2.5
1992	2.5	2006	2.5
1993	0.0	2007	2.5
1994	0.0	2008	0.0
1995	0.0	2009	0.0
1996	0.0	2010	0.0
1997	0.0	2011	0.0
1998	0.0	2012	0.0
1999	0.0	2013	0.0
2000	2.5	2014	0.0
2001	2.5	2015	0.0
2002	2.5		

8) 국제사회에서의 외교군사적 협력

- 국제사회에서 남북 외교군사적 협력은 4자회담이나 6자회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제네바군축회의(CD) 등의 국제적 외교·군사회담에 남북이 함께 참여한 경우, 그리고 유엔이나 국제기구의 회의에서 남북한이 상대방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선거지원 등을 포함한다. 외교군사 분야의 협력은 1회당 1점을 부과하고 비군사외교 분야에서 남북의 국제협력은 0.5점으로 처리하며 총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표 2-30〉 국제사회에서 외교군사적 협력 횟수 및 점수

연도	4자회담	6자회담	ARF	CD	기타	가중치 총점
가중치	×0.5점	×0.5점	×0.5점	×0.5점	×0.5점	
1989						0.0
1990						0.0
1991					2.0	0.4
1992					2.0	0.4
1993					3.0	0.6
1994					1.0	0.2
1995						0.0
1996				1.0	1.0	0.7
1997	7.0				1.0	3.7
1998	4.0				1.0	2.2
1999	5.0					2.5
2000			1.0		1.0	0.7
2001			1.0			0.5
2002			1.0			0.5
2003		1.0	1.0			1.0

연도	4자회담	6자회담	ARF	CD	기타	가중치 총점
2004		4.0	1.0			2.5
2005		3.0	1.0		2.0	2.4
2006		1.0	1.0			1.0
2007		4.0	1.0		2.0	2.9
2008		2.0	1.0		0.0	1.5
2009			0.0			0.0
2010			0.0			0.0
2011			2.0		1.0	1.2
2012			0.0			0.0
2013	0.0	0.0	0.0	0.0	0.0	0.0
2014	0.0	0.0	0.0	0.0	0.0	0.0
2015	0.0	0.0	0.0	0.0	0.0	0.0

※ 자료: 국방부, 『1999년 국방백서』, 245~246쪽; 『2003참여정부국장정책』, 165~170쪽;

※ 자료: 국방부, 『2004 국방백서』, 46~47쪽.

9) 군축

- 군축변인은 남북한 병력 수 190만 명 이상을 0점으로 하고 40만 명을 10점으로 하여 병력감축 수에 따라 비례로 점수를 부여한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2015년 남북한 통합병력 수는 183만여 명으로 2014년 전년과 동일하다. 따라서 2015년 병력감축 수준은 0.5점으로 계산된다. 남한군의 감축, 북한군의 증가가 있었으나 변동 폭이 적기 때문에 전년과 대비하면 점수 변화가 없다.

〈표 2-31〉 남북한의 연도별 병력 수 및 병력감축 수준 부문 점수

연도	남한 병력	북한 병력	병력 합계 (a)	190만명-a (b)	b÷만
1989	65만명	98만명	163만명	27.0	1.8
1990	65.5만명	99만명	164.5만명	25.5	1.7
1991	65.5만명	99.5만명	165만명	25.0	1.7
1992	65.5만명	101만명	166.5만명	23.5	1.6
1993	65.5만명	103만명	168.5만명	21.5	1.4
1994	65.5천명	104만명	169만명	21.0	1.4
1995	65.5천명	104만명	169만명	21.0	1.4
1996	69만명	105.5만명	174.5만명	15.5	1.0
1997	69만명	114.7만명	183.7만명	6.3	0.4
1998	69만명	116만명	185만명	5.0	0.3
1999	69만여명	117만여명	186만여명	4.0	0.3
2000	69만여명	117만여명	186만여명	4.0	0.3
2001	69만여명*	117만여명*	186만여명	4.0	0.3
2002	69.1만여명	117만여명	186.1만여명	3.9	0.3
2003	69.1만여명*	117만여명*	186.1만여명	3.9	0.3
2004	68.1만여명	117만여명	185.1만여명	4.9	0.3
2005	68.1만여명*	117만여명*	185.1만여명	4.9	0.3
2006	67.4만여명	117만여명	184.4만여명	5.6	0.4
2007	67.4만여명*	117만여명*	184.4만여명	5.6	0.4
2008	65.5만여명	119만여명	184.5만여명	5.5	0.4
2009	65만여명*	122만여명	187만여명	3.0	0.2
2010	65만여명	119만여명	184만여명	6.0	0.4
2011	65만여명	119만여명	184만여명	6.0	0.4
2012	63.9만여명	119만여명	182.9만여명	7.1	0.5
2013	63.3만명	119만여명	182.3만여명	7.7	0.5
2014	63만여명	120만여명	183만여명	7.0	0.5
2015	63만여명	120만여명	183만여명	7.0	0.5

※ 자료: 2012년 국방백서; 2011년 국방백서 미발간, 국방부 기본정책과에서 구두로 자료 제공; 2010년 국방백서 부록 참고; 현재 국방백서 미발간(10월 발간 예정) → 국방부 기본정책과 (02-748-6231)에서 구두로 자료 제공; 1996년 남한의 병력 3만 5천 증가는 방위병 제도 폐지에 따른 방위병 현역화로 인한 것임.¹¹ 『국방백서』, 1988~2000년 각 연도, 2004, 2006년도; 2001~2003년은 국방백서 발간 중단으로 국방정책 소개책자; 2008년 자료 출처: 2008국방백서 부록 참고 (2008년 12월 기준)

11 국방부, 『1996~1997년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1996), 64쪽.

※ 2013년 자료 출처:

1. 남한 병력-『국방개혁 기본계획 14~30』 13쪽, 2014년 발행. '국방부 홈페이지-정보공개-간행물-정책자료집'에서 열람. 국방부 홈페이지 안에서 2013년 말 병력이 '63.3만명'으로 표기된 e-book 『국방개혁 기본계획 14~30』을 찾아서 위 표에 반영하였음.
2. 북한 병력-『북한이해 2013』 108쪽,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이 자료는 사실 『2012 국방백서』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것.

※ 2014년 자료 출처: 국방부, 『2014년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 239.

※ 2015년 자료 출처: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6』(서울: 통일교육원, 2016), p. 145.

10)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점수는 상호 군사적 대결 혹은 긴장고조를 기준으로 한 평가로 2010년에 새로 만들어진 항목이다. 신설한 군사적 긴장완화 관련부문 점수는 다음 <표 2-32>와 같이 배점을 정한다.

■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점수는 군사적 긴장 및 상호 대치가 없는 상태에 기본점수 5점을 부여하고 긴장의 고조에 따라 점수를 낮추고 상호통합의 정도가 증가하는 데 따라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전면전에 돌입한 상태를 최저점인 0점으로 계산하고 군사적 대결과 불신이 해소된 상호통합도가 완벽한 상태를 최고점인 10.0점으로 기록한다. 이 항목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긴장완화 혹은 긴장고조로 상호통합의 정도가 순행 또는 역행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이 부문의 점수가 추가되었으며 신설 항목을 위해 정례화 점수를 10.0점으로 축소하고 새롭게 10.0점을 확보하였다. 또한 점수가 새롭게 변화되면서 정치분야의 관계적 통합지수 역시 총점이 변화되었다.

■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항목을 새롭게 개발한 것은 상대체제 인정 행위를 전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평가해오던 기존의 평가가 현실과 괴리가 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신설된 항목을 통해 2008년

부터 상대체제에 대한 불인정을 바탕으로 군사적 충돌의 수준이 증가한 현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의 경우 3월 천안함 사건, 11월 연평도 사건에 이르기까지 유례없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점수는 기본점수 5.0점에서 4.0점(국지적 교전이 일어나 사상자가 50명 이상 발생)이 감소한 1.0점으로 계산한다.

〈표 2-32〉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 배점(2010년 신설)

점수(점)	내용
10.0	군사적 협력이 완벽히 이루어진 상태임
9.5	군사적 협력이 거의 이루어진 상태임
9.0	군사적 대치 상태가 현저히 완화되고 군사적 협력이 추진되어 중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8.5	군사적 대치 상태가 완화되고 군사적 협력이 추진되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8.0	군사적 대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추진되어 현저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군사적 협력이 시도되는 상태임
7.5	군사적 대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추진되어 중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7.0	군사적 대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추진되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6.5	군사적 대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보다 집중적으로 시도되는 상태임
6.0	군사적 대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시도되는 초기 상태임
5.5	군사적 대치 상황은 지속되나 상대방에 대한 의도적 긴장 유발 행위는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임
5.0	군사적 대치 상황은 지속되나 상대방에 대한 의도적 긴장 유발 행위는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임
4.5	라디오, 신문,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통한 상대방에 대한 심리전을 전개하는 긴장 상태임
4.0	공식 성명, 기자회견 등을 통한 상호 구두위협을 통한 긴장 조성의 상태임
3.5	선박 나포, 억류 등과 같은 사건을 통해 보다 직접적인 일방적 행위가 일어나는 긴장 상태임

점수(점)	내용
3.0	전방에서의 전투부대 재배치 등 군사 이동 및 동원이 일어나고 상호 경계선에 대한 침범과 핵공격 위협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임
2.5	상대방 영토에 대한 총격 및 포격이 일어나는 긴장 상태임
2.0	일반적 사격 및 포격이 아닌 공격 및 대응에 의한 교전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로, 사상자가 0~10명에 이르는 경우임. 미사일 발사 등 긴장 조성 행위를 포함
1.5	일반적 사격 및 포격이 아닌 공격 및 대응에 의한 교전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로, 사상자가 10~50명에 이르는 경우임
1.0	일반적 사격 및 포격이 아닌 공격 및 대응에 의한 교전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로, 사상자가 50명 이상에 이르는 경우임. 핵실험 등 긴장 조성 행위를 포함
0.5	생화학무기의 제한적인 사용, 전쟁 선언, 영토의 일부 점령 등이 일어나며 기간 내 (지속적인) 국지적 충돌 및 전투가 벌어지는 상태임
0	군사적 긴장과 대치에서 전면적인 전쟁 국면에 돌입한 상태임

〈표 2-33〉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점수

연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10점)
1989	4.0
1990	4.0
1991	4.0
1992	2.0
1993	3.0
1994	3.0
1995	3.5
1996	1.0
1997	2.5
1998	3.5
1999	1.5
2000	4.0
2001	4.0
2002	2.0
2003	4.0

연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10점)
2004	4.5
2005	5.0
2006	4.0
2007	4.5
2008	2.0
2009	1.5
2010	1.0
2011	2.5
2012	2.5
2013	1.0
2014	2.0
2015	2.0

※ 자료: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점수의 근거에 대해서는 연도별 남북통합지수 보고서 참고, 연도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일지, 통일연구원, 남북관계 연표 참고.

■ 2015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남북 간 정치,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었으며 아래의 정황을 고려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점수는 2점이다.

■ 2.0점은 “일방적 사격 및 포격이 아닌 공격 및 대응에 의한 교전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를 포함하며 “사장자가 0~10명”에 이르는 상태이다. 2015년에도 북한의 미사일, 로켓 시험 발사가 빈번했으며, 7월 11일에는 북한군의 MDL 침범으로 우리군의 경고사격이 있었고, 8월 4일 DMZ에서 목함지뢰 도발 사건이 발생하여 2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였다. 북한은 휴전선지역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한 포격을 가하고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는 등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8.25합의’로 고비를 넘겼지만 2015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5년 주요 군사적 사건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34〉 2015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내용

일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2월 7일	北 신형 反함선 로켓 시험 발사
2월 8일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3월 2일	北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한미연합훈련 관련 '북침핵전쟁연습'이라며 '불세례' 위협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한미군사연습 관련 '우발적 불꽃이 튈 수 있다면서 사소한 도발 책동에도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대담하겠다.'고 위협 北 단거리 미사일(2발) 동해상으로 발사 정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 경고(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北 우리민족끼리, 대북전단 관련 '조준격파', '대포와 미사일로 대응' 등 위협
3월 12일	北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지대공미사일 발사(7기) 훈련 실시
3월 22일	北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공개통고, 우리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무차별적인 기구소멸작전 진입', '연속적 징벌 타격' 등 위협
4월 2일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4.2 1발, 4.3 4발) 발사
5월 8일	北 서남전선군사령부 비상특별경고, 우리측이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며 예고없이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위협 정부 북한의 위협에 유감을 표명하고 도발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 발표(국방부)
5월 9일	北 서남전선군사령부 명의의 대남위협 통지문 발송
5월 13일	北 백령도·연평도에서 사격훈련 실시(5.13~15)
5월 20일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 핵타격 수단 소형화·다종화, 장거리 미사일 정밀화, SLBM 시험 성과 등을 주장하며 위협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를 미국의 독단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라며 비난 정부 北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과 관련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포함한 일체의 위협과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5월 24일	北 국방위 정책국 성명, 천안함 폭침 관련 북한 소행을 부인하며 공동조사, 남북대화에 앞선 5.24조치 해제 등 요구 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자위적 핵 무장력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수단이며, 우리측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난
6월 4일	北 조선인민군 전략국 대변인 담화, 남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우리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
6월 14일	北 KN-01 단거리 미사일 3발 동해상으로 발사

일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6월 15일	北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①남북관계 · 통일문제는 자주적으로 해결 ②체제통일 불추구 ③북침전쟁연습 중단 ④도발행위 중단 등 남북관계 개선에 유리한 분위기 마련해 나갈 것 ⑤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적 조치 취해나갈 것 등의 입장을 '위임'에 따른 것이라며 주장 정부 북한에 군사적 긴장 조성 행동 중단, 부당한 전제조건 없이 당국간 대화의 장에 나올 것, 민간교류 호응을 촉구(통일부 대변인 성명)
7월 2일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국방부장관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 발언(北 다시 도발 시 지휘세력까지 응징)에 대해 비난 및 '도발의 본거지까지 초도화' 위협
7월 11일	북한군(10여명) MDL 침범, 우리군은 경고사격 실시
7월 25일	北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한반도 서해 해역에서 우리 軍의 포사격훈련 등에 대해 비난하며 '직접조준사격' 위협
8월 4일	DMZ에서 지뢰도발 사건 발생
8월 6일	北 ARF 계기 기자회견을 개최,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고 추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북정책 변화 촉구
8월 10일	국방부 북한의 DMZ 지뢰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을 엄중히 촉구
8월 12일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UFG 관련 '백악관 · 청와대 등이 타격수단들의 조준경 안에 있다'며 '무자비한 불소나기' 등 위협
8월 13일	국회, 北 DMZ 지뢰도발 규탄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UFG 관련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자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표현'이라며 '미국의 핵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위협
8월 14일	北 국방위 정책국 담화, DMZ 지뢰 매설을 부인하며 증거 제시를 요구 北 통지문, DMZ 지뢰 매설 부인 南 통지문, 지뢰도발 사건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 北 조선인민군 전선연합부대들의 공개담화, 우리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관련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위협
8월 15일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에 대화 · 협력의 길로 나와 민생향상, 경제발전의 기회를 잡을 것을 촉구 北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공개경고장, 대북심리전 방송은 직접적인 전쟁도발행위라며 중단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할 것이라며 위협 北 국방위 대변인 성명, UFG 연습 중단을 요구하며, 강행시 군사적 대응이 거세질 것이라며 위협

일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8월 20일	北 서한, 우리측 대북심리전방 중단을 요구하며, 현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해 나갈 의사 표명 北 우리측 대북확성기를 향해 포격 北 통지문, 48시간 내 심리전 방송 중지 및 수단 미철거시, 확정까지 예견한 강력한 군사행동 개시된다는 최후통첩을 전달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지뢰도발·확성기 포격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전선대연합부대들에 8.21 17:00부터 완전무장한 전시상태 이전,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한다는 명령 하달, 군사작전 지휘관 급파
8월 21일	北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 북측 포격사실을 부인하며 우리측 대응사격을 도발이라고 주장, 최후통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응당한 징벌 위협 南 통지문, 북한의 계속된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응징,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표명 南 통지문, 우리 확성기 방송이 北 도발에 따른 응당한 대응 조치이며, 도발·위협에 단호한 대처할 것, 사태 수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은 명의를 시비하면서 접수 거부 北 통지문, MDL에서 발생한 두 사건이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최후통첩 시간까지 우리를 주시하겠다고 언급
8월 22일	남북 고위당국자접촉(8.22~24) 개최, 북한의 DMZ 지뢰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통해 이번 사태를 평화적으로 수습,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계기 마련
8월 25일	北 황병서 총정치국장 조선중앙TV 출연,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분위기가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남북 합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
8월 27일	北 김양건 중통기자 질의 대답, 남북 고위당국자접촉을 계기로 '불신과 대결 해소, 관계개선의 길에 들어서야'한다며, '관계개선과 통일의 길로 손잡고 나갈 것'을 주장
8월 28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개최 계기 남북 고위당국자접촉 합의를 '남북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계기'라고 평가하며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꿔가야 한다'고 언급
9월 14일	北 국가우주개발국 국장 중통기자 질의 대답, '선군조선의 위성들이黨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창공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시사
10월 24일	우리 해군, 연평도 인근 서해 NLL 침범한 北 어선단속정 경고사격
10월 25일	조평통 대변인 중통 문답, 우리측의 서해상 북한경비정에 대한 경고사격 비난
11월 28일	北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실패

※ 자료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관계 주요일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841>>.

11) 상호체제인정

- 상호체제인정은 기존에 남한과 북한에서 교류와 접촉의 대상을 규제하는 법을 기준으로 한 평가이다. 2011년에 체제 간 상호비방의 강도를 기준으로 남북 정치통합의 정도를 반영하려 하였으나 보다 과학적인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방의 수준과 강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기존의 방식대로 상호체제를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영역으로 제한하여 평가하였다. 법 개정 관련부문 점수는 남북교류 관련법과 국가보안법(남한), 형법(북한) 등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두 개의 법률을 선택하여 총 4개의 법률에 각 2.5점씩 총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표 2-35〉 상호체제인정 정도(법 개정)

점 수	내 용
0.0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제정 및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음
0.5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제정 및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1.0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짐
1.5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재개정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2.0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재개정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상당 수준으로 법제도가 확립됨.
2.5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가 완벽한 수준으로 제정(개정)되어 있음

- 먼저 기존의 남북한 법 개정 관련부문 상호인정 점수는 다음과 같다. 상대체제 인정행위 중 법 개정 관련점수는 5.0점을 기준으로 환산했다. 남한의 경우, 2015년 남북교류협력 관련법은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재개정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해당하는 1.5점을 부여한다. 2005~

2010년 기간에 2.0점으로 올라갔던 남북교류관련법은 2011년 이후 5.24 조치의 영향으로 2.0점에서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국가보안법은 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는 않으며 간헐적으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1991년 이후 0.1점을 부여하였다. 북한의 경우, 교류협력 관련법은 전무하여 0점으로 처리하고, 남한의 국가보안법에 대비되는 형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5년 현재 0.3점을 부여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법률적 측면에서 2015년 점수는 전년과 동일한 1.9점으로 평가한다.

〈표 2-36〉 남북한의 상호체제인정 부문 점수

연도	상호체제인정(법 개정)				가중치 총점
	남한		북한		(10점)
	교류협력 관련법 (2.5점)	국가보안법 (2.5점)	교류협력 관련법 (2.5점)	형법 (2.5점)	
1989	0.5	0.0	0.0	0.0	0.5
1990	1.0	0.0	0.0	0.0	1.0
1991	1.0	0.1	0.0	0.0	1.1
1992	1.0	0.1	0.0	0.0	1.1
1993	1.0	0.1	0.0	0.0	1.1
1994	1.0	0.1	0.0	0.0	1.1
1995	1.0	0.1	0.0	0.1	1.2
1996	1.0	0.1	0.0	0.1	1.2
1997	1.0	0.1	0.0	0.1	1.2
1998	1.0	0.1	0.0	0.1	1.2
1999	1.0	0.1	0.0	0.2	1.3
2000	1.0	0.1	0.0	0.2	1.3
2001	1.0	0.1	0.0	0.2	1.3

연도	상호체제인정(법 개정)				가중치 총점
	남한		북한		(10점)
	교류협력 관련법 (2.5점)	국가보안법 (2.5점)	교류협력 관련법 (2.5점)	형법 (2.5점)	
2002	1.5	0.1	0.0	0.2	1.8
2003	1.5	0.1	0.0	0.2	1.8
2004	1.5	0.1	0.0	0.3	1.9
2005	2.0	0.1	0.0	0.3	2.4
2006	2.0	0.1	0.0	0.3	2.4
2007	2.0	0.1	0.0	0.3	2.4
2008	2.0	0.1	0.0	0.3	2.4
2009	2.0	0.1	0.0	0.3	2.4
2010	2.0	0.1	0.0	0.3	2.4
2011	1.5	0.1	0.0	0.3	1.9
2012	1.5	0.1	0.0	0.3	1.9
2013	1.5	0.1	0.0	0.3	1.9
2014	1.5	0.1	0.0	0.3	1.9
2015	1.5	0.1	0.0	0.3	1.9

12) 관계통합지수 종합

- 정치영역의 관계통합지수는 지수를 구성하는 10개의 변인의 점수를 합계로 산정된다. 2015년에는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8월 22~24일), 남북 당국회담(12월 11~12일)이 개최되어 고위급 정치회담은 전년 대비 0.8점 상승하였다. 군사분야 회담은 개최되지 않아 0.4점이 감소하였으며,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점수는 전년과 동일하다.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과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각각 공동 보도문이

발표되어 매개제도 구성과 활동에서는 0.3점 상승하였다. 군사적 긴장 수위는 지속되어 전년과 동일한 2.0점이었다. 2015년 정치영역의 관계적 통합지수는 0.5점이 상승한 7.3점을 기록했다.

〈표 2-37〉 2014년/2015년 정치영역 관계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2014년	2015년	증감	요인
실무정치회담	0.2	0.0	-0.2	
고위급정치회담	1.5	2.3	+0.8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08.22~24) 남북 당국회담(12.11~12)
군사분야회담	0.4	0.0	-0.4	
의회회담	0.0	0.0	0.0	남북 대화 단절 지속
정치분야공동행사	0.0	0.0	0.0	남북 교류 단절 지속
매개제도 구성과 활동	0.3	0.6	+0.3	공동보도문 발표
대화·회담 정례화	0.0	0.0	0.0	남북 교류 단절 지속
외교군사적 협력	0.0	0.0	0.0	남북 대화 단절 지속
군축	0.5	0.5	0.0	군사력유지
정치군사적 긴장완화	2.0	2.0	0.0	DMZ 지뢰 도발 사건 등 군사적 긴장고조
상호체제인정	1.9	1.9	0.0	법제도 수준 동일, 상호비방 수준 심각
계	6.8	7.3	+0.5	

라. 종합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을 포함하는 정치 영역 구조통합을 평가한 전체지수를 종합하면 다음 <표 2-38>와 같다.

<표 2-38>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

연도	제도적 통합(90)			관계적 통합(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집행 기구 (30)	단일 제도화 (30)	공동 법제화 (30)	실무 정치 회담 (20)	고위급 정치 회담 (20)	군사 회담 (20)	의회 회담 (20)	남북 공동 행사 (10)	매개 제도 (20)	정 례 화 (10)	국제 협력 (10)	군축 (10)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10)	상호 체제 인정 (10)		
1989	0.0	0.0	1.0	1.0	0.0	0.0	0.8	0.0	0.0	0.0	0.0	1.8	4.0	0.5	9.1	0.0
1990	0.0	0.0	1.0	2.2	6.0	0.0	0.4	0.0	0.5	2.5	0.0	1.7	4.0	1.0	19.3	1.0
1991	0.0	0.0	1.0	2.0	4.0	0.0	0.2	0.0	1.1	2.5	0.4	1.7	4.0	1.1	18.0	1.0
1992	0.0	0.0	2.0	15.4	6.0	0.0	0.0	0.0	14.3	2.5	0.4	1.6	2.0	1.1	45.3	3.0
1993	0.0	0.0	2.5	0.8	0.0	0.0	0.0	0.0	0.0	0.0	0.6	1.4	3.0	1.1	9.4	0.0
1994	0.0	0.0	2.6	2.0	0.0	0.0	0.0	0.0	1.0	0.0	0.2	1.4	3.0	1.1	11.3	1.0
1995	0.0	0.0	3.1	0.0	0.0	0.0	0.0	0.0	0.5	0.0	0.0	1.4	3.5	1.2	9.7	0.0
1996	0.0	0.0	3.2	0.0	0.0	0.0	0.0	0.0	0.0	0.0	0.7	1.0	1.0	1.2	7.1	0.0
1997	0.0	0.0	3.3	0.0	0.0	0.0	0.0	0.0	0.0	0.0	3.7	0.4	2.5	1.2	11.1	1.0
1998	0.0	0.0	3.8	0.4	0.0	0.0	0.0	0.0	0.0	0.0	2.2	0.3	3.5	1.2	11.4	1.0
1999	0.0	0.0	4.3	0.6	1.6	0.0	0.2	0.0	0.5	0.0	2.5	0.3	1.5	1.3	12.8	1.0
2000	0.0	0.0	4.4	2.6	11.0	3.2	0.6	0.0	11.0	2.5	0.7	0.3	4.0	1.3	41.6	3.0
2001	0.0	0.0	4.5	0.0	3.0	0.8	0.4	0.0	6.3	2.5	0.5	0.3	4.0	1.3	23.6	2.0
2002	0.0	0.0	4.6	0.4	3.0	3.6	0.6	0.0	7.2	2.5	0.5	0.3	2.0	1.8	26.5	2.0
2003	0.0	0.0	4.7	0.2	6.0	2.4	0.4	0.0	7.2	5.0	1.0	0.3	4.0	1.8	33.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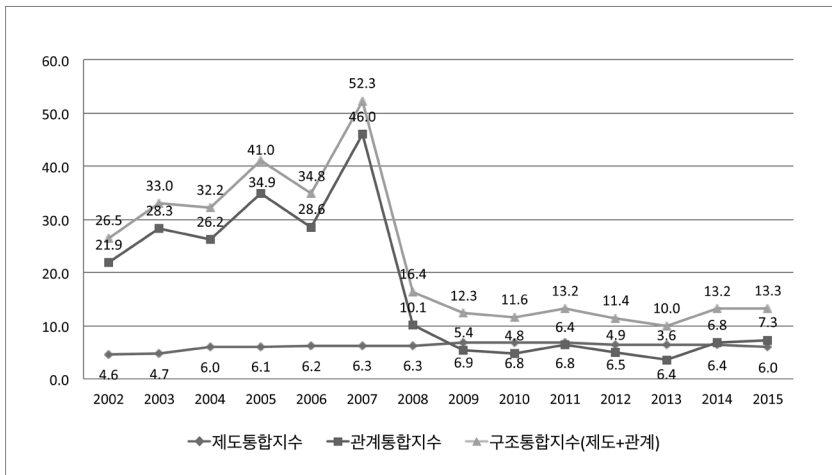
연도	제도적 통합(90)			관계적 통합(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집행 기구 (30)	단일 제도화 (30)	공동 법제화 (30)	실무 정치 회담 (20)	고위급 정치 회담 (20)	군사 회담 (20)	의회 회담 (20)	남북 공동 행사 (10)	매개 제도 (20)	정 례 화 (10)	국제 협력 (10)	군축 (10)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10)	상호 체제 인정 (10)		
2004	0.0	0.0	6.0	0.0	3.0	3.2	1.2	0.0	7.1	2.5	2.5	0.3	4.5	1.9	32.2	2.0
2005	0.0	0.0	6.1	1.2	5.3	1.2	1.4	5	8.2	2.5	2.4	0.3	5.0	2.4	41.0	3.0
2006	0.0	0.0	6.2	0.6	3.0	2.8	2.6	2.5	6.8	2.5	1.0	0.4	4.0	2.4	34.8	2.0
2007	0.0	0.0	6.3	1.8	10.0	7.8	1.8	2.5	9.4	2.5	2.9	0.4	4.5	2.4	52.3	3.0
2008	0.0	0.0	6.3	0.0	0.0	0.8	0.0	0.0	3.0	0.0	1.5	0.4	2.0	2.4	16.4	1.0
2009	0.0	0.5	6.4	0.8	0.0	0.0	0.2	0.0	0.3	0.0	0.0	0.2	1.5	2.4	12.3	1.0
2010	0.0	1.0	5.8	0.0	0.0	0.8	0.2	0.0	0.0	0.0	0.0	0.4	1.0	2.4	11.6	1.0
2011	0.0	1.0	5.8	0.0	0.0	0.4	0.0	0.0	0.0	0.0	1.2	0.4	2.5	1.9	13.2	1.0
2012	0.0	1.0	5.5	0.0	0.0	0.0	0.0	0.0	0.0	0.0	0.0	0.5	2.5	1.9	11.4	1.0
2013	0.0	0.5	5.9	0.2	0.0	0.0	0.0	0.0	0.0	0.0	0.0	0.5	1.0	1.9	10.0	0.0
2014	0.0	0.5	5.9	0.2	1.5	0.4	0.0	0.0	0.3	0.0	0.0	0.5	2.0	1.9	13.2	1.0
2015	0.0	0.5	5.5	0.0	2.3	0.0	0.0	0.0	0.6	0.0	0.0	0.5	2.0	1.9	13.3	1.0

■ 2015년 정치영역의 남북한 구조통합지수는 13.25점으로 전년에 비해 0.1점이 상승하였다. 통합단계는 전년과 동일한 1단계 수준으로 평가된다.

■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한 축인 제도통합 부문 0.4점 하락하였고, 다른 한 축인 관계통합 부분은 0.5점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0.1점이 상승하였다.

- 제도통합 부문은 정치분야나 군사분야의 남북공동집행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기구구성의 논의도 전혀 이루어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정도는 0.5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공동법제화 수준은 전년 대비 0.4점 하락하여 5.5점이다.
- 관계통합 부문은 각종 회담 부분에서 남북관계의 단절과 대립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고위급정치회담이 2회 개최되면서 작년보다 0.8점 상승하였다. 실무회담, 군사회담, 의회회담 및 공동행사 등은 개최되지 않아 해당 6개 부문의 관계통합은 0점을 기록하였다. 군축 부분은 남북군의 감축 변동 폭이 적으므로 점수 변화는 없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부분은 작년과 동일한 2.0점이었다. 상호체제인정 부문에서는 전년과 비교해 동일한 법제화 수준인 1.9점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2-4〉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3. 사회문화

가. 지수구성

- 사회문화영역의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제도적 통합과 관계적 통합은 반드시 누적적 단계에 따라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실현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적 통합은 관계적 통합이 일정한 수준까지 올랐을 때 관계적 통합을 제도적으로 보장 또는 확정하는 방식으로 뒤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사회문화영역의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변인과 배점은 아래와 같다.

〈표 2-39〉 사회문화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영역	변인	배점
제도통합	사회문화정책 공동집행기구	30
	사회문화분야 남북 법제화	30
	사회문화제도의 단일화	30
	소계	90
관계통합	사회문화 인적 왕래	20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공동행사)	20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20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10
	인적 이동의 자유화	20
	언론·방송의 자유화	20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20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30
	소계	160
합계		250

■ 이상의 변인들에 부여된 점수를 가산하여 사회문화적 통합의 단계를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 0단계 (교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 10점 이하
- 1단계 (비정기적인 교류, 접촉빈도 낮음(제한적 범위에서 진행)): 11~20점
- 2단계 (비정기적인 교류, 접촉빈도 높음): 21~40점
- 3단계 (정기적인 교류, 공동 협의기구(매개 제도) 구성): 41~70점
- 4단계 (공동협의기구(매개제도)의 상시화): 71~90점
- 5단계 (주요 대회 공동개최, 자유화 진행): 91~110점
- 6단계 (남북 사회문화 공동집행기구 구성): 111~130점
- 7단계 (일부 사회문화제도 단일화 · 공동법제화): 131~160점
- 8단계 (광범위한 사회문화제도 단일화 · 공동법제화): 161~190점
- 9단계 (포괄적 사회문화정책 공동집행기구에 위임): 191~220점
- 10단계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완성): 221~250점

■ 남북통합 수준을 단계로 구분하면, 남북 접촉 · 교류기(0~2단계), 남북 협력도약기(3~5단계), 남북연합기(6~8단계), 통일 완성기(9~10단계)이다. 남북통합은 3단계, 6단계, 9단계에서 질적으로 도약(take-off)한다. 마지막의 실질적인 통일 시기는 남북한 간 사회문화 분야에서 자유화 · 제도화 · 단일화 등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나. 제도통합지수

■ 사회문화영역의 제도통합을 측정하는 지표와 배점은 아래와 같다. 단, 사회문화영역의 남북 공동 집행기구는 구성뿐만 아니라 기구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수준까지 포함하며, 남북한 간 사회문화제도의 표준화/단일화의 영역은 대표적 측정지표로서 소통의 도구로서 언어와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사회복지제도의 단일화로 한정한다.

■ 제도통합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와 배점의 세부 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40〉 사회문화영역 제도적 통합의 지표와 배점

통합 영역	지표	세부 지표	배점
제도적 통합 (총 90점)	남북 공동의 사회문화정책 집행기구 (30점)	공동의 집행기구 구성 논의	10
		공동의 집행기구 구성 추진	10
		공동의 집행기구 활성화	10
	남북한 사회문화제도 단일화 (30점)	언어의 표준화	10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10
		사회복지제도의 단일화	10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30점)	남북한 법제화 수준	15
		북한 법제의 실효성	15

1) 남북한 공동의 사회문화정책 집행기구

■ 2015년 현재로서는 남북한 사회문화정책을 공동으로 집행할 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에 해당되는 점수는 30점 만점 중 0점이다.

2) 남북한 사회문화제도의 단일화

■ 2015년 현재 남북한 당국 간 사회문화제도(언어, 방송통신기술, 사회

복지제도 등)를 표준화 또는 단일화하려는 조치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중 사회복지제도의 단일화에 대한 조치에 대해 부여하는 점수는 10점 만점 중 0점이다.

- 하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남북한 간 사회문화제도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 방송통신기술의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지표를 세분화하여 반영기로 하였다.
-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에 대한 배점은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환경조성 2점,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합의 도출 3점,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실행 5점으로 세분화되었다. 이중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환경조성의 경우 남한주민의 이동전화 이용률¹²과 북한주민의 손전화 이용률¹³을 평균한 점수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0~25%는 0.5점, 26~50%는 1.0점, 51~75%는 1.5점 76~100% 2.0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가장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남한주민 이동전화 이용률은 2015년 기준 99.9%이며, 북한주민의 손전화 이용률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 통일 의식조사”에 따르면 47.2%에 이른다. 따라서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환경조성에 대한 점수는 평균 이용률 73.6%으로 해당하는 점수는 1.5점이다. 결과적으로 2015년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에 대한 조치에 대해 부여하는 점수는 10점 만점 중 1.5점이다.

1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1#SubCont>

13 정은미, “의식주 생활변화와 정보화,” 『2016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김정은 정권 5년, 북한사회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 (2016년 8월 24일).

■ 한편 민간 차원에서 거래말큰사전 편찬사업을 통해 언어의 표준화가 시도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거래말큰사전 편찬 공정률은 2010년 12월 기준으로 56.7%를 기록하여 절반을 넘어서었다.¹⁴ 이후 남북 관계의 경색이 지속되면서 남북한 간 공동회의가 중단되었으나 2014년 7월에 재개되어 2015년 5월 5~11일 중국 선양에서 북측 관계자와 만나 거래말큰사전 편찬회의와 집필회의를 하였다.¹⁵ 2015년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제25차 《거래말큰사전》 공동편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림말 집필 원고 24,076개를 검토하였으며, 이 중 19,799개의 원고를 합의하였다.¹⁶ 하지만 남북한 간 언어 표준화 작업은 2010년 12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남북한 간 언어 표준화에 부여하는 점수는 10점 만점 중 5.7점이다.

3)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법제화 변수

■ 남북한 사회문화 관련 공동법제화는 크게 법제화의 수준과 법제의 실효성으로 구분된다.

■ 먼저, 사회문화영역의 법제화 수준은 북한의 법제화 수준, 남북간 법제의 수렴정도, 남북 공동법제의 구속력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전문가조사를 통해 측정된다. 전문가조사는 2016년 6월에 10명의 북한법 전문가들이

14 이성규, “남북경색으로 ‘거래말큰사전’사업 차질,” 「연합뉴스」, 2011년 5월 29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5/27/02000000000KR2011052704300002.HTML?did=1179m>>.

15 김호준, “거래말큰사전 남북 편찬회의 5~11일 중 선양서 개최,” 「연합뉴스」, 2015년 5월 5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5/02000000000AKR20150505049400043.HTML?input=1179m>>.

16 김호준, “거래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회의 7~13일 중 다롄서 개최,” 「연합뉴스」, 2015년 12월 1일: <<http://m.yna.co.kr/amp/kr/contents/?cid=AKR20151201061900014>>.

세 개의 지표를 10점 척도로 하여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 전문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문화영역에서 북한의 법제화 수준에 5.5점, 남북한 간 법제의 수렴도에 3.3점, 그리고 남북한 공동법제의 구축력에 2.8점이 부여되었다. 각 항목별 점수를 다시 5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합한 결과, 2015년 사회문화영역의 남북한 법제화 수준은 15점 만점 중 5.8점이다.

〈표 2-41〉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법제화 정도

세부 지표	평균점수 (항목별 10점 만점)	상대점수 (항목별 5점 만점)	법제화 수준 (합계/15점 만점)
사회문화영역 북한의 법제화 수준	5.5	2.8	5.8/15
사회문화영역 남북 간 법제의 수렴도	3.3	1.7	
사회문화영역 남북 공동법제의 구축력	2.8	1.4	

〈표 2-42〉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법제화 전문가 설문조사 연도별 추이

세부 지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회문화영역 북한의 법제화 수준	4.7	4.4	5.1	5.1	6.0	5.2	5.5
사회문화영역 남북 간 법제의 수렴도	3.6	3.2	3.4	3.3	3.8	3.8	3.3
사회문화영역 남북 공동법제의 구축력	5.0	3.8	3.1	3.1	3.4	3.7	2.8
평균	4.4	3.8	3.9	3.8	4.4	4.2	3.9

■ 법제의 실효성은 북한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문화 자유화 관련 기본 법 조항들이 실제로 현실사회에서 보장되고 있는가 여부로 판단한다. 측정지표와 배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북한의 사회문화 자유화 법제의 실효성에 대한 점수는 문헌조사, 북한법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북한주민(탈북자)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2015년 기간 동안 사회문화 자유화와 관련된 북한 법제가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바는 없으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6년에 실시한 2016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 결과¹⁷를 보면,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질문에 “자주 가보았다” 또는 “가끔 가보았다”로 응답한 비율이 12.0%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 헌법에 명시된 거주·여행의 자유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해외여행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의 거주·여행의 자유 관련 법제의 부분적 실효성을 인정하여 2.5점을 부여한다. 나머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 관련 법 조항과 신앙의 자유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되어 각각 0점을 부여한다.

〈표 2-43〉 북한의 사회문화 자유화 법제의 실효성

헌법조항	실효성 수준*	실효성 점수*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짐	실효성 전혀 없음	0/5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짐	실효성 전혀 없음	0/5
모든 국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짐	부분적 실효성 있음	2.5/5
합계 (15점 만점)	2.5	

※ 실효성 점수는 전면적 효력=5점, 부분적 효력=2.5점, 무효력=0점으로 구분

17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김정은 정권 5년, 북한 사회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 (2016년 8월 24일) 참조.

■ 이상의 남북 사회문화 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를 종합해보면, 2015년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점수는 남북 법제화 정도 5.8점과 북한의 자유화 법제의 실효성 2.5점을 합하여 30점 만점 중 8.3점으로 2014년보다 0.6점 하락하였다.

〈표 2-44〉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

연도	구분	법제의 실효성	남북한 법제화 정도	남북한 법제화 점수 (합계)
1989		0.0	1.1	1.1
1990		0.0	1.1	1.1
1991		0.0	1.1	1.1
1992		0.0	1.3	1.3
1993		0.0	1.5	1.5
1994		0.0	1.6	1.6
1995		0.0	1.9	1.9
1996		0.0	2.2	2.2
1997		0.0	3.2	3.2
1998		2.5	4.4	6.9
1999		2.5	4.5	7.0
2000		2.5	4.6	7.1
2001		2.5	4.7	7.2
2002		2.5	4.7	7.2
2003		2.5	4.9	7.4
2004		2.5	5.0	7.5
2005		2.5	5.0	7.5
2006		2.5	5.0	7.5
2007		2.5	6.6	9.1
2008		2.5	6.6	9.1
2009		2.5	6.7	9.2
2010		2.5	5.7	8.2
2011		2.5	5.8	8.3
2012		2.5	5.8	8.3
2013		2.5	6.6	9.1
2014		2.5	6.4	8.9
2015		2.5	5.8	8.3

4) 제도통합지수 종합

- 사회문화영역 제도통합지수는 세 가지의 지표인 남북 공동의 사회문화 정책 공동집행기구, 남북한 사회문화제도 단일화, 남북한 사회문화 법 제화 각각에 부여된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2015년 사회문화영역 제도적 통합지수는 90점 만점 중 15.5점으로 2014년과 비교했을 때 1.1점 하락하였다.
- 검색된 남북관계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5.24조치 이후 사회문화영역 남북교류협력이 크게 위축되어 남북한 사회문화제도의 단일화 논의를 진행시킬 기회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어 사회문화영역 제도통합지수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표 2-45〉 사회문화영역 제도통합지수 종합

연도 \ 구분	공동집행기구 (30)	제도 단일화 (30)	남북한 법제화 (30)	제도적 통합지수 (합계)
1989	0.0	0.0	1.1	1.1
1990	0.0	0.0	1.1	1.1
1991	0.0	0.0	1.1	1.1
1992	0.0	0.0	1.3	1.3
1993	0.0	0.0	1.5	1.5
1994	0.0	0.0	1.6	1.6
1995	0.0	0.0	1.9	1.9
1996	0.0	0.0	2.2	2.2
1997	0.0	0.0	3.2	3.2
1998	0.0	0.0	6.9	6.9
1999	0.0	0.0	7.0	7.0
2000	0.0	0.0	7.1	7.1

연도 \ 구분	공동집행기구 (30)	제도 단일화 (30)	남북한 법제화 (30)	제도적 통합지수 (합계)
2001	0.0	0.0	7.2	7.2
2002	0.0	0.0	7.2	7.2
2003	0.0	0.0	7.4	7.4
2004	0.0	0.0	7.5	7.5
2005	0.0	0.9	7.5	8.4
2006	0.0	1.7	7.5	9.2
2007	0.0	2.6	9.1	11.7
2008	0.0	3.5	9.1	12.6
2009	0.0	5.0	9.2	14.2
2010	0.0	5.7	8.2	13.9
2011	0.0	5.7	8.3	14.0
2012	0.0	5.7	8.3	14.0
2013	0.0	5.7	9.1	14.8
2014	0.0	7.7	8.9	16.6
2015	0.0	7.2	8.3	15.5

다. 관계통합지수

■ 사회문화영역의 관계통합을 측정하는 지표는 인적왕래의 규모,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빈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사회문화영역의 비중, 이산가족상봉의 상시화, 이동의 자유화, 언론방송의 자유화, 국제대회에서의 민족적 단결성, 마지막으로 정책협회의 정례화와 공동성 등이 포함된다.

■ 사회문화 관계통합을 구성하는 지표와 배점의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46〉 사회문화영역 관계적 통합 지표와 배점

통합영역	지표	배점
관계통합	사회문화 인적 왕래	20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공동행사)	20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20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10
	인적 이동의 자유화	20
	언론·방송의 자유화	20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20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30
	소계	160

1) 인적 왕래

- 인적왕래 변인의 경우,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북한주민이 방남한 경우에는 인원수에 2를 곱하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 2015년 인적왕래는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의 경우 이산가족 1,491명, 교육학술 840명, 문화예술 15명, 체육 100명, 종교 354명, 대북지원 295명, 관광 43명으로 총 3,138명이다.
- 2009년 이후로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의 경우 통일부의 통계자료 분류 방식의 변경으로 분야별 남한방문 인원을 확인할 수 없고 2015년에는 방문 인원이 없다.

- 이상의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인원과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인원에게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방북 3,138명+방남 0명(X2)=3,138이 된다.
- 연간 인적왕래 수준의 기준점은 700만 명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인적왕래 비율이 1.0% 변화할 때마다 0.2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2015년 인적왕래 변인의 총점은 3,138로 2014년 1,880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하였고, 기준점에 대한 비율은 0.04%로 이 수치는 지난해 보다 소폭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2015년 인적왕래 변인에 부여된 상대점수는 20점 만점 중 0점이다. 상대점수가 0점인 이유는 기준점에 대한 비율이 0.1% 이하인 경우는 0점 처리하는 것으로 지수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2-47〉 인적왕래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이산 가족 (A)	교육 학술 (B)	문화 예술 (C)	체육 (D)	종교 (F)	언론 출판 (G)	대북 지원 (H)	관광 (I)	가중치 총점*	비율 (%) **	상대 점수
1989									1	0.0	0.0
1990									1,056	0.0	0.0
1991									762	0.0	0.0
1992									566	0.0	0.0
1993									36	0.0	0.0
1994									12	0.0	0.0
1995									536	0.0	0.0
1996									146	0.0	0.0
1997	0	1	0	0	4	11	151	—	167	0.0	0.0
1998	1	21	87	0	51	48	129	10,554	10,891	0.2	0.0

구분 연도	이산 가족 (A)	교육 학술 (B)	문화 예술 (C)	체육 (D)	종교 (F)	언론 출판 (G)	대북 지원 (H)	관광 (I)	가중치 총점*	비율 (%) **	상대 점수
1999	5	1	106	125	39	4	364	148,008	148,652	2.1	0.4
2000	348	5	697	446	47	143	751	212,247	214,684	3.1	0.6
2001	436	76	134	312	86	82	803	57,285	59,214	0.9	0.2
2002	1,479	68	513	2,182	195	84	1,975	84,347	90,843	1.3	0.2
2003	233	396	34	1,552	584	253	1,670	73,922	78,644	1.1	0.2
2004	1,632	797	784	161	376	107	2,067	266,223	272,147	3.9	0.8
2005	247	273	286	955	1,231	1,242	6,669	301,153	312,056	4.5	0.9
2006	2,127	378	138	274	788	487	7,658	234,446	246,296	3.5	0.8
2007	3,207	865	331	1,624	4,779	289	13,119	345,006	369,220	5.3	1.0
2008	2,267	663	46	424	685	308	4,812	303,088	312,293	4.5	0.9
2009***	1,449	112	0	23	103	0	761	0	2,574	0.04	0.0
방남 63명(가중치 x2점)											
2010	754	95	0	3	77	7	684	0	1,620	0.02	0.0
방남 0명											
2011	0	44	3	0	133	2	946	0	1,156	0.02	0.0
방남 14명 (사회문화 1명, 대북 지원 13명)											
2012	1	0	2	0	77	2	117	33	232	0.0	0.0
방남 0명											
2013	0	9	0	41	53	0	35	74	292	0.0	0.0
방남 40명 (사회문화 40명 가중치 x2점)											
2014	760	100	6	0	186	0	63	33	1,880	0.03	0.0
방남 366명 (사회문화 366명 가중치 x2점)											
2015	1,491	840	15	100	354	0	295	43	3,138	0.04	0.0
방남 0명											

* 1989~1996년 기간은 분야별 통계가 없고 합계 통계만 있어 가중치 총점만 산출함

** 비율이 0.1% 이하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음

*** 2009년부터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자료에는 분야별 인원이 누락되고, 총 인원만 표시되어 있음

※ 자료출처: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 해당 연호.

2) 공동 행사(교류협력사업)

- 공동행사 변인 상대점수는 방문 성사 1건당 1점을 부여하여 산출하되, 인적왕래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남한방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남한방문의 경우에는 건수에 2를 곱하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 2015년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행사는 방북 행사의 경우 0건, 0건, 종교 0건으로 총 0건이 성사되었다. 방남 행사 역시 0건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방북 행사 건수와 방남 행사 건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총점은 0점이다.
- 연간 남북공동행사의 개최 건수의 기준점은 600건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공동행사 비율이 1.0% 변화할 때마다 0.2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따라서 2015년 공동행사 변인의 총점은 0점으로 전년대비 32점이 하락하였으며, 기준점 대비 비율은 0%이다. 최종적으로 상대점수로 전환했을 경우 2015년 공동행사 변인에 부여된 상대점수는 2014년 보다 1.0점 하락한 0점이다.

〈표 2-48〉 공동행사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교육 학술	문화 예술	체육	종교	언론 출판	가중치 총점	비율 (%)	상대 점수
1989	0	0	0	0	0	0	0.0	0.0
1990	0	0	0	0	0	0	0.0	0.0
1991	0	0	0	0	0	0	0.0	0.0
1992	0	0	0	0	0	0	0.0	0.0
1993	0	0	0	0	0	0	0.0	0.0
1994	0	0	0	0	0	0	0.0	0.0
1995	0	0	0	0	0	0	0.0	0.0
1996	0	0	0	0	0	0	0.0	0.0
1997	1	0	0	3	3	7	1.2	0.2
1998	6	6	0	10	10	32	5.3	1.0
1999	1	7	65	9	2	84	14.0	2.8
2000	2	9	51	9	12	83	13.8	2.8
2001	13	10	39	11	11	84	14.0	2.8
2002	15	19	45	17	9	105	17.5	3.6
2003	24	11	24	22	21	102	17.0	3.4
2004	19	12	6	24	21	82	13.7	2.8
2005	32	19	29	68	75	223	37.2	7.4
2006	37	25	36	58	61	217	36.2	7.2
2007	85	32	77	119	44	357	59.5	12.0
2008	57	14	30	58	35	194	32.3	6.4
2009	9	0	2	15	0	(26)	36.0	6.0
	방남 5건(가중치 x2점)*					(10)		
2010	8	0	1	15	3	(27)	27.0	4.5
	방남 0건					0		
2011	7	1	0	13	1	(22)	24	4.0
	방남 1건(가중치 x2점)*					(2)		
2012	0	1	0	8	1	(10)	10.0	1.7
	방남 0건					(0)		
2013	1	0	1	3	0	(4)	8.0	1.3
	방남 2건(가중치 x2점)*					(4)		
2014	8	2	0	12	0	(22)	32.0	5.3
	방남 5건(가중치 x2점)*					(10)		
2015	0	0	0	0	0	0	0.0	0.0
	방남 5건(가중치 x2점)*							

※ 출처: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 해당 연호.

3) 사회문화 교류협력 기금

- 2015년 사회문화영역에 정부가 지출한 남북협력기금¹⁸은 인적왕래지원에 0원, 사회문화협력지원에 61억 3,500만원, 이산가족교류지원에 52억 4,100만원, 인도적 지원(무상)에 121억 2,800만원으로 총 132억 6,560만원이다.
-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¹⁹, 2015년 한국의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약 1,510조 6,000억원으로 2015년 GNI 대비 사회문화영역에 지출한 남북협력기금의 비율은 0.00088% 수준에 불과하다.
- 국민총소득(GNI) 대비 교류협력기금이 차지하는 비중 0.1%를 연간 사회문화 교류협력 기금의 기준점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교류협력기금 지출 비율이 1.0% 변화할 때마다 0.2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 기준점 대비 2015년 사회문화 교류협력 기금의 비율은 0.7%로 2014년 1.25%에 비해 0.52% 하락하였다. 최종적으로 2015년 사회문화 남북협력기금 변인에 부여된 상대점수는 0점이다.

18 통일부, “2015년 12월 남북협력기금 통계,”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6890>〉

19 한국은행, “2014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5년 국민계정(잠정),”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menuNaviId=598&boardBean.brdid=125186&boardBean.menuid=598)

[action?menuNaviId=598&boardBean.brdid=125186&boardBean.menuid=598](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menuNaviId=598&boardBean.brdid=125186&boardBean.menuid=598)〉.

〈표 2-49〉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사회문화영역 지출액(억원)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점과의 비교(%) (0.12=100)	상대점수
1989	0	0.0	0.0	0.0
1990	0	0.0	0.0	0.0
1991	0	0.0	0.0	0.0
1992	0	0.0	0.0	0.0
1993	0	0.0	0.0	0.0
1994	0	0.0	0.0	0.0
1995	1,824	0.03	25.0	3.0
1996	55	0.001	0.8	0.0
1997	191	0.003	2.5	0.6
1998	199	0.003	2.5	0.6
1999	343	0.005	4.2	0.8
2000	1,896	0.03	25.0	3.0
2001	1,182	0.02	16.7	3.4
2002	2,450	0.04	33.3	6.6
2003	3,110	0.05	41.7	8.4
2004	2,319	0.04	33.3	6.6
2005	3,904	0.06	50.0	10.0
2006	2,391	0.04	33.3	6.6
2007	4,032	0.06	50.0	10.0
2008	845	0.005	4.2	0.8
2009	345	0.003	2.5	0.6
2010	233	0.002	1.7	0.3
2011	129	0.001	0.8	0.0
2012	52	0.0002	0.2	0.0
2013	174	0.0012	1.0	0.0
2014	212	0.0015	1.3	0.0
2015	133	0.00088	0.7	0.0

※ 출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통계, 한국은행의 2015년 국민계정(잠정)을 활용하여 재구성함.

4)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

- 연간 이산가족 상봉 인원수의 기준점은 13,000명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이산가족 상봉 비율이 1.0% 변화할 때마다 0.1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 2015년에는 이산가족 교류가 1차례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 수는 976명으로 상대점수(10점 만점)는 전년도보다 0.2점 하락한 0.8점이다.

〈표 2-50〉 이산가족 상봉 변인 상대점수

연도	구분	이산가족 상봉 인원수	비율(%)	상대점수
1989		0	0.0	0.0
1990		0	0.0	0.0
1991		0	0.0	0.0
1992		0	0.0	0.0
1993		0	0.0	0.0
1994		0	0.0	0.0
1995		0	0.0	0.0
1996		0	0.0	0.0
1997		0	0.0	0.0
1998		1	0.01	0.0
1999		5	0.04	0.0
2000		348	2.7	0.3
2001		296	2.3	0.2
2002		1,479	11.4	1.0
2003		233	1.8	0.2

연도 \ 구분	이산가족 상봉 인원수	비율(%)	상대점수
2004	1,624	12.5	1.2
2005	239	1.8	0.2
2006	2,127	16.4	1.6
2007	3,207	24.7	2.5
2008	2,267	17.4	1.7
2009	1,449	11.1	1.1
2010	754	5.8	0.6
2011	0	0.0	0.0
2012	1	0.01	0.0
2013	0	0.0	0.0
2014	760	5.8	0.6
2015	976	7.5	0.8

※ 출처: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 해당 연호.

5) 인적 이동의 자유화

■ 기존의 관광자유화 변인은 2009년 남북통합지수부터 인적 이동의 자유화 변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기존의 인적 이동의 자유화 변인은 관광분야의 인적 이동과 경제분야의 인적 이동을 합한 것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탈북자 입국 수가 추가되었다.

■ 인적 이동의 자유화는 남북한 주민의 지역 간 인적 이동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루어지는가를 측정한다. 현재, 관광분야의 경우 남한 주민의 북한지역 방문만이 가능한 상태이며, 경제분야의 경우는 남북한 주민의 쌍방지역 방문이 가능한 상태이다.

- 남한주민의 북한 방문에 비해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은 상대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가중치(×2)를 부여한다.
- 관광 분야의 인적 이동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의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그해 11월에 개성관광마져 중단된 이후 2009~2011년 기간 동안 3년 연속 0명이었다가 2012년 이후 다시 수십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 다시 0명이 되었다.
- 경제분야의 인적 이동은 2015년에는 128,566명이다.
- 탈북자 입국 수의 경우 2012년부터 감소하여 2015년에는 1,276명이다.
- 연간 인적 이동의 자유화 기준점은 700만 명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이동 인원의 비율이 1.0% 변화할 때마다 0.2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2015년 인적 이동 자유화 변인의 상대점수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0.3점이다.

〈표 2-51〉 인적 이동 자유화 변인 상대점수

연도	구분 연도	관광분야 인적 이동	경제분야 인적 이동		탈북자 입국 수	소계	비율(%)	상대점수
			방북	방남*				
1989		0	—	—	—	—	0.0	0.0
1990		0	—	—	—	—	0.0	0.0
1991		0	—	—	—	—	0.0	0.0
1992		0	—	—	—	—	0.0	0.0
1993		0	—	—	—	—	0.0	0.0

1994	0	—	—	—	—	0.0	0.0
1995	0	—	—	—	—	0.0	0.0
1996	0	—	—	—	—	0.0	0.0
1997	0	—	—	—	—	0.0	0.0
1998	10,554	2,193	0	—	12,747	0.0	0.0
1999	148,008	2,288	0	—	150,296	0.0	0.0
2000	212,247	2,800	15	—	215,062	0.0	0.0
2001	57,285	1,162	19	—	58,466	0.0	0.0
2002	84,347	2,762	115	1,142	88,366	1.3	0.2
2003	73,922	5,208	82	1,285	80,497	1.2	0.2
2004	266,223	18,250	120	1,898	286,491	4.1	0.8
2005	301,153	69,682	50	1,384	372,269	5.3	1.1
2006	234,446	87,845	13	2,028	324,332	4.6	0.9
2007	352,433	130,006	213	2,554	485,206	6.9	1.3
2008	303,088	176,970	78	2,803	482,939	6.9	1.3
2009	0	118,303	183	2,914	121,583	1.7	0.3
2010	0	128,346	132	2,402	131,012	1.9	0.3
2011	0	114,919	0	2,706	117,625	1.7	0.3
2012	33	120,128	0	1,502	121,664	1.7	0.3
2013	74	75,990	0	1,514	77,578	1.1	0.2
2014	33	126,014	0	1,397	127,444	1.8	0.3
2015	0	128,566	0	1,276	129,842	1.9	0.3

* 북한의 남한방문은 ×2점 기준치 부여

※ 자료 출처 :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 해당 연도.

6) 언론·방송의 자유화

-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에서 언론·방송부문의 자유화 변인은 일방향 교류, 쌍방향 교류, 제한적 자유화, 전면적 자유화로 나뉘며, 또 각 세부 지표는 모색, 제도화, 활성화로 하위 평가 단계를 가진다. 각 지표와 배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 2008년 10월에 제4차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에서 기사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쌍방향 교류의 제도화 단계에 진입하였지만, 이후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단계까지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15년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의 상대점수는 2008년 이후 8년 연속 8.0점을 유지하고 있다.

〈표 2-52〉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 지표와 배점

언론·방송의 자유화 (20점)	세부지표	일방향 교류	쌍방향 교류	제한적 자유화	전면적 자유화
	배점	5	10	15	20
	세부배점	모색(1) 제도화(3) 활성화(5)	모색(6) 제도화(8) 활성화(10)	모색(11) 제도화(13) 활성화(15)	모색(16) 제도화(18) 활성화(20)

〈표 2-53〉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 점수

구분 연도	언론·방송의 자유화 수준			자유화 점수
1989	방송, 신문에서 북한·통일 관련 고정 프로그램, 지면 마련(예: KBS의 '남북의 창' 등)			1.0
1990				1.0
1991				1.0

구분 연도	언론·방송의 자유화 수준		자유화 점수
1992		"	1
1993		"	1
1994		"	1
1995		"	1
1996		"	1
1997		"	1
1998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 북한 영상물의 국내 반입 허가	일방향 교류의 제도화 단계	3
1999		"	3
2000	6.15남북공동선언 채택, 언론·방송 교류 활성화	일방향 교류의 활성화 단계	5
2001		"	5
2002		"	5
2003		"	5
2004		"	5
2005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 공식 발족	쌍방향 교류의 모색 단계	6
2006		"	6
2007		"	6
2008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 개최: 기사교류합의	쌍방향 교류의 제도화 단계	8
2009		"	8
2010		"	8
2011		"	8
2012		"	8
2013		"	8
2014		"	8
2015		"	8

7) 국제대회 공동개최 · 단일팀 구성

- 2015년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단일팀으로 참가한 국제대회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과 마찬가지로 전혀 없어 0점이 부여된다.

〈표 2-54〉 주요 국제대회 공동개최 · 단일팀 구성 변인 상대점수

연도	구분	국제대회 공동개최	단일팀 · 공동입장	총점	상대점수
1989		0	0	0.0	0.0
1990		0	0	0.0	0.0
1991		0	2	2.0	2.0
1992		0	0	0.0	0.0
1993		0	0	0.0	0.0
1994		0	0	0.0	0.0
1995		0	0	0.0	0.0
1996		0	0	0.0	0.0
1997		0	0	0.0	0.0
1998		0	0	0.0	0.0
1999		0	0	0.0	0.0
2000		0	1	1.0	1.0
2001		0	0	0.0	0.0
2002		0	0	0.0	0.0
2003		0	0	0.0	0.0
2004		0	1	1.0	1.0
2005		0	0	0.0	0.0
2006		0	0	0.0	0.0
2007		0	0	0.0	0.0
2008		0	0	0.0	0.0
2009		0	0	0.0	0.0
2010		0	0	0.0	0.0
2011		0	0	0.0	0.0
2012		0	0	0.0	0.0

구분 연도	국제대회 공동개최	단일팀 · 공동입장	총점	상대점수
2013	0	0	0.0	0.0
2014	0	0	0.0	0.0
2015	0	0	0.0	0.0

※ 출처: 자료 출처: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 해당 연도.

8)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변인은 사회문화 교류협력 관련 당국자 회담(10.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매개기구) 구성(10.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의 상시적 운용(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 단, 합의서의 경우는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가중치 2점을, 공동보도문의 경우는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1.5점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당국자 회담 총점의 산출방식은 “회담 수+합의서 채택수×2+공동보도문×1.5”이다.
- 2015년에는 사회문화분야의 당국자 회담이 1회 개최되었다. 이는 2015년 9월 7~8일에 개최된 제13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다. 당국자 회담 총점(회담 1회+합의서 채택 1건×2)은 3.0점이 된다.
- 남북당국자 회담의 상대점수는 연간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의 기준점을 24회로 하고 상대점수를 회담 비율 1.0%가 변화할 때마다 0.1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당국자 간 회담 총점인 3.0점을 상대점수로 환산하면 1.3점으로 2014년에 비해 0.4점이 상승했다.

〈표 2-55〉 사회문화 교류협력 당국자 회담 상대점수

구분 연도	회담 (A)	합의서 (B)	합의서 가중치 (C=B*2)	공동보도문 (D)	공동보도문 가중치 (E=D*1.5)	총점 (A+C+E)	비율 (%)	상대 점수
1989	9.0	0.0	0.0	0.0	0.0	9.0	37.5	3.8
1990	7.0	0.0	0.0	0.0	0.0	7.0	29.2	3.0
1991	7.0	4.0	8.0	0.0	0.0	15.0	62.5	6.3
1992	0.0	0.0	0.0	0.0	0.0	0.0	0.0	0.0
1993	0.0	0.0	0.0	0.0	0.0	0.0	0.0	0.0
1994	0.0	0.0	0.0	0.0	0.0	0.0	0.0	0.0
1995	0.0	0.0	0.0	0.0	0.0	0.0	0.0	0.0
1996	0.0	0.0	0.0	0.0	0.0	0.0	0.0	0.0
1997	0.0	0.0	0.0	0.0	0.0	0.0	0.0	0.0
1998	0.0	0.0	0.0	0.0	0.0	0.0	0.0	0.0
1999	0.0	0.0	0.0	0.0	0.0	0.0	0.0	0.0
2000	0.0	0.0	0.0	0.0	0.0	0.0	0.0	0.0
2001	0.0	0.0	0.0	0.0	0.0	0.0	0.0	0.0
2002	2.0	1.0	2.0	0.0	0.0	4.0	16.7	1.7
2003	1.0	1.0	2.0	0.0	0.0	3.0	12.5	1.3
2004	1.0	1.0	2.0	0.0	0.0	3.0	12.5	1.3
2005	6.0	2.0	4.0	1.0	1.5	11.5	47.9	4.8
2006	3.0	0.0	0.0	0.0	0.0	3.0	12.5	1.3
2007	6.0	0.0	0.0	3.0	4.5	10.5	43.8	4.4
2008	1.0	1.0	2.0	0.0	0.0	3.0	12.5	1.3
2009	2.0	1.0	2.0	0.0	0.0	4.0	16.7	1.7
2010	4.0	1.0	2.0	0.0	0.0	6.0	25.0	2.5
2011	0.0	0.0	0.0	0.0	0.0	0.0	0.0	0.0
2012	0.0	0.0	0.0	0.0	0.0	0.0	0.0	0.0
2013	1.0	1.0	2.0	0.0	0.0	3.0	12.5	1.3
2014	2.0	0.0	0.0	0.0	0.0	2.0	8.3	0.9
2015	1.0	1.0	2.0	0.0	0.0	3.0	12.5	1.3

※ 출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통계,” <<http://dialogue.unikorea.go.kr>>.

■ 공동협의기구의 경우는 구성에 10점이 배점되고, 기구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경우 10점이 추가 배점된다.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2007년에 처음 구성되었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한 번도 운용되지 못했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항목의 점수는 10.0점이다.

■ 최종적으로, 2015년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변인에 부여되는 상대점수는 당국자 회담의 1.3점, 공동협의기구 구성의 10.0점을 합하여 30점 만점 중 11.3점이다.

〈표 2-56〉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변인 종합점수

연도	구분	당국자 회담 (10점)	공동협의기구 구성 (10점)	공동협의기구의 상시적 운용 (10점)	종합점수 (30점)
1989		3.8	0.0	0.0	3.8
1990		3.0	0.0	0.0	3.0
1991		6.3	0.0	0.0	6.3
1992		0.0	10.0	5.0*	15.0
1993		0.0	0.0	0.0	0.0
1994		0.0	0.0	0.0	0.0
1995		0.0	0.0	0.0	0.0
1996		0.0	0.0	0.0	0.0
1997		0.0	0.0	0.0	0.0
1998		0.0	0.0	0.0	0.0
1999		0.0	0.0	0.0	0.0
2000		0.0	0.0	0.0	0.0
2001		0.0	0.0	0.0	0.0
2002		1.7	0.0	0.0	1.7
2003		1.3	0.0	0.0	1.3
2004		1.3	0.0	0.0	1.3
2005		4.8	0.0	0.0	4.8
2006		1.3	0.0	0.0	1.3
2007		4.4	10.0	0.0	14.4
2008		1.3	10.0	0.0	11.3

구분 연도	당국자 회담 (10점)	공동협의기구 구성 (10점)	공동협의기구의 상시적 운용 (10점)	종합점수 (30점)
2009	1.7	10.0	0.0	11.7
2010	2.5	10.0	0.0	12.5
2011	0.0	10.0	0.0	10.0
2012	0.0	10.0	0.0	10.0
2013	1.3	10.0	0.0	11.3
2014	0.9	10.0	0.0	10.9
2015	1.3	10.0	0.0	11.3

※ 1992년 공동협의기구의 상시적 운용에서 5점을 부여한 것은 1992년 3~10월까지 총 6차례의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어 매년 12회(10점 만점) 개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라. 종합

- 최종적으로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제도통합지수와 관계통합지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단계별 배점 기준에 따라 사회문화영역의 구조통합 수준을 단계로 제시한다.
- 제도적 통합지수 15.5점과 관계적 통합지수 20.4점을 합하여 최종적으로 산출한 2015년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는 35.9점이다. 이 수치는 단계별 배점 기준에 따라 2단계(21~40점)에 해당된다. 2단계는 교류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1단계에 비해 접촉빈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 2015년 구조통합지수는 2014년 37.6점에 비해 1.7점 하락하였다.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자 회담 개최 등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수준의 하락, 공동법제화 수준의 하락, 남북한 공동행사 부재, 경제분야의 인적 이동 및 탈북자 입국수의 감소 등이 2015년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의 주요 하락 원인이 되었다.

〈표 2-57〉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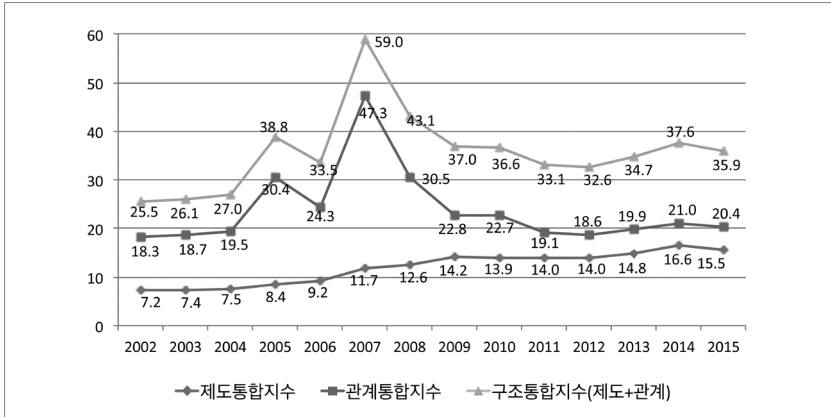
연도	제도적 통합 (90)			관계적 통합 (160)								제도 · 관계 통합 지수 (합계)	통합 단계 (250)
	공동 집행 기구 (30)	단일 제도화 (30)	공동 법제화 (30)	인적 왕래 (20)	공동 행사 (20)	교류 협력 기금 (20)	이산 가족 상봉 상시화 (10)	인적 이동 자유화 (20)	언론 · 방송 자유화 (20)	국제대회 공동개최 · 단일팀 (20)	정례화 (30)		
1989	0.0	0.0	1.1	0.0	0.0	0.0	0.0	0.0	1.0	0.0	3.8	5.9	0단계
1990	0.0	0.0	1.1	0.0	0.0	0.0	0.0	0.0	1.0	0.0	3.0	5.1	0단계
1991	0.0	0.0	1.1	0.0	0.0	0.0	0.0	0.0	1.0	2.0	6.3	10.4	0단계
1992	0.0	0.0	1.3	0.0	0.0	0.0	0.0	0.0	1.0	0.0	15.0	17.3	1단계
1993	0.0	0.0	1.5	0.0	0.0	0.0	0.0	0.0	1.0	0.0	0.0	2.5	0단계
1994	0.0	0.0	1.6	0.0	0.0	0.0	0.0	0.0	1.0	0.0	0.0	2.6	0단계
1995	0.0	0.0	1.9	0.0	0.0	3.0	0.0	0.0	1.0	0.0	0.0	5.9	0단계
1996	0.0	0.0	2.2	0.0	0.0	0.0	0.0	0.0	1.0	0.0	0.0	3.2	0단계
1997	0.0	0.0	3.2	0.0	0.2	0.6	0.0	0.0	1.0	0.0	0.0	5.0	0단계
1998	0.0	0.0	6.9	0.0	1.0	0.6	0.0	0.0	3.0	0.0	0.0	11.5	1단계
1999	0.0	0.0	7.0	0.4	2.8	0.8	0.0	0.0	3.0	0.0	0.0	14.0	1단계
2000	0.0	0.0	7.1	0.6	2.8	3.0	0.3	0.0	5.0	1.0	0.0	19.8	1단계
2001	0.0	0.0	7.2	0.2	2.8	3.4	0.2	0.0	5.0	0.0	0.0	18.8	1단계
2002	0.0	0.0	7.2	0.2	3.6	6.6	1.0	0.0	5.0	0.0	1.7	25.3	2단계
2003	0.0	0.0	7.4	0.2	3.4	8.4	0.2	0.0	5.0	0.0	1.3	25.9	2단계
2004	0.0	0.0	7.5	0.8	2.8	6.6	1.2	0.8	5.0	1.0	1.3	27.0	2단계
2005	0.0	0.9	7.5	0.9	7.4	10.0	0.2	1.1	6.0	0.0	4.8	38.8	2단계
2006	0.0	1.7	7.5	0.8	7.2	6.6	1.5	0.9	6.0	0.0	1.3	33.5	2단계
2007	0.0	2.6	9.1	1.0	12.0	10.0	2.5	1.4	6.0	0.0	14.4	59.0	3단계
2008	0.0	3.5	9.1	0.9	6.4	0.8	1.7	1.4	8.0	0.0	11.3	43.1	3단계
2009	0.0	5.0	9.2	0.0	1.1	0.6	1.1	0.3	8.0	0.0	11.7	37.0	2단계
2010	0.0	5.7	8.2	0.0	0.9	0.3	0.6	0.3	8.0	0.0	12.5	36.6	2단계
2011	0.0	5.7	8.3	0.0	0.8	0.0	0.0	0.3	8.0	0.0	10.0	33.1	2단계
2012	0.0	5.7	8.3	0.0	0.3	0.0	0.0	0.3	8.0	0.0	10.0	32.6	2단계
2013	0.0	5.7	9.1	0.0	0.2	0.0	0.0	0.4	8.0	0.0	11.3	34.7	2단계
2014	0.0	7.7	8.9	0.0	1.0	0.0	0.6	0.5	8.0	0.0	10.9	37.6	2단계
2015	0.0	7.2	8.3	0.0	0.0	0.0	0.8	0.3	8.0	0.0	11.3	35.9	2단계

※ 주: 괄호 () 안의 수치는 각 지표의 만점의 수치를 나타냄

〈표 2-58〉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연도	제도적 통합	관계적 통합	구조통합지수
1989	1.1	4.8	5.9
1990	1.1	4.0	5.1
1991	1.1	9.3	10.4
1992	1.3	16.0	17.3
1993	1.5	1.0	2.5
1994	1.6	1.0	2.6
1995	1.9	4.0	5.9
1996	2.2	1.0	3.2
1997	3.2	1.8	5.0
1998	6.9	4.6	11.5
1999	7.0	7.4	14.4
2000	7.1	13.3	20.4
2001	7.2	11.6	18.8
2002	7.2	18.3	25.5
2003	7.4	18.7	26.1
2004	7.5	19.5	27.0
2005	8.4	30.4	38.8
2006	9.2	24.3	33.5
2007	11.7	47.3	59.0
2008	12.6	30.5	43.1
2009	14.2	22.8	37.0
2010	13.9	22.7	36.6
2011	14.0	19.1	33.1
2012	14.0	18.6	32.6
2013	14.8	19.9	34.7
2014	16.6	21.0	37.6
2015	15.5	20.4	35.9

〈그림 2-5〉 사회문화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표 2-59〉 2015년 사회문화 구조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통합 영역	지표	2014년	2015년	증감	요인
제도적 통합	공동집행기구	0.0	0.0		전년대비 변화 없음
	단일 제도화	7.7	7.2	-0.5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수준 하락함
	공동 법제화	8.9	8.3	-0.6	전문가조사 결과 공동법제화 수준 하락함
관계적 통합	인적 왕래	0.0	0.0		인적왕래의 총량수치는 다소 늘었으나 환산점수가 전년대비 변화 없음
	공동행사	1.0	0.0	-1.0	공동행사가 전혀 없었음
	사회문화교류 협력기금집행	0.0	0.0		전년대비 변화 없음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0.6	0.8	+0.2	이산가족 상봉이 1차례 있었음
	인적 이동의 자유화	0.5	0.3	-0.2	경제 분야 인적 이동의 감소와 탈북자 입국수의 감소
	언론방송의 자유화	8.0	8.0	-	전년대비 변화 없음
	국제대회 공동개최, 단일팀 구성	0.0	0.0		전년대비 변화 없음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10.9	11.3	+0.4	당국자회담 1회와 합의서 1건이 있었음
	계	37.6	35.9	-1.7	

의식통합지수

1. 지수구성

- 의식통합지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영역으로 나뉘고, 총배점은 250점이다.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의 의식통합에는 각각 80점씩 부과되고 사회문화영역의 의식통합에는 90점이 부과된다. 사회문화영역의 배점이 더 큰 이유는 사회문화영역이 사회통합의 본질이자 정치·경제영역의 통합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각 영역별 의식통합지수의 변인과 배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1〉 의식통합지수 변인과 배점

영역		변인	배점
경제영역	남한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2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10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10
	북한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15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 대한 인지도	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10
	소계		80
정치영역	남북한 공동	통일의 필요성	20
		상대방에 대한 관계 인식	1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20
		남북간 정치제도(선거방식, 법률제도) 차이 인식	2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10
	소계		80
사회문화 영역	남북한 공동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0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	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20
	소계		90
합계			250

- 남북한 주민의 의식통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015년 남북통합지수에 활용한 설문조사 데이터는 남한주민의 경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5년 7월 1~24일에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성인남녀

1,200명을 유효표본으로 실시한 “2015 통일의식조사”의 자료이고,²⁰ 북한주민의 경우 동 기관이 2016년 6월 10일~7월 30일에 남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108명을 유효표본으로 실시한 “2016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의 자료이다.²¹

-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간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2016년까지 총 8차례(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에 걸쳐 실시되었다.
- 2008년과 2009년의 조사는 하나원에 입소해 있는 북한이탈주민(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2008년과 2009년 조사의 경우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연도가 일치되지 않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측정되는 의식의 기준연도 편차가 크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 기존 조사의 표본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1년의 조사부터는 직전 연도에 북한을 나온 사람들로 한정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2016년의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108명 모두는 2015년 1~12월까지 북한지역에 거주하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주민들이다.

20 박명규 외 공저, 「2015 통일의식조사」(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참조.

21 북한주민(탈북자) 의식조사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김정은 정권 5년, 북한사회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2016년 8월 24일) 참조. 이 조사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 기준 시점을 조사 시기보다 1년 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실시된 조사의 경우 설문의 준거 시점은 2015년이다.

2. 영역별 지수

가. 경제

- 경제영역의 의식통합지수의 변인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표 3-2〉 경제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변 인		배점
남한주민 설문내용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2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10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10
북한주민 설문내용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15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10

1) 남한주민 지표별 응답율과 상대점수

가) 통일이 남한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 통일에 대한 집단적 이익 기대감은 2015년 57.4%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하였다. 2010년의 53.0% 수준에서, 2013년 48.6%까지 하락했다가 2014년에 큰 폭으로 반등한 뒤, 2015년에도 상승추세를 이어갔다.

■ 개인적 이익 기대감 역시 28.0%를 기록하여 2014년 26.7%에 비해 1.3% 증가하였다. 2011년 27.8% 이후 2년 연속 하락하여 2013년 21.8%를 기록하였다가 다시 2년 연속 상승하여 2011년의 수치를 넘어섰다.

■ 정리하면, 통일 편익에 기대감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다가 2013년에 다소 하락하였으나 2014년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2015년에 이 상승추세를 이어가면서 상대점수 8.5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표 3-3〉 통일이 남한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연도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0	질문: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와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선택	53.5	7.8/20
	질문: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와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선택	24.8	
2011	“	50.7	7.9/20
	“	27.8	
2012	“	51.6	7.8/20
	“	26.0	
2013	“	48.6	7.0/20
	“	21.8	
2014	“	55.5	8.2/20
	“	26.7	
2015	“	57.4	8.5/20
	“	28.0	

나) 남한 주민의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평가

■ 2015년 조사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는 62.2%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고,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47.0%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여, 두 질문 모두에서 긍정적 응답이 2014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 한편, 2015년 조사에서는 ‘남북경제협력’,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긍정 응답비율이 65.6%, 50.8%로 전년대비 각각 3.4%, 3.8%씩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2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인도적 지원 및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한 긴장 해소를 기대하는 여론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상대점수도 전년보다 0.3점 상승한 5.8점을 기록하였다.

〈표 3-4〉 남한 주민의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평가

연도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0	질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응답: “매우 도움이 된다”와 “다소 도움이 된다” 선택	68.6	6.0/10
	질문: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 지원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도움이 된다”와 “다소 도움이 된다” 선택	52.3	
2011	“ ”	61.5	5.6/10
	“ ”	50.7	
2012	“ ”	65.3	5.9/10
	“ ”	53.4	
2013	“ ”	61.8	5.4/10
	“ ”	46.3	
2014	“ ”	62.2	5.5/10
	“ ”	47.0	
2015	“ ”	65.6	5.8/10
	“ ”	50.8	

다)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선호

- 과거에 지수 산출을 위해 사용되었던 설문 문항이 2013년 통일의식조사부터 삭제됨에 따라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과 “대북 지원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부정적 응답의 비중의 평균을 통하여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였다.
- 2015년 대북 지원 선호 정도에 대한 점수는 3.3점으로 2014년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2013년 이전의 점수를 새로운 지수 산출 방식으로 계산하여 비교해 보면, 2014년과 2015년의 대북 지원 선호도는 2013년의 큰 폭 하락을 상쇄하고,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5〉 대북 지원의 선호 정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연도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0	질문: “현재의 대북 지원을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대폭 늘려야 한다”와 “조금 늘려야 한다” 선택	24.7	2.5/10
2011	“ ”	22.3	2.2/10
2012	“ ”	23.8	2.4/10
2013	질문: (1) “대북 지원이 북한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2)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응답: (1)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와 “약간 도움이 된다”선택한 사람과 (2)에서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택한 사람의 평균을 구함 *	27.4	2.7/10
2014	“ ”	32.8	3.3/10
2015	“ ”	33.4	3.3/10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수를 산출하는데 사용되었던 설문 문항이 2013년부터 ‘통일의식조사’에서 삭제됨에 따라 해당 질문으로 대체

** 2013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과거년도 지수를 산출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음.
2009년 3.4점, 2010년 3.3점, 2011년 3.3점, 2012년 3.2점

2) 북한주민 지표별 응답율과 상대점수

가)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는 2011년 61.6%로 가장 낮은 비율이 조사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76.6%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전년 대비 0.7% 하락한 75.9%를 기록하였다.
- 한편, 북한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로 ‘개혁·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을 선택한 빈도는 2010년 17.7%, 2011년 20.8%, 2012년 21.8%, 2013년 18.1% 등 20.0%를 전후로 등락하다가 2014년 대폭 증가하여 28.7%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21.3%로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 즉, 2015년에는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와 ‘북한 내부의 개혁·개방 필요성’대한 답변이 전년대비 각각 0.7%, 7.4% 하락한 것이다. 이는 최근 동북아 정세의 긴장 고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역시 경제 정책이나 경제 체제의 실패 보다는 과도한 군사비 지출 등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 3-6〉 북한체제 평가와 시장경제 우호도 응답률과 상대점수

연도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0	질문: “귀하는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합니까?” 응답: ‘자본주의 지지’ 선택	66.3	6.3/15
	질문: “귀하는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개혁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 선택	17.7	

연도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1	“	61.6	6.2/15
	”	20.8	
2012	“	72.1	7.0/15
	”	21.8	
2013	“	75.1	7.0/15
	”	18.1	
2014	“	76.6	7.9/15
	”	28.7	
2015	“	75.9	7.3/15
	”	21.3	

나) 대북지원에 대한 인지도

- ‘남한의 지원여부에 대한 인지’ 및 ‘긍정적 평가’는 다소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남한의 대북 지원 여부를 북한주민이 알고 있냐”는 설문에서는 63.0%가 있다고 답해 전년 71.3%보다 대폭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4년 이후의 경험 시도가 실질적인 사업이나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70.0%대를 회복했던 인지도 수치가 다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반해 남한의 대북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013년 73.0%, 2014년 74.6%에서 2015년 75.0%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것은 최근 과도한 남북 긴장에 대한 반작용으로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대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종합하면, ‘대북 지원의 인지도’의 하락폭이 ‘대북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상승폭을 초과하여 상대점수는 전년보다 0.5점 하락한 10.4점을 기록하였다.

〈표 3-7〉 대북 지원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연도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0	질문: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하는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잘 알고 있다.” 혹은 “조금 잘 알고 있다.” 선택	64.0	10.1/15
	질문: “귀하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대북 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혹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선택	67.3	
2011	“	67.7	10.8/15
	“	76.1	
2012	“	66.2	10.8/15
	“	77.5	
2013	“	62.4	10.2/15
	“	73.0	
2014	“	71.3	10.9/15
	“	74.6	
2015	“	63.0	10.4/15
	“	75.0	

다)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에 대한 우호도

■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 사업에 대한 우호도는 2010년 79.3%, 2011년 87.7%, 2012년 85.7%, 2013년 85.2%로 조사되어 2011년 이후 80% 중반의 높은 수치를 유지하였으나, 2014년 대폭 하락하여 76.3%를 기록한 뒤, 2015년에도 하락세를 이어가 73.1%로 조사되었다. 이는 근래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한 기업의 대북 사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 중국, 러시아 기업들에 비해 그 존재감이 미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상대점수는 전년 7.6점보다 0.3점 하락한 7.3점을 기록하였다.

〈표 3-8〉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0	질문: “귀하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 투자를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혹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선택	79.3	7.9/10
2011	“ ”	87.7	8.8/10
2012	“ ”	85.7	8.6/10
2013	“ ”	85.2	8.5/10
2014	“ ”	76.3	7.6/10
2015	“ ”	73.1	7.3/10

3) 종합

- 지난 6년간 의식지수를 비교하면, 남한주민의 의식조사 점수의 흐름은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2014년 이후에는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경제분야 남한주민의 의식조사 상대점수는 2010년 16.3점 → 2011년 15.7점 → 2012년 16.1점 → 2013년 15.1점 → 2014년 17.0점 → 2015년 17.6점으로 2012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지만, 2013년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점수가 하락한 뒤, 2014년과 2015년에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이 효과를 거두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특히, 2015년 조사에서는 ‘통일에 대한 이익 기대감’에 대한 질문에서 긍정 응답이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남북경협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역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여 상대 점수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는 통일 편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경제 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을 지지하는 여론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반면 북한주민(탈북자)의 의식조사 점수는 2014년까지 대체로 통합에 긍정적인 방향을 나타내 왔으나 2015년에는 지수가 다소 하락하였다.

○ 북한주민의 의식조사 상대점수는 2010년 24.3점 → 2011년 25.8점 → 2012년 26.4점 → 2013년 25.7점 → 2014년 26.4점 → 2015년 25.0점으로 2013년의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하락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상승하여 왔으나 2015년에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였다.

○ 특히, 2015년 조사에서는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 항목과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항목에서 긍정 응답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이는 급격한 동북아 정세 변화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졌으며, 남북한의 경제 협력마저 좀처럼 확대되지 못하여 그 인지도가 하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을 남북한 의식지수를 종합한다면 경제영역의 의식통합지수는 2014년 43.4점에서 2015년 42.6점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표 3-9〉 경제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질문과 응답	점수/만점	총점/만점
2010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8/20	16.3/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6.0/10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2.5/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6.3/15	24.3/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10.1/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9/10	
총점			40.6	
2011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9/20	15.7/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6/10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2.2/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6.2/15	25.8/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10.8/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8.8/10	
총점			41.5	
2012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8/20	16.1/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9/10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2.4/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7.0/15	26.4/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10.8/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8.6/10	
총점			42.5	
2013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0/20	15.1/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4/10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2.7/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7.0/15	25.7/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10.2/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8.5/10	
총점			40.8	

		질문과 응답	점수/만점	총점/만점
2014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8.2	17.0/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5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3.3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7.9	26.4/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10.9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6	
	총점			43.4
2015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8.5	17.6/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8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3.3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7.3	25.0/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10.4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3	
	총점			42.6

나. 정치

■ 정치영역의 의식통합지수의 변인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표 3-10〉 정치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변인	배점(남한)	배점(북한)
통일의 필요성	10	10
남북간 정치체제의 동질성	10	10
상대방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	10	1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5	5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5	5

1) 지표별 응답률과 상대점수

가) 통일의 필요성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식은 남북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얼마나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을 제기했다. 2015년 남한주민은 51.0%, 북한주민은 93.5%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남북주민의 응답률을 상대점수(10점)로 환산하면 각각 5.1점, 9.4점으로 총 14.5점(20점 만점)이 된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상대점수는 2008년 14.7점, 2009년 15.2점, 2010년 15.5점, 2011년 14.8점, 2012년 15.0점, 2013년 15.5점, 2014년 15.4점을 기록하였다.

〈표 3-1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1.6	5.2
	북한주민	응답: “필요하다” 선택	95.2	9.5
2009	남한주민	"	55.8	5.5
	북한주민		97.0	9.7
2010	남한주민	질문: OO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59.0	5.9
	북한주민	응답: “필요하다” 선택	95.5	9.6
2011	남한주민	"	53.7	5.4
	북한주민		93.8	9.4
2012	남한주민	"	57.0	5.7
	북한주민		93.3	9.3
2013	남한주민	"	54.8	5.5
	북한주민		100.0	10
2014	남한주민	"	55.9	5.6
	북한주민		98.3	9.8
2015	남한주민	"	51.0	5.1
	북한주민		93.5	9.4

나) 남북한 간 정치제도의 동질성

■ 남북한 주민들이 남북의 정치제도가 동질적이라고 인식하면 의식통합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남한주민의 경우, 남북의 선거방식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각각 6.7%였고, 북한주민은 6.5%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를 상대점수(10점)로 환산하면 각각 0.7점, 0.7점이 된다. 이 둘을 합하면 남북 정치제도의 동질성에 대한 인식은 1.4점(20점 만점)이다. 2008년 0.8점, 2009년 0.7점, 2010년 1.3점, 2011년 1.0점, 2012년 0.9점, 2013년 1.8점, 2014년 1.2점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0.2점 상승한 수치이다.

〈표 3-12〉 남북 정치제도의 동질성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질문1 응답률(%)	질문2 응답률(%)	평균 응답률(%)	상대 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없다” 선택	5.7	4.9	5.3	0.5
	북한주민		3.5	2.3	2.9	0.3
2009	남한주민	“ ”	4.2	4.2	4.2	0.4
	북한주민		3.5	3.0	3.3	0.3
2010	남한주민	질문: OO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없다” 선택	6.2	11.3	8.8	0.9
	북한주민		3.8	—	3.8	0.4
2011	남한주민	“ ”	6.1	—	6.1	0.6
	북한주민		3.8	—	3.8	0.4
2012	남한주민	“ ”	6.6	—	6.6	0.7
	북한주민		2.3	—	2.3	0.2
2013	남한주민	“ ”	8.6	—	8.6	0.9
	북한주민		9.0	—	9.0	0.9
2014	남한주민	“ ”	9.0	—	9.0	0.9
	북한주민		2.5	—	2.5	0.3
2015	남한주민	“ ”	6.7	—	6.7	0.7
	북한주민		2.5	—	6.5	0.7

다)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 남북한이 상대방에 대해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북의 정치통합을 위해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남한주민은 29.5%가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북한주민은 42.6%가 남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상대점수(10점)로 환산하면 각각 3.0점, 4.3점으로 총 7.3점이 된다. 이 부문의 총 점수는 2008년 11.7점, 2009년 9.5점, 2010년 6.9점, 2011년 6.7점, 2012년 8.5점, 2013년 7.0점, 2014년 7.7점과 비교해 전년 대비 0.4점 감소한 수치이다.

〈표 3-13〉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앞으로 북한의(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없다” 선택	47.8	4.8
	북한주민		68.7	6.9
2009	남한주민	”	37.3	3.7
	북한주민		58.4	5.8
2010	남한주민	”	32.5	3.2
	북한주민		36.9	3.7
2011	남한주민	”	21.7	2.2
	북한주민		44.7	4.5
2012	남한주민	”	31.1	3.1
	북한주민		54.2	5.4
2013	남한주민	”	34.0	3.4
	북한주민		36.2	3.6
2014	남한주민	”	25.1	2.5
	북한주민		51.6	5.2
2015	남한주민	”	29.5	3.0
	북한주민		42.6	4.3

라)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도 통합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데에 유용한 변인이다. 남한주민은 52.5%가 북한을 긍정적 대상으로 바라보았고, 북한주민은 64.9%가 남한을 긍정적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상대점수(5점)로 환산하면 남북한이 각각 2.6점, 3.2점으로 총 5.8점이 된다. 남한주민의 북한에 대한 긍정인식은 전년 대비 0.3점 감소하였고, 북한주민의 남한에 대한 긍정인식도 0.2점 감소하였다. 총 점수는 2008년 7.4점, 2009년 7.2점, 2010년 6.2점, 2011년 6.7점, 2012년 6.9점, 2013년 6.1점, 2014년 6.3점으로 변화하였으며, 전년 대비 0.5점 감소했다.

〈표 3-14〉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북한이(남한이) 귀하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지원대상' + '협력대상' 선택	79.5	4.0
	북한주민		67.8	3.4
2009	남한주민	"	68.1	3.4
	북한주민		75.7	3.8
2010	남한주민	"	64.0	3.2
	북한주민		60.2	3.0
2011	남한주민	"	63.7	3.2
	북한주민		70.0	3.5
2012	남한주민	"	62.9	3.1
	북한주민		76.7	3.8
2013	남한주민	"	56.8	2.8
	북한주민		66.6	3.3
2014	남한주민	"	58.8	2.9
	북한주민		68.1	3.4
2015	남한주민	"	52.5	2.6
	북한주민		64.9	3.2

마)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 남북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이 상대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가 어떠한가를 질문하였다. 남한주민들은 선군정치(67.6%), 주체사상(77.5%), 천리마운동(80.9%), 고난의 행군(68.0%), 장마당(55.6%), 아리랑축전(68.2%)에 대해 팔호 안의 수치만큼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인지도는 69.6%였다. 북한주민들은 4.19 혁명(74.1%), 5.18 광주항쟁(88.0%), 88서울올림픽(69.4%), 2002 월드컵(67.6%), 세월호 사건(72.2%), 개성공업지구 운영(93.5%)에 대해 팔호 안의 수치만큼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인지도는 77.5%였다. 한편, 북한주민은 남한의 쌀과 비료에 대한 대북지원에 대해서 63.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두 결과를 종합한 평균 인지도는 70.3%가 된다. 이를 상대점수(5점)로 환산하면 남한의 경우 3.5점, 북한의 경우 3.5점으로 총 7.0점이 된다. 남한주민들의 북한인지도는 2008년 2.9점, 2009년 2.6점, 2010년 3.0점, 2011년 3.2점, 2012년 3.0점, 2013년 3.0점, 2014년 3.1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상승하였으며, 북한주민들의 남한인지도는 2008년, 2010년 3.4점, 2009년, 2011년, 2012년 3.5점, 2013년 3.2점, 2014년 3.6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하락하였다. 종합인지는 2008년 6.3점, 2009년 6.1점, 2010년 6.4점, 2011년 6.7점, 2012년 6.5점, 2013년 6.2점, 2014년 6.7으로 전년에 비해 0.3점 상승한 점수이다.

〈표 3-15〉 상대방 인지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꽃제비, 아리랑축전), (북한-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58.6	2.9
	북한주민		68.7	3.4
2009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북한-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52.8	2.6
	북한주민		70.8	3.5
2010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북한-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60.6	3.0
	북한주민		68.1	3.4
2011*	남한주민	2010년과 상동	63.2	3.2
	북한주민		70.1	3.5
2012	남한주민	2010년과 상동	60.7	3.0
	북한주민		70.7	3.5
2013	남한주민	2010년과 상동	59.8	3.0
	북한주민		63.5	3.2
2014*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북한-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세월호 사건, 개성공업지구 운영 /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62.5	3.1
	북한주민		73.2	3.6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5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북한-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세월호 사건, 개성공업지구 운영 /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69.6	3.5
	북한주민		70.3	3.5

* 2011년 북한주민 점수 수정

* 2014년 북한주민 질문 수정

2) 종합

- 정치영역 의식통합지수는 남한과 북한을 각각 50%씩 배정하여 총 80점 만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5개의 측정지표에 대한 남북한의 상대점수를 합하여 최종적으로 남북한 의식통합을 산출하였다. 2015년도 정치영역 의식통합지수는 80.0점 만점에 36.0점이다.
- 2015년의 정치영역 의식통합지수는 전년인 2014년과 비교하면 1.3점 하락, 2013년에 비해 0.6점 하락, 2012년에 비해 1.8점 하락, 2011년에 비해 0.1점 상승, 2010년에 비해 0.3점 하락, 2009년에 비해 3.8점 하락, 2008년에 비해 4.9점 하락하였다. 항목별로 보면, 남북한 간 정치제도의 동질성,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간 정치제도의 동질성은 2014년 1.2에서 1.4로 0.2점 높아졌고,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는 2014년 6.7에서 7.0으로 0.3점 높아졌다.
- 반면, 통일의 필요성 항목에서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의식 점수가 각각 0.5점, 0.4점이 하락하였다.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의 항목

에서 남한주민의 의식 점수가 0.5점 상승, 북한주민의 의식 점수가 0.9점 하락하였다.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의 항목에서 남한주민의 의식 점수가 0.3점 하락, 북한주민의 의식 점수는 0.2점 하락하였다.

■ 남북한 주민의 정치영역 통합의식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하락하다 2012년에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3년에는 다시 하락하였다. 2014년에 다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5년에는 다시 하락하였다. 이명박 정부 기간 남북관계 단절의 지속과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군사적 대결의 강화는 의식통합지수에도 반영되었고, 특히,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신뢰도 항목은 2008~2011년 동안 변화 폭이 컸다. 2015년 남북한의 정치통합의식이 전년 대비 1.3점 하락한 것은 북한주민의 의식 점수가 하락한 결과이다. 남한주민의 통합의식은 2014년에 비해 0.1점 소폭 하락하여 14.9점을 보인 반면, 북한주민의 통합의식 점수는 1.2점 하락하여 21.1점을 기록하였다.

■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신뢰도 항목은 2008년 11.7점에서 2009년 9.5점, 2010년 6.9점, 2011년 6.7점으로 하락하다가 2012년 소폭 상승한 8.5점을 기록한 뒤 2013년에 7.0점으로 하락, 2014년은 7.7점으로 상승하였다. 2015년은 다시 7.3점으로 하락하였다.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신뢰도 항목에 대한 북한주민의 의식 점수가 2013년 3.6점으로 2008~2013년 기간 중 최저점을 보였으나, 2014년에 다시 상승하여 5.2점이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0.9점 하락하여 4.3점을 기록하였다.

■ 가장 많이 하락한 항목은 ‘통일의 필요성’(-0.9점)이다. 전체 하락분(-1.3점) 중 69.2%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상승한 항목은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0.3점)이다. 전체 상승분(+0.5점) 중 60.0%를 차지했다.

- 세부적으로, 남한주민의 의식통합지수는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에서 각각 0.5점, 0.4점 상승하였고,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에서 총 1.0점 하락하였다. 북한주민의 의식통합지수는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에서 0.4점 상승하였고, 통일의 필요성,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에서 각각 0.4점, 0.9점 0.2점, 0.1점 하락을 보였다.

〈표 3-16〉 정치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연도	항목	남한 점수/만점	북한 점수/만점	합계
2008	통일의 필요성	5.2/10	9.5/10	14.7/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5/10	0.3/10	0.8/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4.8/10	6.9/10	11.7/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4.0/5	3.4/5	7.4/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2.9/5	3.4/5	6.3/10
	총점	17.4/40	23.5/40	40.9/80
2009	통일의 필요성	5.6/10	9.7/10	15.3/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4/10	0.3/10	0.7/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7/10	5.8/10	9.5/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4/ 5	3.8/ 5	7.2/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2.6/ 5	3.5/ 5	6.1/10
	총점	15.7/40	23.1/40	39.8/80
2010	통일의 필요성	5.9/10	9.6/10	15.5/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9/10	0.4/10	1.3/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2/10	3.7/10	6.9/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2/ 5	3.0/ 5	6.2/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0/ 5	3.4/ 5	6.4/10
	총점	16.2/40	20.1/40	36.3/80

연도	항목	남한 점수/만점	북한 점수/만점	합계
2011	통일의 필요성	5.4/10	9.4/10	14.8/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6/10	0.4/10	1/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2.2/10	4.5/10	6.7/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2/ 5	3.5/ 5	6.7/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2/ 5	3.5/ 5	6.7/10
	총점	14.6/40	21.3/40	35.9/80
2012	통일의 필요성	5.7/10	9.3/10	15.0/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7/10	0.2/10	0.9/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1/10	5.4/10	8.5/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1/ 5	3.8/ 5	6.9/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0/ 5	3.5/ 5	6.5/10
	총점	15.6/40	22.2/40	37.8/80
2013	통일의 필요성	5.5/10	10/10	15.5/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9/10	0.9/10	1.8/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4/10	3.6/10	7.0/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2.8/5	3.3/5	6.1/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0/5	3.2/5	6.2/10
	총점	15.6/40	21.0/40	36.6/80
2014	통일의 필요성	5.6/10	9.8/10	15.4/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9/10	0.3/10	1.2/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2.5/10	5.2/10	7.7/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2.9/5	3.4/5	6.3/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1/5	3.6/5	6.7/10
	총점	15.0/40	22.3/40	37.3/80
2015	통일의 필요성	5.1/10	9.4/10	14.5/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7/10	0.7/10	1.4/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0/10	4.3/10	7.3/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2.6/5	3.2/5	5.8/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5/5	3.5/5	7.0/10
	총점	14.9/40	21.1/40	36.0/80

다. 사회문화

-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의 측정 지표는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 수준,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 5가지이다.
- 사회문화영역의 의식통합지수를 구성하는 변인과 배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각 변인에 해당하는 최종점수는 남북한 주민 각각의 질문 응답 비율을 다시 각 변인에 해당하는 배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점수로 환산하여 산출된다.

〈표 3-17〉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통합영역	변인	배점(남한)	배점(북한)
사회문화 의식의 통합 (총 90점)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5	5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10	1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10	1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0	1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0	10
	소계	45	45

1) 지표별 응답률과 상대점수

가)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상대방의 사회문화를 얼마나 접촉한 경험이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남한 주민은 23.2%, 북한주민은 87.0%가 상대방의 사회문화를 접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북 각각의 응답률을 상대점수(5.0점 만점)로 전환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1.2점, 북한주민의 경우 4.4점이 부여된다.

■ 남북한 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장기간 위축되면서 남한 주민의 경우 북한의 사회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DMZ 지뢰 폭발 사고 등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 도발로 인해 대북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사회문화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는 북한사회 내에 남한문화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남한문화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남한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8〉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남한[북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응답: “접해봄” 또는 “있다”선택	31.2	1.6
	북한주민		64.7	3.3
2009	남한주민	"	46.2	2.3
	북한주민		56.5	2.8
2010	남한주민	"	37.4	1.9
	북한주민		77.3	3.9
2011	남한주민	"	31.5	1.6
	북한주민		90.0	4.5
2012	남한주민	"	32.3	1.6
	북한주민		88.0	4.4
2013	남한주민	"	27.3	1.4
	북한주민		85.9	4.3
2014	남한주민	"	31.5	1.6
	북한주민		87.7	4.4
2015	남한주민	"	23.2	1.2
	북한주민		87.0	4.4

나)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

-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상대방(또는 상대방의 사회문화)을 접촉하였을 때 얼마나 친근감을 느꼈는가를 질문하였다. 2009년 조사까지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각각에게 질문한 내용이 상이했던 점을 보완하여 2010년 조사 때부터는 질문 문항의 표현을 아래의 표와 같이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 2015년의 경우 남한 주민은 45.9%, 북한주민은 89.8%가 상대방에 대해 친근감을 느꼈다고 응답해, 남북한 주민 간의 큰 격차를 보였다. 남북 각각의 응답률을 상대점수(10점 만점)로 전환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4.6점, 북한주민의 경우 9.0점이 부여된다.
- 남한주민의 탈북자에 대한 수용의식은 2012년에 4.0점에서 2013년 4.2점, 그리고 2014년 4.3점, 2015년 4.6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북한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출신 주민에 대한 수용의식은 2012년 8.9점, 2013년 8.0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9.0점으로 다소 상승한 뒤, 2015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 결과, 2015년 남북한 상호 수용의식의 격차는 4.4포인트로 나타났다.
-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가 2016년 3월 기준으로 29,137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에 대한 남한주민의 수용의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호전적 행위가 계속되고 대립적인 남북관계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상황적 요인이 탈북자에 대한 인식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남한의 사회문화에 대한 북한주민의 접촉 경험이 증가한 만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출신 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 역시 증가하였다.

〈표 3-19〉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응답: “친근하게 느껴진다” 선택	36.2	3.6
	북한주민	질문: 귀하는 남한[북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응답: “친숙했음” 선택	72.1	7.2
2009	남한주민	”	36.3	3.6
	북한주민	”	52.1	5.2
2010	남한주민	”	42.5	4.3
	북한주민 (변경 후)	질문: 귀하는 남한출신 주민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응답: “친근하게 느껴진다” 선택	91.9	9.2
2011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40.9	4.1
	북한주민	2010년과 상동	90.0	9.0
2012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39.5	4.0
	북한주민	2010년과 상동	89.1	8.9
2013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42.0	4.2
	북한주민	2010년과 상동	79.9	8.0
2014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42.5	4.3
	북한주민	2010년과 상동	90.2	9.0
2015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45.9	4.6
	북한주민	2010년과 상동	89.8	9.0

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 남북한 주민에게 각각 상대방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남한 주민은 16.5%, 북한주민은 22.2%가 상대방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하였다.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대감 해소’ 정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인 점수는 적대감의 역응답률을 적용한다. 따라서 남한주민의 경우 역응답률 83.5%에 대한 상대점수는 8.4점, 북한주민의 역응답률 77.8%에 대한 상대점수는 7.8점이 부여된다.
- 2009년에 발생한 천안함·연평도 사건,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등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과 남북관계의 대립이 장기화되고, 2013년 12월 장성택의 공개처형 이후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가 계속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도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에는 휴전선에서 북한이 설치한 지뢰가 폭발함으로써 우리 병사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여론이 크게 악화되었다.
-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한주민의 경우 적대감 해소의 수준은 전년대비 0.2점이 하락한 8.4점인 반면, 북한주민의 경우는 전년대비 0.6점 하락한 7.8점을 나타냈다. 2015년 불안정한 남북관계에 의해 조성된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수준이 남한주민보다 북한주민 속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	역응답률 (%)	상대 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남한[북한]이 북한[남한]에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5.3	94.7	9.5
	북한주민	응답: '적대대상' 선택	20.9	79.1	7.9
2009	남한주민	"	9.0	91.0	9.1
	북한주민		11.4	88.6	8.9
2010	남한주민	"	12.0	88.0	8.8
	북한주민		15.5	84.5	8.5
2011	남한주민	"	16.8	83.2	8.3
	북한주민		15.4	84.6	8.5
2012	남한주민	"	10.9	89.1	8.9
	북한주민		12.8	87.2	8.7
2013	남한주민	"	16.4	83.6	8.4
	북한주민		20.1	79.9	8.0
2014	남한주민	"	13.9	86.1	8.6
	북한주민		15.6	84.4	8.4
2015	남한주민	"	16.5	83.5	8.4
	북한주민		22.2	77.8	7.8

라)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 남북한 간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 양식(언어, 생활풍습)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남한주민은 17.4%, 북한주민은 8.8%가 상대방의 사회문화양식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남북 각각의 응답률을 상대점수(10점 만점)로 전환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1.6점, 북한주민의 경우 0.9점이 부여된다.

- 앞서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접촉 경험에서 큰 격차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사회문화양식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는 수준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다. 하지만 북한주민에 비해 남한주민이 느끼는 동질감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 통일 과정에서 사회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남한주민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 3-21〉 남북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질문1 응답률 (%)	질문2 응답률 (%)	평균 응답률 (%)	상대 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1: 언어사용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1: “전혀 차이없음”과 “별로 차이없음” 선택	17.5	17.6	17.6	1.8
	북한주민	질문 2: 생활풍습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2: “전혀 차이없음”과 “별로 차이없음” 선택	6.6	12.4	9.5	1.0
2009	남한주민	"	7.2	11.8	9.5	1.0
	북한주민		4.6	7.3	6.0	0.6
2010	남한주민	"	10.8	13.3	12.05	1.2
	북한주민		5.8	4.8	5.3	0.5
2011	남한주민	"	9.1	11.6	10.4	1.0
	북한주민		2.3	11.6	7.0	0.7
2012	남한주민	"	11.8	14.3	13.0	1.3
	북한주민		5.3	10.5	7.9	0.8
2013	남한주민	"	14.7	14.2	14.45	1.5
	북한주민		4.7	8.1	6.4	0.6
2014	남한주민	"	16.4	16.7	16.55	1.7
	북한주민		6.6	14.7	10.65	1.1
2015	남한주민	"	4.2	27.4	15.8	1.6
	북한주민		5.6	12.0	8.8	0.9

마)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

- 2009년까지는 남한주민 의식조사와 북한주민(탈북자) 의식조사 간에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동일한 질문이 없어 그에 상응하는 각각의 질문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남한주민 의식조사의 경우에는 통일이 된 후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북한주민 의식조사의 경우에는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과 비교해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다.
- 하지만 2010년부터는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귀하는 통일이 되면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동일한 질문을 제시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남한주민 19.7%, 북한주민 87.1%가 통일 이후에 빈부의 격차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남북한 주민 간의 큰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남북 각각의 응답률을 상대점수(10점 만점)로 전환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2.0점, 북한주민의 경우 8.7점이 부여된다.
- 남한주민의 경우 통일 이후 사회평등에 대한 기대수준이 전년대비 0.6점이 상승하여 2.0점을 나타냈으며, 북한주민의 경우 역시 전년대비 0.6점이 상승한 8.7점으로 나타났다. 통일 이후 사회평등에 대한 기대수준에서 나타난 남북한 주민간의 큰 격차는 통일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해 남북한 주민의 기대 차이에 기인한다. 통일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남한주민에 비해 북한주민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표 3-22〉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크게 개선”과 “약간 개선” 선택	10.6	1.1
	북한주민	질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북쪽 주민이 남쪽 주민과 비교해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출신지역과 상관없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임” 선택	38.5	3.9
2009	남한주민	”	14.7	1.5
	북한주민	”	44.0	4.4
2010	남한주민	”	15.9	1.6
	북한주민 (변경 후)	질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크게 개선”과 “약간 개선” 선택	81.4	8.1
2011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13.1	1.3
	북한주민 (변경 후)	2010년과 상동	78.4	7.8
2012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12.3	1.2
	북한주민 (변경 후)	2010년과 상동	86.5	8.7
2013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14.8	1.5
	북한주민 (변경 후)	2010년과 상동	85.3	8.5
2014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13.6	1.4
	북한주민 (변경 후)	2010년과 상동	81.2	8.1
2015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19.7	2.0
	북한주민 (변경 후)	2010년과 상동	87.1	8.7

(2) 종합

- 2015년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는 90점 만점 중 48.6점으로 2014년 48.6점과 동일하다. 남한주민의 의식통합지수는 전년대비 0.2점이 상승한 반면에, 북한주민의 의식통합지수는 전년대비 0.2점 감소하였다.
- 2015년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남북한 주민 모두 전년대비 거의 모든 항목들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한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을 제외하면 사회문화영역의 의식통합에 영향을 미칠만한 유의미한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가 측정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8년간의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의 변동 추이는 2008년 40.9점 → 2009년 39.4점 → 2010년 47.9점 → 2011년 46.8점 → 2012년 48.5점 → 2013년 46.4점 → 2014년 48.6점 → 2015년 48.6점으로 2010년 이후로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에서 보이는 부동성(不動性)은 남북한 주민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 항목별 남북한 주민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식수준(남 1.2 vs. 북 4.4),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남 4.6 vs. 북 9.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남 2.0 vs. 북 8.7) 항목들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의식 간에 격차가 크다. 반면에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남 8.4 vs. 북 7.8)와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남 1.6 vs. 북 0.9) 항목들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의식 간에 격차가 크지 않다.

- 전반적으로 남한주민의 통합의식 수준이 북한주민의 통합의식 수준에 비해 매우 낮다. 이 결과는 정책적으로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의 해소와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해 남한 주민의 주도성을 높이고 통합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23〉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 종합

연도	항목	남한 상대점수 /배점	북한 상대점수 /배점	합계 /만점
2008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6/5	3.3/5	4.9/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3.6/10	7.2/10	10.8/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9.5/10	7.9/10	17.4/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8/10	1.0/10	2.8/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1/10	3.9/10	5.0/20
	총점	17.6/45	23.3/45	40.9/90
2009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2.3/5	2.8/5	5.1/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3.6/10	5.2/10	8.8/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9.1/10	8.9/10	18.0/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0/10	0.6/10	1.6/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5/10	4.4/10	5.9/20
	총점	17.5/45	21.9/45	39.4/90
2010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9/5	3.9/5	5.8/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3/10	9.1/10	13.4/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8/10	8.5/10	17.3/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2/10	0.5/10	1.6/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6/10	8.1/10	9.7/20
	총점	17.8/45	30.1/45	47.9/90

연도	항목	남한 상대점수 /배점	북한 상대점수 /배점	합계 /만점
2011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6/5	4.5/5	6.1/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1/10	9.0/10	13.1/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3/10	8.5/10	16.8/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0/10	0.7/10	1.7/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3/10	7.8/10	9.1/20
	총점	16.3/45	30.5/45	46.8/90
2012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6/5	4.4/5	6.0/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0/10	8.9/10	12.9/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9/10	8.7/10	17.6/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3/10	0.8/10	2.1/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2/10	8.7/10	9.9/20
	총점	17.0/45	31.5/45	48.5/90
2013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4/5	4.3/5	5.7/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2/10	8.0/10	12.2/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4/10	8.0/10	16.4/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5/10	0.6/10	2.1/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5/10	8.5/10	10.0/20
	총점	17.0/45	29.4/45	46.4/90
2014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6/5	4.4/5	6.0/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3/10	9.0/10	13.3/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6/10	8.4/10	17.0/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7/10	1.1/10	2.8/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4/10	8.1/10	9.5/20
	총점	17.6/45	31/45	48.6/90
2015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2/5	4.4/5	5.6/10
	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6/10	9.0/10	13.6/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4/10	7.8/10	16.2/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6/10	0.9/10	2.5/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2.0/10	8.7/10	10.7/20
	총점	17.8/45	30.8/45	48.6/90

3. 종합

- 2015년 남북의식통합지수는 경제영역 42.6점, 정치영역 36.0점, 사회문화영역 48.6점을 합한 결과 총점 127.2점이다. 이 수치는 2014년의 129.3점에서 2.1점이 하락한 것이다. 이 변화는 사회문화영역이 전년과 같은 점수를 유지한 반면에, 전년대비 경제영역 -0.8점, 정치영역 -1.3점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 남북의식통합지수의 감소는 DMZ 지뢰 폭발 사고와 대북방송 재개 등으로 인해 고조된 정치군사적 긴장과 갈등의 파급력이 남북회담의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통일편익 및 남북경협에 대한 긍정적 여론 등으로 형성된 유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압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연도별 의식통합지수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123.7점 → 2009년 120.5점 → 2010년 124.8점 → 2011년 124.2점 → 2012년 128.8점 → 2013년 124.0점 → 2014년 129.3점 → 2015년 127.2점으로 격년을 주기로 지수의 등락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동 패턴은 한편으로 남북한 주민의 의식통합이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반응하여 등락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20점대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측면도 동시에 갖고 있다.
- 영역별로 연도별 추이를 요약해 보면, 먼저 경제영역 의식통합의 경우 2008년 41.9점 → 2009년 41.3점 → 2010년 40.6점 → 2011년 41.5점 → 2012년 42.5점 → 2013년 40.8점 → 2014년 43.4점 → 2015년 42.6점으로 나타났다. 남한주민의 경우 통일편익에 대한 기대감과 남북경협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인해 의식통합 점수의 상승을

이끌었으나, 북한주민의 경우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에서 긍정적 응답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 다음으로, 정치영역 의식통합의 경우 2008년 40.9점 → 2009년 39.8점 → 2010년 36.3점 → 2011년 35.9점 → 2012년 37.8점 → 2013년 36.8점 → 2014년 37.3점 → 2015년 36.0점으로 변화했다. 세 영역 중에서 정치 영역의 감소폭이 가장 크다. 또한 세 영역 중에서 정치영역의 의식통합 수준이 가장 낮다.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 약화가 전체 정치영역 의식통합의 감소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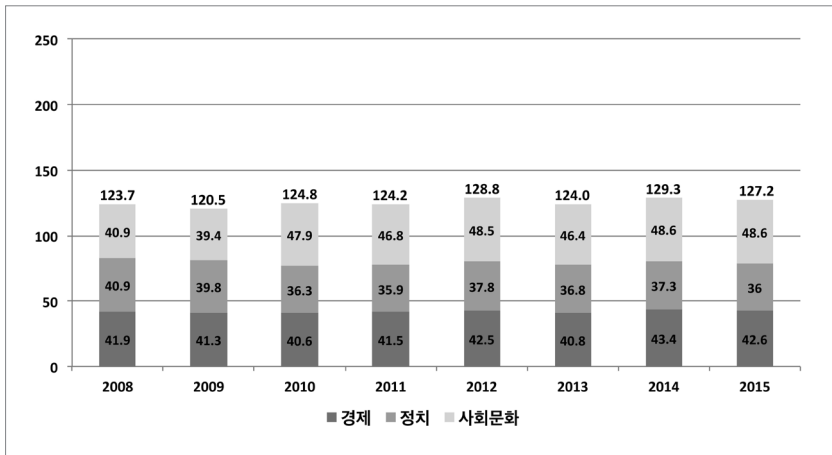
■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의 경우 역시 2008년 40.9점 → 2009년 39.4점 → 2010년 47.9점 → 2011년 46.8점 → 2012년 48.5점 → 2013년 46.4점 → 2014년 48.6점 → 2015년 48.6점으로 2010년 이후로 큰 변동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문화영역의 의식통합에서 나타나는 부동성(不動性)은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되고 의식통합 수준을 끌어올릴 만한 유의미한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표 3-24〉 남북의식통합지수 연도별 변화

영역		변인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제 영역 (80)	남 한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5	7.7	7.8	7.9	7.8	7.0	8.2	8.5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5	5.9	6.0	5.6	5.9	5.4	5.5	5.8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1.5	1.9	2.5	2.2	2.4	2.4	3.3	3.3
	북 한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8.2	7.9	6.3	6.2	7.0	7.0	7.9	7.3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12.0	10.9	10.1	10.8	10.8	10.2	10.9	10.4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2	7.0	7.9	8.8	8.6	8.5	7.6	7.3
	소 계		41.9	41.3	40.6	41.5	42.5	40.8	43.4	42.6
정치 영역 (80)	남 북 한 공 통	통일의 필요성	14.7	15.3	15.5	14.8	15.0	15.5	15.4	14.5
		정치제도 동질성	0.8	0.7	1.3	1.0	0.9	1.8	1.2	1.4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11.7	9.5	6.9	6.7	8.5	7.0	7.7	7.3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7.4	8.2	6.2	6.7	6.9	6.1	6.3	5.8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6.3	6.1	6.4	6.2	6.5	6.4	6.7	7.0
	소 계		40.9	39.8	36.3	35.9	37.8	36.8	37.3	36.0

영역	변인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회 문화 영역 (90)	남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도	4.9	5.1	5.8	6.1	6.0	5.7	6.0	5.6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	10.8	8.8	8.8	13.1	12.9	12.2	13.3	13.6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17.4	18.0	17.3	16.8	17.6	16.4	17.0	16.2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2.8	1.6	1.6	1.7	2.1	2.1	2.8	2.5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5.0	5.9	9.7	9.1	9.9	10.0	9.5	10.7
	공 동								
	소 계	40.9	39.4	47.9	46.8	48.5	46.4	48.6	48.6
합 계	만점 250점	123.7	120.5	124.8	124.2	128.8	124.0	129.3	127.2

〈그림 3-1〉 의식통합지수 2008~2015년 변화 추이



남북통합지수 : 2008~2015

- 2015년 남북통합지수는 1,000점 만점에 203.3점이다. 남북한의 통합 수준을 백분율로 표시하면 20.3%이다.
- 2015년 남북통합지수는 2014년 206.4점에 비해 3.1점이 하락하여 2014년의 반등을 상승세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통합률은 20.6%에서 20.3%로 0.3% 하락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구조통합지수와 의식통합지수 모두 하락한 결과이다.
- 제도적 통합지수는 270점 만점 중 28.3점으로 전년대비 2.2점 하락했으며, 관계적 통합지수 역시 480점 만점 중 47.8점으로 전년대비 1.2점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구조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1.0점이 하락했다. 또한 의식통합지수는 250점 만점 중 127.2점으로 전년 대비 2.1점 하락하였다.
- 영역별로는 경제, 정치, 사회문화 영역 모두에서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특히 사회문화영역에서의 하락폭이 컸다.
- 경제영역 통합지수는 69.5점으로 전년대비 0.2점 하락하였고, 정치영역 통합지수는 49.3점으로 전년대비 1.2점 하락하였으며, 사회문화영역 통합지수는 84.5점으로 전년대비 3.7점 하락하였다.
- 관계통합지수를 보면, 47.8점으로 전년대비 1.2점이 상승하였다. 경제영역에서는 전년 대비 1.3점이 올랐다. 정치영역 역시 전년대비 0.5점이

상승했다. 반면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전년 대비 0.6점 하락하였다.

- 제도통합지수는 28.3점으로 전년대비 2.2점 하락했다. 경제영역은 0.7점 하락하였고 정치영역은 0.4점 하락하였고 사회문화영역은 1.1점 하락하여 모든 영역에서 하락하였다.
- 의식통합지수는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경제영역과 정치영역은 전년대비 각각 0.8점, 1.3점이 하락하였고, 사회문화영역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의식통합지수의 감소는 DMZ 지뢰 폭발 사고와 대북 방송 재개 등으로 인해 고조된 정치군사적 긴장과 갈등의 파급력이 남북회담의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통일편의 및 남북경협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등으로 형성된 유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압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1〉 2015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영역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6.8/90	7.6	6.0/90	6.6	15.5/90	17.2	28.3/270	11.3
관계적 통합	20.1/160	11.8	7.3/160	4.6	20.4/160	12.8	47.8/480	10.0
의식의 통합	42.6/80	53.3	36.0/80	45.0	48.6/90	54.0	127.2/250	50.9
합계	69.5/330	21.1	49.3/330	14.9	84.5/340	24.8	203.3/1000	20.3

〈표 4-2〉 2014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영역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7.5/90	8.3	6.4/90	7.1	16.6/90	18.4	30.5/270	11.3
관계적 통합	18.7/160	11.8	6.8/160	4.3	21.0/160	13.1	46.6/480	9.7
의식의 통합	43.4/80	54.3	37.3/80	46.6	48.6/90	54.0	129.3/250	51.7
합계	69.6/330	21.1	50.5/330	15.3	86.2/340	25.4	206.3/1000	20.6

〈표 4-3〉 2013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영역	경제		정치		사회 · 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7.2/90	8.0	6.4/90	7.1	14.8/90	16.4	28.4/270	10.5
관계적 통합	14.9/160	9.3	3.6/160	2.3	19.9/160	12.4	38.5/480	8.0
의식의 통합	40.8/80	51.0	36.8/80	46.0	46.4/90	51.6	124/250	49.6
합계	62.9/330	19.1	46.6/330	14.1	81.1/340	23.9	190.8/1000	19.1

〈표 4-4〉 2012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영역	경제		정치		사회 · 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6.6/90	7.3	6.5/90	7.2	14.0/90	15.6	27.1/270	10.0
관계적 통합	18.1/160	11.4	4.9/160	3.1	18.6/160	11.6	41.7/480	8.7
의식의 통합	42.5/80	53.1	37.8/80	47.3	48.5/90	36.2	128.8/250	51.5
합계	67.2/330	20.4	49.2/330	14.9	81.1/340	23.8	197.5/1000	19.8

〈표 4-5〉 2011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영역	경제		정치		사회 · 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7.7/90	8.6	6.8/90	7.6	14.0/90	15.6	28.5/270	10.6
관계적 통합	17.4/160	10.9	6.4/160	4.0	19.1/160	11.9	42.9/480	8.9
의식의 통합	41.5/80	51.9	35.9/80	44.3	46.8/90	52.0	124.2/250	49.7
합계	66.6/330	20.2	49.1/330	14.7	79.9/340	23.5	195.6/1000	19.5

〈표 4-6〉 2010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영역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7.7/90	8.6	6.8/90	7.6	13.9/90	15.4	28.4/270	10.5
관계적 통합	20.7/160	12.9	4.8/160	3.0	22.7/160	14.2	48.2/480	10.0
의식의 통합	40.6/80	50.8	36.3/80	45.4	47.9/90	53.2	124.8/250	49.9
합계	69/330	20.9	47.9/330	14.5	84.5/340	24.9	201.4/1000	20.1

〈표 4-7〉 2009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영역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8.7/90	9.7	6.9/90	7.7	14.2/90	15.8	29.8/270	11.0
관계적 통합	21.4/160	13.4	5.4/160	3.4	22.8/160	14.3	49.6/480	10.3
의식의 통합	41.3/80	51.6	39.8/80	49.8	39.4/90	43.8	120.5/250	48.2
합계	71.4/330	21.6	52.1/330	15.8	76.4/340	22.5	199.9/1000	20.0

〈표 4-8〉 2008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영역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8.3/90	9.2	6.3/90	7.0	12.6/90	14.0	27.2/270	10.1
관계적 통합	22.7/160	14.2	10.1/160	6.3	30.5/160	18.6	63.3/480	13.2
의식의 통합	41.9/80	52.4	40.9/80	51.1	40.9/90	45.4	123.7/250	49.5
합계	72.9/330	22.1	57.3/330	17.4	84/340	24.7	214.2/1000	21.4

- 2008~2015년의 남북통합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구조통합지수와 의식통합지수를 합한 종합지수는 2014년 전년에 비해 15.6점이나 상승하여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으나 2015년 3.1점 하락함으로써

반등을 상승세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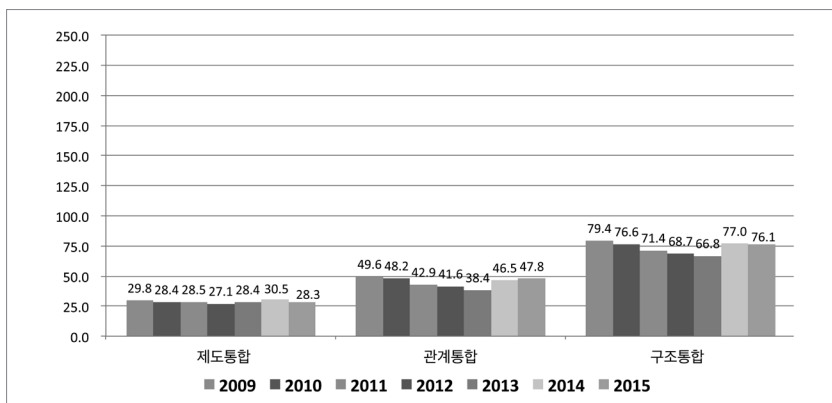
- 8년간 종합지수는 2008년 214.2점 → 2009년 199.9점 → 2010년 201.4점 → 2011년 195.6점 → 2012년 197.6점 → 2013년 190.8점 → 2014년 206.4점 → 2015년 203.3점으로 나타났다.
- 제도적 통합과 관계적 통합으로 구성되는 구조통합지수는 2008년 90.5점 → 2009년 79.4점 → 2010년 76.6점 → 2011년 71.4점 → 2012년 68.8점 → 2013년 66.9점 → 2014년 77.1점 → 2015년 76.1로 2008년 이후 6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는 10.2점 상승하여 반등에 성공했으나 2015년 다시 1.0점 하락하였다. 관계적 통합수준은 2008년 이후 6년 연속 감소세(2008년 63.3점 → 2009년 49.6점 → 2010년 48.2점 → 2011년 42.9점 → 2012년 41.7점 → 2013년 38.5점)를 보이다가 2014년에는 46.6점으로 8.1점 상승하였고 2015년에도 47.8점으로 1.2점 상승하였다. 제도적 통합수준은 2015년 28.3으로 전년대비 2.2점 하락하였다.
- 8년간의 의식통합지수는 2008년 123.7점 → 2009년 120.5점 → 2010년 124.8점 → 2011년 123.7점 → 2012년 128.8점 → 2013년 124.0점 → 2014년 129.3점 → 2015년 127.2점으로 격년 주기로 지수의 등락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동 패턴은 한편으로는 남북한 주민의 의식통합이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반응하여 등락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20점대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측면도 동시에 갖고 있다.

■ 2008~2015년의 남북한의 통합률을 보면 2015년 지난해에 회복된 20.0% 수준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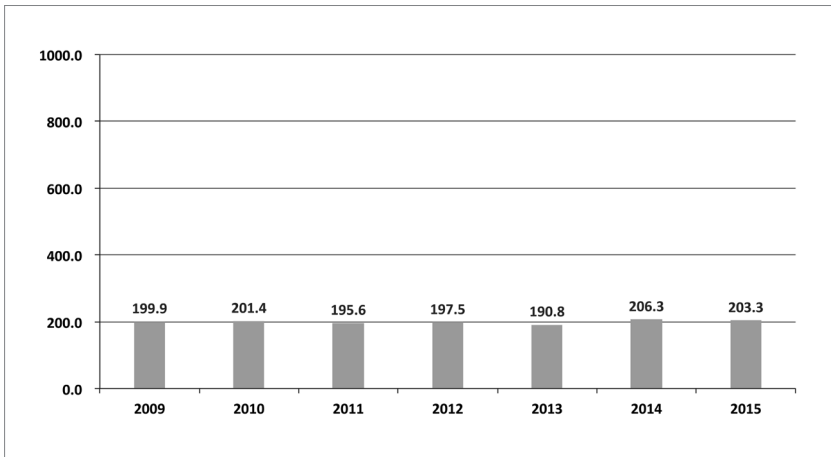
- 7년간 남북 통합률은 2008년 21.4% → 2009년 20.0% → 2010년 20.1% → 2011년 19.5% → 2012년 19.8% → 2013년 19.1% → 2014년 20.6% → 2015년 20.3%를 나타냈다.

- 2015년 영역별 통합률의 변동을 살펴보면, 경제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정치와 사회영역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경제 영역의 경우 2008년 22.1% → 2009년 21.6% → 2010년 20.9% → 2011년 20.2% → 2012년 20.4% → 2013년 19.1% → 2014년 21.1% → 2015년 21.1%로 2013년 처음으로 20.0% 미만으로 통합률이 2014년 다시 20.0%대를 회복한 후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영역의 경우 2008년 17.4% → 2009년 15.8% → 2010년 14.5% → 2011년 14.7% → 2012년 14.9% → 2013년 14.1% → 2014년 15.3% → 2015년 14.9%로 나타나 다시 14.0%대로 하락했다. 사회문화영역의 경우 2008년 24.7% → 2009년 22.5% → 2010년 24.9% → 2011년 23.5% → 2012년 23.8% → 2013년 23.9% → 2014년 25.4% → 2015년 24.8%로 나타나 2011년 이후 상승세가 2015년 들어 하락으로 돌아선 양상이다.
-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역별 통합률은 사회문화 > 경제 > 정치 영역 순서로 높게 나타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구조적 통합(제도+관계 통합)의 경우 사회문화(30.0%) > 경제(19.4%) > 정치(11.2%) 순서로 통합률의 차이를 나타내며, 의식통합의 경우 사회문화(54.0%) > 경제(53.3%) > 정치(45.0%)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4-1〉 2009~2015년 구조통합지수(제도통합지수+관계통합지수) 비교



〈그림 4-2〉 2009~2015년 종합지수(구조통합지수+의식통합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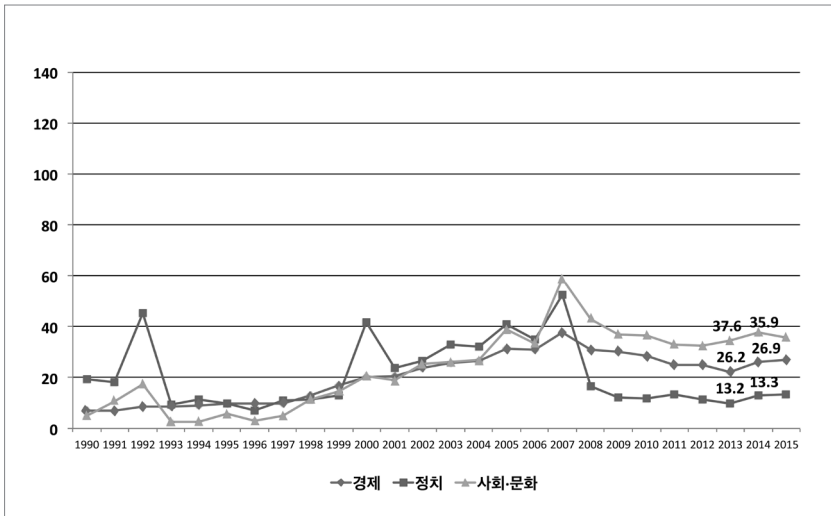


- 남북한 통합의 단계를 구조통합지수를 기준으로 평가해보면, 정치영역의 통합단계는 1단계로 가장 낮고, 경제영역과 사회문화영역은 모두 2단계로 2009년 이후 7년 연속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 경제영역의 경우, 2008년 3단계 → 2009년 2단계 → 2010년 2단계 → 2011년 2단계 → 2012년 2단계 → 2013년 2단계 → 2014년 2단계 → 2015년 2단계로 2009년 이후 7년 연속 2단계에 머물고 있다.
- 정치영역의 경우, 2008년 1단계 → 2009년 1단계 → 2010년 1단계 → 2011년 1단계 → 2012년 1단계 → 2013년 0단계 → 2014년 1단계 → 2015년 1단계로 2013년에 처음으로 0단계로 낮아졌다가 1년 만인 2014년 회복한 1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사회문화영역의 경우 2008년 3단계 → 2009년 2단계 → 2010년 2단계 → 2011년 2단계 → 2012년 2단계 → 2013년 2단계 → 2014년 2단계 → 2015년 2단계로 2009년 이후 7년 연속 2단계가 지속되고 있다.

〈표 4-9〉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시계열적 추이와 단계 변화

연도	경제(250)				정치(250)				사회·문화(250)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1989	1.0	6.62	7.6	0	1.0	8.1	9.1	0	1.1	4.8	5.9	0
1990	1.0	5.96	6.9	0	1.0	18.3	19.3	1	1.1	4.0	5.1	0
1991	1.0	5.9	6.9	0	1.0	17.0	18.0	1	1.1	9.3	10.4	0
1992	2.0	6.4	8.4	0	2.0	43.3	45.3	3	1.3	16.0	17.3	1
1993	2.0	6.5	8.5	0	2.5	6.9	9.4	0	1.5	1.0	2.5	0
1994	2.0	6.9	8.9	0	2.6	8.7	11.3	1	1.6	1.0	2.6	0
1995	2.0	7.8	9.8	0	3.1	6.6	9.7	0	1.9	4.0	5.9	0
1996	2.0	7.7	9.8	0	3.2	3.9	7.1	0	2.2	1.0	3.2	0
1997	2.0	7.8	9.8	0	3.3	7.8	11.1	1	3.2	1.8	5.0	0
1998	5.0	8.0	13.0	1	3.8	7.6	11.4	1	6.9	4.6	11.5	1
1999	5.0	12.0	17.0	1	4.3	8.5	12.8	1	7.0	7.4	14.4	1
2000	5.0	15.3	20.3	1	4.4	37.2	41.6	3	7.1	13.3	20.4	1
2001	5.0	15.5	20.4	1	4.5	19.1	23.6	2	7.2	11.6	18.8	1
2002	5.5	18.4	23.8	2	4.6	21.9	26.5	2	7.2	18.3	25.5	2
2003	5.5	20.2	25.7	2	4.7	28.3	33.0	2	7.4	18.7	26.1	2
2004	6.0	20.5	26.5	2	6.0	26.2	32.2	2	7.5	19.5	27.0	2
2005	6.0	25.3	31.3	3	6.1	34.9	41.0	3	8.4	30.4	38.8	2
2006	6.5	24.6	31.0	3	6.2	28.6	34.8	2	9.2	24.3	33.5	2
2007	8.3	29.5	37.8	3	6.3	46.0	52.3	3	11.7	47.3	59.0	3
2008	8.3	22.7	31.1	3	6.3	10.1	16.4	1	12.6	30.5	43.1	3
2009	8.7	21.4	30.1	2	6.9	5.4	12.3	1	14.2	22.8	37.0	2
2010	7.7	20.7	28.4	2	6.8	4.8	11.6	1	13.9	22.7	36.6	2
2011	7.7	17.4	25.1	2	6.8	6.4	13.2	1	14.0	19.1	33.1	2
2012	6.6	18.2	24.8	2	6.5	4.9	11.4	1	14.0	18.6	32.6	2
2013	7.2	15.0	22.2	2	6.4	3.6	10.0	0	14.8	19.9	34.7	2
2014	7.5	18.7	26.2	2	6.4	6.8	13.2	1	16.6	21.0	37.6	2
2015	6.8	20.1	26.9	2	6.0	7.3	13.3	1	15.5	20.4	35.9	2

〈그림 4-3〉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27

2016 남북통합지수

발행일	2016.12.20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정근식
저 자	정근식 · 김병연 · 김병로 · 정은미 · 장용석 · 이종민 · 김경민 · 안소연
등 록	119-82-67975(2006.7.7)
주 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전 화	02-880-4052~4
팩 스	02-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디자인	희망커뮤니케이션즈 (02-2268-1968)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2016 남북통합지수

저자 : 정근식 · 김병연 · 김병로 · 정은미 · 장용석 · 이종민 · 김경민 · 안소연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p. : cm.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 27)

ISBN 979-11-955093-6-2 93340 : 비매품

남북 통일 [南北統一]

340.911-KDC6

320.9519-DDC23 CIP2016031420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